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끄는 나라

대한민국 10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다

# 대한민국 10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다

The Republic of Korea Greets its 100<sup>th</sup> year,  
Prepares for its Future Century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 결과집 (2019.11.7~8)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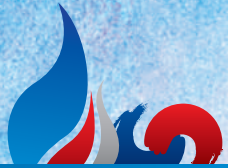
# 대한민국 10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다

The Republic of Korea Greets its 100<sup>th</sup> year,  
Prepares for its Future Century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 결과집 (2019.11.7~8)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1일차 프로그램 (11월 7일, 목요일)

### 주제 1 : 갈등과 분단에서 평화와 상생으로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10:00~10:30	기조연설	동북아·외교
10:40~12:10	Session 1	한국사의 과거와 미래 3·1운동 후 100년의 역사, 촛불항쟁 후 100년의 역사
12:10~13:40	오찬	
13:40~15:10	Session 2	한반도·대외관계 3·1운동 100주년: 비폭력 반제국주의 정신을 이어 평화의 한반도 미래 100년으로
15:30~17:00	Session 3	정치·민주공화 3·1운동의 화합정신으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민주공화 미래 100년 조망
17:00~21:00	폐회 및 공식 리셉션·만찬	

## 2일차 프로그램 (11월 8일, 금요일)

### 주제 2 : 외향적 성장과 양극화에서 혁신과 포용으로

08:30~09:10	등록	
09:10~10:40	Session 4	경제·미래혁신 대한독립선언과 대동평화 정신 100주년: 광복,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혁신의 리더로
11:00~12:30	Session 5	사회 100년의 인구변천과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과제
12:30~14:00	폐회 및 오찬	



## Day 1 (Thursday, November 7<sup>th</sup>)

### Main Topic I : From Conflict and Division to Peace and Coexistence

09:00-09:30	Registration	
09:30-10:00	Opening Ceremony	
10:00-10:30	Keynote Speech	Northeast Asia & Diplomacy
10:40-12:10	Session 1	Korean History: Past & Future Centennial History after the March 1 <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entennial History after the Candlelight Movement
12:10-13:40	Luncheon	
13:40-15:10	Session 2	Korean Peninsula & its External Relations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 <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ontinuing the Non-violent Anti-Imperialist Spirit, Towards Future Century of a Peaceful Korean Peninsula
15:30-17:00	Session 3	Politics & Democratic Republic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 <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17:00-21:00	Closing & Reception·Dinner	

## Day 2 (Friday, November 8<sup>th</sup>)

### Main Topic II : From External Growth and Polarization to Innovation and Inclusiveness

08:30-09:10	Registration	
09:10-10:40	Session 4	Economy & Future Innovation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its Spirit of the Grand Union for Peace (大同平和): Korea as the Global Economic Innovation Leader of the Next Century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11:00-12:30	Session 5	Society A Century of Population Change and Future-Oriented Challenges in Korean Society
12:30-14:00	Closing & Luncheon	

목차 / CONTENTS

개회식_Opening Ceremony .....	1
국제학술포럼 개회사_Opening Remarks .....	3
대통령 축전_Congratulatory Message .....	12
축사_Congratulatory Remarks .....	16
기조연설_Keynote Speech .....	27
❖ 향후 100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실현을 향해 / 문정인 .....	29
Next 100 Years: Toward a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MOON Chung-in .....	44
Session 1. 한국사의 과거와 미래_Korean History: Past & Future .....	67
3·1운동 후 100년의 역사, 촛불항쟁 후 100년의 역사 Centennial History after the March 1 <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entennial History after the Candlelight Movement	
발표   Presentation	
❖ '자기 결정'의 시대 / 우정은 .....	71
A Century of "Self-Determination" / Meredith Jung-En WOO .....	73
토론   Discussion	
❖ 100년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 박태균 .....	91
Next Centennial Vision of Korea Seen Through the Past 100 Year History / PARK Tae Gyun .....	95
❖ 탈권위주의 시대 한국의 미디어와 촛불 민주주의 / 유영주 .....	100
On Media and Candlelight Democracy in Post-Authoritarian South Korea / RYU Youngju .....	104
❖ 100년의 항쟁 전통과 촛불의 다차원 민주주의 / 천정환 .....	108
The 100-Year Tradition of Protest and the Multidimensional Democracy of Candlelight / CHEON Jung-hwan .....	113
❖ 한국인의 지속적인 자결에 대한 의지 / 하네스 모슬러 .....	121
The Korean People's Continuous Determination to Self-Determination / Hannes B. MOSLER .....	123

**Session 2. 한반도·대외관계\_Korean Peninsula & its External Relations** ..... 129

3·1운동 100주년: 비폭력 반제국주의 정신을 이어 평화의 한반도 미래 100년으로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ontinuing the Non-violent Anti-Imperialist Spirit,  
Towards Future Century of a Peaceful Korean Peninsula

**발표 | Presentation**

❖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쟁 / 김기정 ..... 133

Korea's Struggles for Survival and Peace / KIM Ki-jung ..... 135

**토론 | Discussion**

❖ 미래 전망-대한민국 계획 / 스펜서 김 ..... 157

Future Trends, Korean Planning / Spencer KIM ..... 161

❖ '왕도'냐 '패도'냐? 지난 백 년과 새로운 백 년 / 서재정 ..... 166

The Kingly Way or the Martial Way? The Past Hundred Years  
and a New Hundred Years / SUH Jae-Jung ..... 169

❖ 국제환경변수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 정계영 ..... 173

Environment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 ZHENG Jiyong ..... 178

**Session 3. 정치·민주공화\_Politics & Democratic Republic** ..... 187

3·1운동의 화합정신으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민주공화 미래 100년 조망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발표 | Presentation**

❖ 3·1운동 정신에 의한 지역 갈등 극복과 평화와 공존을 향한 미래 100년의 전망  
/ 강원택 ..... 191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 KANG Won-Taek ..... 192

## 토론 | Discussion

- ❖ 강원택 교수 논문에 관한 논평 / 이연호 ..... 211  
Discussion for Professor KANG Won-Taek's paper / LEE Yeon Ho ..... 213
- ❖ 통일을 어렵게 하는 마음의 습관들 / 장덕진 ..... 216  
Three Habits of the Heart Challenging Reunification / CHANG Dukjin ..... 220
- ❖ 3·1운동 이후의 민족과 국가 / 에릭 모브랜드 ..... 224  
Nation and State since March 1<sup>st</sup> / Erik MOBRAND ..... 229

**Session 4. 경제·미래혁신\_Economy & Future Innovation** ..... 237  
대한독립선언과 대동평화 정신 100주년: 광복,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혁신의 리더로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its Spirit of the Grand Union for Peace (大同平和): Korea as the  
Global Economic Innovation Leader of the Next Century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 발표 | Presentation

- ❖ 광복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 리더로 / 김현철 ..... 241  
A Global Economic Leader for the Next 100 Years,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 KIM Hyun-Chul ..... 243

## 토론 | Discussion

- ❖ 제조업의 위기인가 탈공업화인가  
: 한국은 탈공업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의 비전이 필요하다 / 유철규 ..... 267  
The Crisis of Korean Manufacturing?  
: Korea Needs a New Vision for Post-industrial Economy  
/ YOO Chul-Gyue ..... 270
- ❖ 다음 100년간 대한민국의 공평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 이강국 ..... 274  
Promoting Equity and Growth in Korea for the Next 100 Years  
/ LEE Kang-Kook ..... 277
- ❖ '새로운 대한민국'부터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경제의 과제 / 이정동 ..... 281  
Challenges of the Korean Economy from 'New to the Korea'  
to 'New to the World' / LEE Jeong-Dong ..... 284



**Session 5. 사회 Society** ..... 291

100년의 인구변천과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과제  
A Century of Population Change and Future-Oriented  
Challenges in Korean Society

**발표 | Presentation**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작은 생각:  
한국사회의 인구변천과 근대성에 대한 성찰 / 박경숙 ..... 295  
A Few Thoughts on Low Birthrate, Aging Societies:  
Reflections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Modernity in Korea  
/ PARK Keong-suk ..... 297

**토론 | Discussion**

❖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과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장기적 혁신 정책의 필요성 / 박준식 ..... 303  
Population Aging and a Need for Innovative Policy Agendas of  
Next Decades / PARK Joon-Shik ..... 306

❖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도전 / 이명진 ..... 310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and its Challenge in Korea  
/ LEE Myoung-Jin ..... 313

❖ 젠더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 문제 / 최혜월 ..... 317  
Gender as a Critical Window on the Issue of Low Birth Rate  
/ CHOI Hyaewael ..... 320



# 개회식

## Opening Ceremony

한완상 위원장 개회사

Opening Remarks

대통령 축전

Congratulatory Message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축하

Congratulatory Remarks



## 개회사: 한완상 위원장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은 3·1운동에 대한 성찰과 공감을 토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국가비전을 논의하는 값진 소통의 마당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3·1운동이 비폭력·평화운동이었고, 제국주의 식민정책에 대한 약소민족의 자주 독립운동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당시 세계에서는 참으로 감동적이며 올림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비폭력을 고수하며 평화를 지향했던 3·1운동의 올림을 주목해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태극기 하나와 독립선언서 한 장을 들고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헌병·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폭력의 힘으로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선조들은 이 같은 철저한 비폭력 적극저항으로 당시 세계에 감동의 올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10% 이상의 민중들이 이 감동적 올림을 서로 나누면서 온 민족과 온 민중이 당당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살신성인의 고매한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3·1운동의 공공적이고 변혁적이며 감동적인 비폭력 저항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리고 살려야 할 우리민족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3·1운동의 비폭력·평화 정신의 감동적 특성은 당시의 국제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참혹했던 1차 세계대전이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까지 계속되었고, 2년 전인 1917년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유혈계급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살육이 만연했던 당시에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의 가치를 온몸과 마음으로 실천했다는 것은, 우리민족이 이미 그 때 선진민주국의 수준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독립’이 단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폭력적 패권주의로부터 인류의 해방, 즉 세계의 평화와 공영(共榮)을 지향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올림이 마침내 중국의 5·4운동을 비롯해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 피압박 약소국의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시성(詩聖)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우리민족을 평가했고, 네루가 자신의 딸에게 옥중에서 쓴 서신에서 “코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네가 안다면, 너도 큰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3·1운동의 민주평화 정신의 영향을 받아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정체를 ‘민주공화제’로 선언했습니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의 혁명적 전환을 장엄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보다 더 빨랐습니다. 특히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강탈당한 아픔을 망명지에서 온 몸으로 겪었던 애국지사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민주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은 36년간 일제강점시기에는 독립을 향한 민족의 외침인 동시에 74년간의 한반도 분단시대에는 민주화 운동과 평화운동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벌어진 촛불시민혁명으로 3·1운동의 ‘민주주의와 평화’정신을 끈질기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의 최첨단 선진민주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2019년 펴낸 연구보고서 〈세계적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셋째,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세계평화에 대한 열망은 당시 강대국들의 위선적 행태에 견주어볼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구미강대국들은 자기 국민에게는 민주정치를 약속하고 실천하면서도 대외 정책은 약소국 민중에게는 잔인하고 탐욕적인 식민정책을 무자비하게 시행했던 부끄러운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이 때 동양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강점했던 나라가 바로 당시의 일본이었고, 영국과 미국은 같은 해양대국으로 일본의 야만적 식민지 강점 정책을 스스럼없이 지원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 대해 3·1운동 주체들은 행동으로, 선언으로 당당하게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헌장 제7조는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한 약소국의 독립과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4년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립 운동가들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통일조국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분단의 트라우마 상황에서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불평등의 심화, 4차 산업 혁명의 도전, 그리고 대의민주제에 대한 비판 등으로 정치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창조적 순발력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정치선진국으로, 경제중진국으로 굴기하였고, 문화적으로도 젊은이들의 창조적 끼가 넘치는 새로운 문화흐름을 주도하며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3·1운동의 그 감동적 울림의 힘으로 미래 사회가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적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마침내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선진적 포용국가를 향해 힘 있게 달려 갈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국제학술포럼이 지난 날 우리들의 공공적, 변혁적 노력을 함께 평가하면서 서로 배우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열심히 배우면서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더욱 널리 세상에 알립니다. 보다 밝고 맑은 미래는 과거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현재의 비리와 모순을 청산하려 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단비가 한반도에 촉촉이 내리고 정의와 자유의 큰 강물이 한반도 남북과 동서로 힘차게 흘러내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한 완 상





## Opening Remarks: Dr. HAN Wan-Sang

We are holding this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the Republic of Korea's Centennial Vision, commemorating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our critical reflection of and empathy with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this forum shall become an invaluable gathering that will discuss the Republic of Korea's centennial vision.

In order to envision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lessons of the pas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was the non-violent and peaceful movemen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 occupation. Th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holding a universal value that was very touching and resonating in the era dominated by the social Darwinism of the hegemonic powers.

First,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resonance of the Movement that strictly adhered to non-violence and peace. On March 1<sup>st</sup>, 1919, our patriots shouted independence against the unlawful occupation, each of them holding a Taegeukgi (national flag of Korea) in one hand and a piece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another. With the power of non-violence, they gallantly and relentlessly stood up against brutal suppression by imperial Japan's armed forces. With such adamant, non-violent, active resistance, our patriots once again manifested to the

world the moving resonance of the Movement. More than 10% of then Korean population shared with one another the touching spirit of non-violence resistance. This implies that the entire nation stood up with dignity. It was a revelation of the noble spirit of martyrdom. Hence, the Movement is the invaluable asset of our people that should be honored and kept alive for generations.

The moving traits of the Movement are more dramatically revealed in contrast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 wretched World War I ended only a year prior to the Movement. In 1917, 2 years earlier than the Movement, the blood-shedding Bolshevik revolution had erupted in Russia. The fact that our people defied the violence and carnage that was rampant in the era and realized the value of peace with their whole body and mind signifies that the Koreans had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advanced civilization. We must remember that our ancestors cried for ‘independence’ aiming not only for liberation from the brutal Japanese imperialism but also for the emancipation of humanity from the merciless global hegemonism. In other words, our ancestors pursued world peace and co-prosperity for the long haul. This resonance echoed and eventually influenced the independence movements of other oppressed nations such as Ind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 as well as the May Fourth Movement of China. Therefore, the world-renowned great poet, Rabindranath Tagore, extolled our people as the ‘Lamp of the East’. Furthermore, Jawaharlal Nehru claimed in the letter to his daughter during his imprisonment, ‘If you knew what happened in Korea, you would surely be impressed immensely.’

Second, influenced by the peaceful democratic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proclaimed its national identity as 'Democratic Republic'. This was the solemn declaration of the nation's revolutionary transition from an emperor's state to a people's country. On top of it, it was the first case in world history where Democratic Republic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 was even a bit earlier than the Weimar Republic. Above all, i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at our patriots - who went through excruciating agony of being stripped off sovereignty and territory during their exile - ardently yearned for.

The Movement was our people's cry not only for independence from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but also for the underlying spiri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during Korean peninsula's traumatic 74 years of division: the April 19<sup>th</sup> Revolution, the Kwangju Democratic Uprising, th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and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of 2016-2017. As a result, Korea is now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advanced democracy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2019 report 'Democracy Facing Global Challenges' by V-Dem (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 the world-renowned Swedish institute for research on the contemporary democracy,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one of the most advanced democratic country in the world.

Third, the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s aspiration for world peace shines even brighter when compared to the hypocrisy of then Western hegemons. The Western powers have domestically promised and delivered democratic politics. Externally, however, they ruthlessly

executed cruel, greedy colonial policies against weak nations and showed shameful duality.

During the period, while proclaiming Oriental Peace, Japan in actuality forcibly occupied neighboring countries. As like-minded maritime powers,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either supported or tolerated Japan's barbarous colonial occupation policies without hesitation. Against such harsh circumstances, the protagonists of the Movement confidently proposed and exercised peaceful alternatives through their actions and declarations. Article 7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constitution states that Korea shall contribute to the culture and peace of humanity. This declaration emphasizes that peace on the Peninsula is not only related to the independence and peace of the weak states but also to world peace.

Regretfully, Korea has not yet relished its national liberation and independence. Current state of division has been ongoing for 74 years. The peaceful, unified motherland that our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dreamed of still remains an unfinished task. The Korean society, under this traumatic division, is currently experiencing severe socio-political strains due to relentless resistance from the pro-Japanese and cold war warriors, aggravation of social inequality, challenges from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nd more seriously, nostalgic regressive socio-political groups. Nonetheless, despite formidable challenges, our people have persistently exerted their best in such a way that Korea rose from being one of the world's most poverty-stricken nation to that of politically advanced and economically developed.

I firmly believe that with the resounding, touching spirit of the Movement, we, the Koreans will eventually unravel our society's complicated Gordian knot and realiz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Subsequently, we will run with vigor towards advanced 'Inclusive Korea'. In this manner, I hope that this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become an invaluable platform for mutual learning through the assessment of our predecessors' courageous, transformational and public commitments. A brighter and clearer future would approach us when we critically review our past and work together for a better tomorrow. Finally, let me give my audacious vision that the timely rain of peace eventually soak our motherland and consequently, a great river of justice and freedom gracefully flow over our fatherland in abundance.

Thank you very much.

November 7<sup>th</sup>, 2019

**HAN Wan-Sang**

Chairperson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 대통령 축전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완상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하신 모든 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논의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비폭력, 평화, 평등, 정의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3·1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2016년 겨울, 촛불로 타올라 ‘나라다운 나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포럼이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주권의 힘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님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0년, 우리 국민은 위기에 맞서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Congratulatory Messag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the Republic of Korea’s Centennial Vis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Dr. Han Wan-sang, Chairperson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ose who took part in preparing this forum. I would also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enters, panelists and participants.

We would not be able to design our future without looking back upon the past. It is especially meaningful that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entennial Anniversary’ is leading the discussion for Korea’s future century, especially considering the Commission has conducted various projects including ‘public panel discussion’ in an effort to identify our national roots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ary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 century ago, our ancestors together fough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the Movement, upholding the principles of non-violence, peace, equality and justice. They establish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ook a step forward for a n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The spirit of our patriots became a driving force behind our independence, national defense, democracy and



industrialization, which blazed with the candle lights in the winter of 2016 and marked a new milestone for a ‘properly functioning nation’.

I hope that today’s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discuss and seek solutions to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power of popular sovereignty that burst from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 road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innovative inclusive country’ and a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economy’ as well as measures to address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Furthermore, I would like to convey my deepest appreciation to Dr. Moon Chung-in, the keynote speaker and the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as well as scholars from both home and abroad.

During the past 100 years, our people achieved miraculous successes while overcoming challenges. I hope we all together take the first step of the new century through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the Republic of Korea’s Centennial Vision’.

Thank you very much.

November 7<sup>th</sup>, 2019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축사: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뜻 깊은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는 지나온 100년을 성찰하고 희망찬 미래 100년을 전망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전망하면서 그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축사에 앞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이끌어 오신 한완상 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을 준비한 지난 2년은 선생님의 청년 같은 열정과 원로의 원숙함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국 근대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강요에 의한 타율적 근대의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자율적’ 근대의 출발은 바로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율적 근대 출발의 내용 역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1운동이 왕 또는 황제의 신민이 아닌 근대적 의미의 대한민국 ‘국민’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민주공화제’의

근대적 정부'와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근대적 헌법'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대적 국민의 등장, 민주공화제 정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헌법이 자율적 근대 출발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저는 3·1운동이 평화운동의 '새로운 정신과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시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라 안팎으로 저항운동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위로부터의 평화가 아니라, 식민·반식민의 제3세계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난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위대한 역사적 성취를 이룩해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어냈으며,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항쟁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도 탄생시켰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땀어린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가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압축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3·1운동 100년을 맞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전후 냉전의 격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남북의 분단이 이미 냉전이 사라진 지금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은 아직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율적이지 못한 채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 100년 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을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전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당시 꿈꾸었던 우리 미래가 현재 얼마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찰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식민지배의 가장 어두운 시기 민족시인 윤동주가 오갔을 백양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 해 구



## Congratulatory Remarks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Jung Hae Gu,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Among many meaningful events held this year to celebrate the centenary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s Forum is highly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venue that gives us an opportunity both to reflect upon the past 100 years in the Korean history and to envision the next century full of hop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you all who grace this event with your presence and willingly have gathered for collective wisdom as we anticipate our nation's next 100 years.

Before I move 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deepest respect and gratitude to Chairperson Han Wan-sang, who has showed remarkable leadership for the last two years in organizing and preparing the series of commemoration projects for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t is his untiring passion and insightful guidance that has made these projects possible, and I would like to deeply appreciate and congratulate him on the accomplishments.

Distinguished guests,

It is often said that the Korean modern era began with the Korea-Japan Treaty of 1876. However, this was only the start of a heteronomous modernization under coercion from external force. I believe that the start of the ‘autonomous’ modern era of Korea that is based on our own will was the 1919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rt of the autonomous modern era differed in its quality from that of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Movement introduced a modern concept of ‘people’ of Korea, instead of subjects of a king or an emperor. Also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troduced a ‘democratic republican form of modern government’ and ‘the modern constitution that declared freedom and equality.’ The introduction of modern people, a democratic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stating freedom and equality were the key aspects of the start of the autonomous modern era.

In the meantime, I believe that the Movement manifested a ‘new spirit and form’ of peace movement. First, the Movement was a ‘non-violent and peaceful resistance,’ from beginning to end. This gave birth to a new tradition of resistance movement both locally and abroad. Moreover, the Movement demonstrated ‘a new form of peace movement from the bottom’ by the people from the third world under colonial/semi-colonial rules, instead of the one carried out by imperialists in a top-down manner.

Respected guests,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1919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ose years, our people achieved great historical success despite many challenges and hardships: we achieved independenc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established a new democratic government through the Candlelight Protests. All these achievements have been the results of the sincere dedication and painstaking efforts made by our ordinary people.

I believe, however, we are still on a journey of realizing the dream that was dreamt during the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 century ago. While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our democracy has yet to fully mature, given that human rights and values are still being disregarded. Also, there are shortcomings in many areas of people's daily lives with people suffering from disparity and inequality, though we as a society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Furthermore, what is most heartbreaking as we celebrate the centenary of the Movement is tha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result of the intensified Cold War following the World War II, still remains unchanged even long after the Cold War ended. Moreover,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Peninsula has not yet been achieved. This has led the South and the North to continue to confront each other, unable to free themselves from the major powers surrounding the Peninsula. Who would have thought 100 years ago,

during the Movement, that Korea would remain divided a century later? What a shameful reality.

As we look forward to the next 100 years of this nation, I kindly suggest we all look back upon what and how much we have achieved for the dream that was longed for during the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have a new dream for the coming 100 years of Korea.

Finally, I would like to state that it is especially meaningful today that this Forum is being held overlooking Baekyang-ro, where Yun Dong-ju, our national poet, would have walked during the darkest moments of the colonial rule.

Thank you very much.

November 7<sup>th</sup>, 2019

JUNG Hae Gu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 개회사 - 한완상 위원장



■ 대통령 축전 대독 -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축사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축사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념촬영



# 기조연설

## Keynote Speech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 Distinguished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 연설문

### 향후 100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실현을 향해<sup>1)</sup>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

일제는 1910년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강점하였습니다. 1894년, 1905년 일제가 각각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후 1905년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체결하여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하면서 조선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00년 전인 1919년 3월 조선인들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에 분연히 맞섰고, 3·1독립선언서를 채택하여 민족의 독립, 상호 주권존중,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잇따른 전국적인 항일 투쟁에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참가하였고, 그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3·1운동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최초의 시민 주도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촉발한 주된 요인은 고종 황제의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으나 파리 강화 회의에 따른 국제 사회의 분위기와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론과 주권평등원칙이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궤기를 고취하였습니다. 3·1독립선언서의 아래 구절은 1919년 당시의 시대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안전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꺾고 다듬어 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의 찬란한 빛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한다.”<sup>2)</sup> 이보다

---

1)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to celebrate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Yonsei University, November 8<sup>th</sup>, 2019.

더 고무적이었던 사건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일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선포하고 국제 연맹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은 하늘에서 준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타 회담을 거치면서 세계 열강이 채택한 ‘분할통치’에 따라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로 분할되었고, 분단의 비극은 1950년 한국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경쟁과 냉전 체제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1990년 냉전 체제가 종식되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지만, 평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한국이 속한 지역의 지정학도 여전히 옛 냉전 체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식민지 역사와 냉전의 잔재가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냉전 체제의 관성, 세력전이와 그에 따른 전략적 불안정,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불평등한 확산, 민족주의적 정서의 재부상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본고는 이 지역의 현재 지정학 및 지리경제학적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1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될 법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평화, 관용, 번영의 지역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

2) My own translation from the text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Declaration.



### 지역적 동향 분석: 갈등과 협력의 중첩 구조<sup>3)</sup>

동북아시아는 현재 두 얼굴을 가진 지역입니다. 하나는 경제 역동성이라는 선한 얼굴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비린내 나는 만성적인 지정학적 갈등, 역내 국가 간의 뿌리 깊은 역사적인 악감정과 전략적인 의심으로 가득한 추악한 얼굴입니다. 2천 년 이상 중화 지역 질서의 일부였던 동북아는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이후, 그리고 냉전 동안 “극단의 시대”<sup>4)</sup>를 거쳤습니다. 아편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권력과 생존을 위한 잔혹한 투쟁들이 이 지역의 지정학적 역사를 규정해 왔습니다. 동북아는 아직 지역 안정성을 해치고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건설적인 해결을 저지하는 술한 갈등 요소들로 가득합니다.<sup>5)</sup>

한반도 분단과 갈등, 대만 해협 위기, 일본과 한국,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들이 이러한 동북아 지정학적 판세를 반영합니다. 최근 영토 분쟁을 살펴보면 제각각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독도/다케시마 분쟁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비롯되었고, 중국과 일본 간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방 영토를 두고 오랫동안 러시아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동북아 갈등의 주요 쟁점들은 냉전 시기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제국주의 지배와 정복으로 얼룩진 과거의 유산에서 비롯됩니다.

---

3) This section draws partly on Chung-in Moon, “Barriers to Community-Building in Northeast Asia: Geopolitics, Nationalism, and Domestic Politics,” in Peter Hayes and Chung-in Moon (eds.), *The Future of East Asia*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018), pp.267-307.

4) Eric Hobsbawm,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Pantheon Books, 1994).

5) For the most recent review on studi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s, see Hays and Moon (eds.), *The Future of East Asia*, op. cit.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이 아직도 망령처럼 동북아 지역을 떠돌고 있지만,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희망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 팽창하는 사회·문화·인적 네트워크, 국내 정치구조의 수렴 현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 간 협력의 공식·비공식 제도화 등 필자가 “자유주의적 전이”로 정의하는 현상들이 그 조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친밀한 유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전이에 입각하여 경제적 상호의존, 다자 협력 플랫폼, 민주적 거버넌스의 증진을 통한 국가 간 평화 회복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공식화된 제도적 장치가 없어도 무역 지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현상은 자유주의적 전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경제 발전과 번영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성숙한 시장경제를 이룬 반면, 일본은 강력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진영에 합류한다면, 지역 간 평화 구축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개방된 지역주의와 지역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지역 내 자유주의적 평화 체제로의 이행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상술한 변화 외에도 동북아 지역 내 자유주의적 전이의 또 다른 중요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그중 하나입니다. 지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이 깊어지고 정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sup>6)</sup> 중국, 일본, 한국은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협상에 돌입하였을 뿐 아니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6) See Seung Youn Oh, “Quiet Transformation from the Bottom: Emerging Transnational Networks among Non-state Actors in Northeast Asia Community-building,” in Hayes and Moon, *The Future of East Asia*, op. cit., pp.195-226; S.N. Katada and M. Solis, *Cross 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Permeated Regionalism in East Asia*, (Boston: Springer, 2008).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간 합동 노력이 이러한 동향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역 내 안보 및 평화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동북아 국가들은 다자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아세안지역포럼(AFR)과 더불어 6자회담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비정부기관들 간에 진행되는 각종 안보 대화들도 지역 내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체 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옅살라 대학교의 평화연구단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동아시아 평화 이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즉, 동북아 지역은 엄청난 갈등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된 이래 공공연하고 전방위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단은 동아시아에서 평화가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로의 체제 전환, 민주주의를 향한 국내 정치 변화, 다자 협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sup>7)</sup> Timo Kivimaki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인한 사망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 동아시아 평화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sup>8)</sup>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강력하고 가시적인 요소인 자유주의적 전이가 갈등의 요소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세력전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동향입니다. 미국 해계모니의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미래에 대한 불길한 전조로 보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불만 가득한 수정주의 세력이 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같은 우려의 기저에는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 안보에 중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있습니다.<sup>9)</sup> 시카고

7) See special issue on “The East Asia Peace: How It Came About and What Threats lie Ahead” *Global Asia*, 10:4 (October 2015).

8) Timo Kivimaki, *The Long Peace of East Asia* (Farnham: Ashgate, 2014).

9)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2 (Fall 2005), pp. 7.45.

대학의 John Mearsheimer 교수는 이미 2005년에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일 수 없고, 향후 수십 년 간 중국의 극적인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안보 경쟁에 돌입할 것이고, 양국 간 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sup>10)</sup> 하버드 대학의 Graham Allison 교수는 심지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중국과 미국 간의 헤게모니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sup>11)</sup> 두 학자의 비관적인 전망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 중심의 지역·세계질서에 도전할 것이고, 급부상한 중국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급부상한 중국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동북아 패권국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격상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 헤게모니 경쟁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며,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한 지정학·지리경제학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상호작용 패턴을 규정짓는 요인은 역사적 유산, 국익의 이해관계 및 자유주의적 규범의 수렴, 세력전이와 그에 따른 전략적 계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동북아 지역질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 민족 정체성 충돌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화·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민족주의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공격적인 민족주의 행보는 이웃 국가들에 있어 반사적인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이로 인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반일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제강점기의 ‘위안부’와 강제동원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이 한일 양국 간 심각한 경제 마찰과 안보 긴장 상태로

10) Zbigniew Brzezinski and John J. Mearsheimer,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 /Feb. 2005).

11)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New York: Scriber, 2017).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고구려가 중국 고대 왕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주장)으로부터 촉발된 역사주권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한중 관계도 악화하였습니다.<sup>12)</sup> 난징 대학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도 역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족정체성 충돌과 민족주의는 국내의 정치적 오남용으로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민족주의가 정치화되면서 무엇보다 부정적인 연쇄반응이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주지하듯 이러한 연쇄반응을 촉발하는 쪽은 언제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역사 교과서 개정, 일제 식민통치 미화, 아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의도적·산발적으로 자극하고 있고, 여기에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자극은 중국과 한국 내 부정적인 반응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국과 한국 내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을 동원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재확인하며, 반일 입장을 중요한 정치 의제로 군림으로써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내 상호 적대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의도치 않게 결집되어 대중의 인식과 국가간 상호 신의를 악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적대적 제후가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의 현재 전망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사회·문화·인적 네트워크, 다자 협력이 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역사적 유산, 세력전이, 민족정체성 충돌이 반대로 해체와 갈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고, 동북아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12) Chung-in Moon and Seung-won Suh, "Identity Politics,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Order," in John Ikenberry and Chung-in Moon (eds.),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Debates, Issues, and New Orde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8), pp. 193-230.

## 향후 100년의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이중패권 경쟁, 흡수적 혼돈, 새로운 유럽

동북아 지역질서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이 이중패권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불편한 협력 및 치열한 경쟁 관계를 이루는 현상유지의 지속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력균형의 논리가 양국 간 상호작용 패턴을 규정할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일부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심화시키는 반면, 중국은 이웃나라를 선택적으로 포섭하여 일대일로 국가전략으로 이에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 또는 분단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의 전략적 선택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북핵과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친미 균형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중국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국의 과도한 대중 경제 의존도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헤게모니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과 협력 게임이 앞으로 미중 관계의 주요 특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과 북핵 문제의 협력적 해결을 통해 양국 간 군사 갈등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권력 구도를 예측하자면 미국은 당분간 중국에 대하여 경제적·군사적·기술적 우위를 누립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역외균형자이고 중국은 지정학적 우위를 가진 대륙 열강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무리 위태롭고 불안정해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 시나리오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세력균형의 붕괴나 급속도의 세력전이와

같은 일탈이 발생하면 전략적 불안을 촉발하고 갈등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군사적 억제와 동맹 정치가 양국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인은 한반도 전쟁을 저지하고,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를 야기할 수 있는 힘의 진공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과 주한 미군의 존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의 패권적 리더십과 동맹을 유지하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군사 억제와 동맹 정치로 현상태를 유지하면 한국과 동북아 지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미간 양자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잠재 또는 실재하는 위협으로 간주하면, 북쪽 축(중국, 러시아, 북한)과 남쪽 축(미국, 일본, 한국) 간의 구 냉전 체제를 연상시키는 전략적 분할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평화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편들기 외교는 한국의 외교적 활동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갑자기 탈관여(disengage)라도 하는 경우, 과도한 대미 의존은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9세기 후반의 동북아를 연상시키는 무정부 질서의 부활입니다. 무정부적 지역 질서는 흡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산된 권력, 왜곡된 거버넌스 구조, 권력과 부, 지위를 극대화하는 개별 국가들의 행동은 예상하지 못한 무정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흡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통치 형태는 국력 극대화와 동맹 정치 이용을 통한 적자생존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1994년 프린스턴 대학의 Aaron Friedberg가 경고하듯, “유럽의 과거는 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sup>13)</sup> 유럽의 과거란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가 예외였던 상황을 가리킵니다.

---

13) Aaron L.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1994), p.7.

동북아는 세 가지 상황에서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Graham Allison이 예측한 대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중국과 미국 간의 헤게모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부인하고는 있지만 이미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sup>14)</sup> 중국이 미국에 비견될 만한 국력을 갖추고 자국의 국제적·지역적 위상에 불만을 품게 된다면 양국은 큰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만 해협 위기, 제2의 한국 전쟁, 남중국해의 해상과 공중 대립 등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탈관여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권력 경쟁, 동북아 국가 간에 자잘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저명한 호주 저널리스트 Richard McGregor가 자신의 저서 “Asia’s Reckoning”<sup>15)</sup>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듯 아시아 버전의 “장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이 자국을 “정상 국가”로 재정비하면 미국이 없어도 양국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탈관여는 한반도 내 갈등, 대만 해협 위기, 러일 군사 갈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핵 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국가가 되면 한반도에는 격렬한 핵·기타 군비경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핵 보유 능력을 갖춘 통일이한국이 중간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간의 민족정체성 충돌은 이 악몽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지배와 정복이 반복된 역사의 기억은 배타적이고 심지어 전투적이기까지 한 민족주의적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동북아에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유교주의 위계 질서의 대변동에 따른 집단적 인지부조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정체성은 의구심을 고조시키고,

14)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op. cit.

15) Richard McGregor, *Asia’s Reckoning* (New York: Penguin Books, 2017), p. x.



경쟁을 부추기며, 평화 구축 과정을 복잡하게 하여 국가들 간의 제한적 역지 현상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호적이지 않은 동북아 국가 간 상호인식은 지역 내 안보 역학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을 의심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싫어하고 중국을 의심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통일한국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흡스주의 무정부 질서의 부활은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미래는 오늘날의 유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물자, 재화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지역 말입니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이의 확장을 전제로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공통 규범, 가치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규범, 공통 관습, 기존 자유주의적 전이의 관성은 물론, 패턴화된 규칙성과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의 중요함이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동북아는 경제·안보 공동체가 된 후 협력과 통합의 과정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된 동북아에서는 그 누구도 전쟁의 발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국가들은 공동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 내에 동북아에 구축될 새로운 유럽은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내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부터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화 동맹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 통합은 동북아 내 새로운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공동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동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북아가 집단 안보 체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어느 국가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안보 공동체를 바탕으로 구축된 집단 안보 체제는, 공통된 위협 및 공공의 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배타적 집단 방어 체제와는 차별화됩니다. 집단 방어 시스템이 집단 안보 체제로 전환되면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중심 동맹 체제는 집단 안보 체제의 전제 조건인 다자 안보 체제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NATO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 공존이 좋은 사례입니다. 개별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집단적인 지역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다자 안보 협력 체제로 기존의 동맹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출발점은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안보 정상회담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역사적·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매우 촘촘한 사회·경제·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정치·경제 제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향후 100년 동안 동북아에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는 일은 이 국가들이 얼마만큼 공통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가치관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오래 전부터 안정적인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자유 시장, 공화주의 정치체, 공화국들로 구성된 평화 연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sup>16)</sup> 무역을 통해 시장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 시장의 확장으로 창출된 국경을 초월한 상업적 이해관계의 주체들이 부의 축적에 위협이 될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 전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공화(민주) 정치는 외교 및 국방 정책 관리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국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므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Bruce Russett이 광범위한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했듯이 민주주의 국가들[예: OECDE 회원국들]<sup>17)</sup>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산은 안정적인 평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평화와 민주 평화의 연장선에서 안보 공동체를

16)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Kant's Political Writings* (1795), trans. H.B. Nisbet and ed. Hans Rei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7)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4).

구축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는 공통된 규범과 가치관, 공통된 각종 국내 제도, 높은 상호의존도를 통해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안보 공동체는 집단 안보 체제, 다자 안보 협력 체제, “통일된 동북아시아”와 같은 총체적인 지역적 통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이 아직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를 포용하고 있지 않고, 각국의 민족주의가 지역 간 협력과 통합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칸트주의적인 평화 관념이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sup>18)</sup>

####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

미중패권 경합의 현상유지, 흡스주의적 혼돈, 새로운 유럽 중 한국의 향후 100년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한국인은 동북아에 새로운 유럽이 도래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가 평화, 관용, 번영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몽같은 시나리오는 지역내 국가 간 고질적 갈등을 동반하는 장미전쟁의 재현일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에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한, 미중패권 경합의 현상유지 시나리오가 그다지 나쁘지는

---

18) A perpetual peace can also come under two additional scenarios. One is the case of Pax Americana in which peace can come from American hegemony in the region. Ultimate US triumph over China can create a regional order resembling the Kantian peace. The other is the case of Pax Sinica in which peace emanates from China's victory over the U.S. Under this scenario, China can revive an old China-centric tributary system in the region that could entail quite a regional order quite different from that under American hegemony. Such tributary system can be co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reality, however, neither of Pax Americana and Pax Sinica are likely. On this issue, refer to David Kang, *East Asia Before the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동북아를 혼돈과 전쟁의 함정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북아 공동체의 비전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일제의 손에 처형당한 한국의 안중근의사는 미완의 저서 “동양평화론”(1910)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책에서 전쟁을 일으켜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를 낸 일제를 통렬히 비판하면서도, 청나라, 일본, 조선이 백인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sup>19)</sup>

- 뤼순 지역을 중립 지대로 선포하고, 한국, 일본, 청나라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
-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중국, 일본, 조선에 모두 통용되는 공용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
- 3국이 힘을 합쳐 함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
- 조선과 청나라는 일본의 지도 하에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조선, 일본, 중국의 황제들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바티칸 교황의 중재로 평화로운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동북아시아 시대구상(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에서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이야말로 세계 문명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9) Jung-geun Ahn, “Dongyang Pyonghwanron (Oriental Peace),” *Narasarang (Love of Country)*, No. 34 (December 1979), pp. 132-140, translated by Soon-hee Choi.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19세기가 유럽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대서양의 시대, 그리고 21세기는 태평양 또는 동북아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생산력의 중심이 유럽에서 대서양, 그리고 동북아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북아의 경제력이 가장 커진다고 해서 세계 문명의 중심이 동북아로 이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협력을 통해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EU는 여전히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sup>20)</sup>

유럽 연합은 브렉시트 논쟁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협력, 통합 그리고 평화 공존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 국가 간 경제 협력은 뿌리 깊고 광범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의 사례를 본받아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한·중·일 3자 정상회담, 한미동맹을 넘어선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정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3자 정상회담은 실현되었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는 현재 공식 협상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비전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향후 100년의 동북아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평화, 관용, 공동 번영을 누리는 통합된 동북아의 실현은 우리의 비전, 의지, 헌신,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흡스의 무정부 상태가 재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중패권 경합에 따른 끊임없는 불안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미지의 세력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 1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

20) Roh Moo-hyun, “History, Nationalism, and Community,” *Global Asia* 2:1 (Spring 2007).

## Speech

### Next 100 Years:

#### Toward a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sup>1)</sup>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 Distinguished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Japan annexed and colonized Korea in 1910 by a brutal force. Japan's victories over China in 1894 and Russia in 1905 and an American tacit recognition of Japan's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Taft-Katsura secret agreement in 1905 made Korea fall prey to big power politics. On March 1919, exactly one hundred years ago, however, Koreans rose wrathfully against the Japan's ruthless colonial rule and called for national independence, mutual respect of sovereignty, and East Asian and world peace by adopting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Declaration. The one million Koreans joined the public protest against Japan throughout the entire nation, of which 7,509 were killed and 47,000 protesters were jailed. It was the first and most significant civic movement in contemporary

---

1)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the Republic of Korea's Centennial Vision, Yonsei University, November 7<sup>th</sup>, 2019.

Korean history.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was triggered primarily by a suspicious death of King Kojong, but the overall international mood followed by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the Woodrow Wilson's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equality of sovereignty inspired the civic uprising. The following passage of the Declaration aptly sums up the Zeitgeist of 1919: "Oh, the new world is unfolding before our eyes. The age of force has disappeared, and the age of morality has arrived. Humanistic spirit that was exalted throughout the past century began to project the aura of new civilization on the history of mankind."<sup>2)</sup> More encouraging wa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on April 11<sup>th</sup>, 1919 that declared the democratic republic as the form of government and decided to join the League of Nations,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marked the beginning of official and systematic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Japan's colonial rule.

Korea gained independence in 1945 after the Allies' victory in the Pacific War, but it was not a manna from heaven. The great powers' "divide and rule" policy at the Yalta Conference separated Korea into two halves, which then suffered from the tragedy of the Korean War in 1950. The Cold War structure and 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fterwards haunted Korea and Koreans. The demise of the Cold War system in 1990 greatly heightened South Koreans' anticipa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

2) My own translation from the text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Declaration.

for peace and common prosperity, but it did not bring about any visible peace dividends. Korea is still divided, and the region's geopolitics is being affected by the old Cold War structure. At present, legacies of the past colonial history and the Cold War are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new sources of actual and potential conflicts. The inertia of the Cold War system, power transition and its built-in strategic instability, the uneven spread of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and resurgent nationalist sentiments all clou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In this paper, I will make an assessment of current regional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ynamics and will delineate three contending scenarios of next one hundred years in Northeast Asia. Finally, I will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creation of a community of peace, tolerance, and prosperity in the future.

### **Assessing Regional Trends: Overlapping Structure of Conflict and Cooperation<sup>3)</sup>**

Northeast Asia has at present two faces. One is a rather benign face of economic dynamism. The other is an ugly face of intractable and bloody geopolitical conflicts, deeprooted historical animosities and strategic suspicions among regional actors. Northeast Asia, which used to be part of the Sino-centric regional order for more than 2,000

---

3) This section draws partly on Chung-in Moon, "Barriers to Community-Building in Northeast Asia: Geopolitics, Nationalism, and Domestic Politics," in Peter Hayes and Chung-in Moon (eds.), *The Future of East Asia*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018), pp.267-307.



years, underwent “the age of extremes”<sup>4)</sup> after the arrival of the European imperial powers, and during the Cold War. Brutal struggles for power and survival, as evidenced by the Opium War, the Sino-Japanese Wars, the Russo-Japanese War, the Pacific War,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had defined the past geopolitical contour of the region. It is still fraught with many conflictual elements, which undermine its regional stability and impede constructive paths towards a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sup>5)</sup>

The Korean division and conflict, the Taiwan Strait problem,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and China and Japan are testimonial to the trend. An examination of recent territorial disputes shows that they all have historical origins. Whereas the Dokdo/Takeshima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riginated from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the Diaoyudao/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dates back to the Sino-Japanese War of 1894. Japan's Northern territory has also been subject to historical contention with Russia. Flash points in Northeast Asia, many of which were suppressed during the Cold War, all emanate from historical legacies of the past characterized by imperial domination and subjugation.

Despite the specter of historical legacies still haunt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peful signs for peace and common prosperity have

---

4) Eric Hobsbawm,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Pantheon Books, 1994).

5) For the most recent review on studi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s, see Hays and Moon (eds.), *The Future of East Asia*, op. cit.

been on the ris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expanding social, cultural, and human networks, growing convergence in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and various forms of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intra-regional cooperation, which I define as ‘liberal transition’, have brought countries in the region closer and more friendly than ever before. Liberal transition projects pacification of inter-state relations through proliferation of economic interdependence, multilateral cooperative platforms, and democratic governance. A natural formation of trading zone even without form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be seen as the epitome of liberal transitio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hare common experienc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through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While South Korea and Taiwan have achieved a mature market economy with a high degre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Japan is a stable democracy with strong market economy. When and if China and North Korea join the liberal camp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tra-regional peace-building will be much more plausible. The expectation is that such developments can foster the rise of open regionalism and intra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further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liberal peace in the region.

Along with these changes, there are other important signs of liberal transition in the region such as an increasing trend toward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Deepening intraregional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ense informal networks have propelled more robust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sup>6)</sup>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not only embarked a formal

negotiation for the creation of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but also institutionalized the tripartite summit talk involvi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Various joint inter-governmental efforts to foster intra-regional cooperation re-enforce this trend. Although there is no formal mechanism to address security and peace in the reg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active in promoting the idea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Six Party Talks, along with the Asian Regional Forum (ARF), are good examples in this regard. And an array of security dialogues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s been instrumental in cultivating a sense of epistemic community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Reflecting such trends, a peace research group at the University of Uppsala, Sweden, developed a theory of East Asia peace by arguing that enormous conflict potential notwithstand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devoid of any overt and full scale conflict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They attribute the relative long peace in East Asia to capit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the direction of democracy, and multilateral cooperation.<sup>7)</sup> Kivimaki also argues that there has been a staggering

---

6) See Seung Youn Oh, "Quiet Transformation from the Bottom: Emerging Transnational Networks among Non-state Actors in Northeast Asia Community-building," in Hayes and Moon, *The Future of East Asia*, op. cit., pp.195-226; S.N. Katada and M. Solis, *Cross 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Permeated Regionalism in East Asia*, (Boston: Springer, 2008).

7) See special issue on "The East Asia Peace: How It Came About and What Threats lie Ahead" *Global Asia*, 10:4 (October 2015).

decline in battle deaths in East Asia strengthening the East Asian peace theory.<sup>8)</sup> All in all, liberal transition seems to stand as a strong and visible dimens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which may mitigate conflictual dimensions.

But worrisome is an emerging trend toward power tran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Relative decline of American hegemonic power and China's sudden rise portend a gloomy omen for the geopolitical future of the region. A rising China has raised a question of whether it becomes a dissatisfied revisionist power to challenge the US in the region as well as on the global stage. Underlying this is the "China threat" thesis that a rising China would become a long and mid-term danger to Asia security.<sup>9)</sup> John Mearsheimer predicted a very pessimistic outlook as early as 2005 by asserting that "China cannot rise peacefully, and if it continues its dramatic economic growth over the next few deca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likely to engage in an intense security competition with considerable potential for war."<sup>10)</sup> Graham Allison even raised the possibility of a hegemonic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by warning about the Thucydides trap.<sup>11)</sup> Their pessimistic outlook is based on several assumptions that a rising China would challenge the U.S.-center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that a rising China would

8) Timo Kivimaki, *The Long Peace of East Asia* (Farnham: Ashgate, 2014).

9)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2 (Fall 2005), pp. 7-45.

10) Zbigniew Brzezinski and John J. Mearsheimer,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5).

11)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New York: Scriber, 2017).

aggressively seek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with the other Asian states, especially with Japan, by force; and that a rising China would promote itself to a regional hegemon to regain its past prestige. Hegemonic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S is no longer a fiction, but a reality, which has deepened the fear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uncertainty in the region.

Historical legacies, growing convergence in interests and liberal norms, and shifting power configurations and resulting strategic calculus have shaped the patterns of regional interacti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clash of national identity stood out as another variable affecting the nature of regional order. Disputes over the past history between states that do not “regret” and states that do not “forget” have precipitated clashes of nationalism in the region. Modernization at home and globalization abroad have not withered lingering nationalist templates in the region. A series of assertive nationalist moves by Japan, such as a renewed territorial claim over the Dokdo Island, the Japanese right-wing nationalists’ attempt to whitewash history textbooks and Japanese political leaders’ tribute to the Yasukuni Shrine, provoked reactive nationalist sentiments and widespread anti-Japanese movements in China and South Korea, resulting in worsening bilateral ties. Most recently, dispute over the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escalated into a serious economic friction and security tens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perception of, and relations with, China have also deteriorated as a result of a new dispute on historical sovereignty, triggered by China’s

Northeast Project (Dongbei Gongcheng) that claims Korea's ancient kingdom of Goguryo to be a peripheral local government of China.<sup>12)</sup> Contention over history issues still remains acute between China and Japan as exemplified by the Nanjing massacres.

Clashes of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ism have been aggravated by domestic political abuse and misuse. Politicization of nationalism in one country has triggered negative chain reactions among others. As noted before, the trigger of chain reactions has always been Japan. Japanese right-wing politicians' intentional and sporadic provocation of historical issues such as textbook revision, beautification of Japan's colonial rule, and tributes to the Yasukuni Shrine, which were very much intended for domestic political purposes, has invited amplified negative reactions from China and South Korea. Nationalists in China and South Korea make political mileages out of Japanese conservatives' maneuver by mobilizing the masses, reaffirming nationalist sentiments, and closing-up anti-Japanese stance as a salient political issue. It is this unintended coalition of mutually hostile nationalist forces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hat has been responsible for worsening public perception and mutual distrust among them, obstructing an institutionalized intra-regional cooperation.

Likewise, current regional outlook in Northeast Asia seems complicated and volatile. Whereas economic interdependence,

---

12) Chung-in Moon and Seung-won Suh, "Identity Politics,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Order," in John Ikenberry and Chung-in Moon (eds.),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Debates, Issues, and New Orde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8), pp. 193-230.

social, cultural and human network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erve as forces of integration, historical legacies, power transition, and clash of national identity as forces of disintegration and conflict. Thus, Northeast Asia is currently at a critical juncture, and its future trajectory seems quite uncertain.

### **Three Scenarios of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 Next One Hundred Years: Bigemonic Competition, A Hobbesian Chaos, and A New Europe**

Predicting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in next one hundred years is not easy because many variables can influence its trajectory. Intuitively speaking, however, the most likely scenario is the continuation of the status quo in which China and the U.S. form a bigemonic leadership and engage in uneasy cooperation and fierce competition. A balance of power logic will dictate the pattern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Whereas Washington will intensify its Indo-Pacific strategy by strengthening an alliance with Japan, Australia, and som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hina will counter to it by mix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with selective co-op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Korea, be it united or divided, will agonize over its strategic choice. In the short run, South Korea is likely to take a pro-American balancing strategy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and China's rise, while North Korea will take side with China. Nevertheless, Beijing's leverage over Pyongyang and Seoul's excessiv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could drive South Korea to walk on

a tight rope between China and the U.S. Under this status quo scenario, a subtle hegemonic gam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ll characterize Beijing-Washington relations. Deeper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redible nuclear deterrence are likely to prevent a major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Judged on current power projection, the U.S. will enjoy econom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edge over China for the time being, but it cannot contain China thoroughly to suppress its national power. China has grown enough to cope with American threats. A declining U.S. and a rising China will create a sort of equilibrium in the region. It is more so because the U.S. is basically an off-shore balancer, whereas China is a land-based power that enjoys a geopolitical advantage.

Such scenario might not be necessarily bad because no matter how precarious and unstable it might be, peace and stability can be sustained in Northeast Asia. Any deviation, be it a breakdown in the balance of power system or a rapid power transition, could precipitate strategic instability and heighten the potential for conflict escalation. Military deterrence and alliance politics will constitute the core of their strategic calculus. Many in South Korea believe that the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military presence in their territory are essential for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for preventing a power vacuum that could bring about another regional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The alliance with the existing hegemonic leadership is seen as an insurance mechanism to cope with North Korea and China.

But maintaining the status quo through military deterrence and



alliance politics could accompany some negative repercussions for Korea and the region. For example, strengthening the bilateral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ile treating China and North Korea as potential or actual threats, could foster a new strategic divide reminiscent of the old Cold War structure between the northern axi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nd the southern axi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portending an uncertain strategic future. In this cas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 much more difficult. Diplomacy of taking side could further delimit the scope of South Korea's diplomatic maneuvering. Finally, excessive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can also produce serious negative boomerang effects should the United States disengage from the region abruptly.

The second scenario is the revival of anarchical order reminiscent of the late 19<sup>th</sup> century. An anarchical regional order, that resembles the Hobbesian world of all against all, is rather rare in reality. However, diffused power, a deformed governance structure, and individual maximizing behavior for power, wealth, and status can lead to a quite unpredictable anarchical situation. The only viable rule in a Hobbesian world is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rough maximizing national power and utilizing alliance politics. Under this scenario, as Aaron Friedberg of Princeton University warned in 1994, "Europe's past could be Asia's future."<sup>13)</sup> Europe's past refers to a situation in

---

13) Aaron L.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3 (Winter 1993-1994), p.7.

which wars were normal, and peace was an exception.

Northeast Asia can become anarchical under three circumstances. The first is when the ‘Thucydides trap,’ which Graham Allison predicted, leads to a hegemonic war between China and the U.S.<sup>14)</sup> Despite Beijing’s repeated denial, a power transition is taking place. When and if China possesses national power comparabl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simultaneously becomes dissatisfied with i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atus, major conflicts between the two might become unavoidable, jeopardiz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 cross-strait crisis, a second Korean War, and naval and air clashes in South China Sea could serve as flash points for a major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second is the case of American disengagement from the region and the outbreak of a power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and other small military conflict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could signal the arrival of the “War of the Roses” in Asia which Richard McGregor, a well-known Australian journalist, eloquently described in his book “Asia’s Reckoning.”<sup>15)</sup> China’s rise and Japan’s efforts to realign itself as a “normal state” could put the two on a collision course, especially without an American presence. American disengagement can also precipitate inter-Korean conflict, crisis over cross-strait, and even Russo-Japanese military conflicts. Finally,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to a de facto nuclear state, in absence of American

---

14)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op. cit.

15) Richard McGregor, *Asia’s Reckoning* (New York: Penguin Books, 2017), p. x.

nuclear deterrence, could spark intense nuclear and conventional arms ra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e rise of a unified Korea as a middle power with nuclear capability can also worsen the anarchical situation.

A clash of national identitie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ould make this nightmarish scenario all the more likely. Historical memories of domination and subjugation have shaped exclusive and even combatant collective identities wrapped around nationalism. Collective cognitive dissonance over the upheaval of Confucian hierarchical order is seen as a primary source of Northeast Asian instability. Such collective identities would foster the structure of finite deterrence among dyadic pairs by heightening suspicions, feeding rivalries, and complicating the process of peace-building. Mutual perception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not favorable each other, could further aggravate regional security dynamics. South Korea dislikes Japan and is suspicious of China. Japan dislikes South Korea and is suspicious of China. China dislikes Japan and suspects the motives of a unified Korea. The revival of Hobbesian anarchy will be most nightmarish to all in the region.

Finally, Northeast Asia's future could become like today's Europe in which people, goods, and services can move freely across national borders. This assumes an extension of liberal transition. Under this scenario,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ould share common norms, values, and interests, and display rule-governed behavior. The salience of gains from patterned regularity and cooperation as well as newly formed norms, common practices, and even inertia of existing

liberal transition would contribute to shaping such prospect. If this scenario is realized, Northeast Asia will be able to institutionalize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to be followed by an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No one under this unified Northeast Asia should worry about the outbreak of war, and its members will enjoy common security and prosperity.

A new Europe in Northeast Asia in coming decades should satisfy at least three preconditions. First,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go through the proces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arting with a free trade area and evolving into 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economic union, and ultimately monetary union. Economic integrative scheme should take place first in order to materialize a new Europe in Northeast Asia.

Second, concurrent efforts are needed to boost common,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ecurity in the region that can ultimately evolve into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Collective security system based on an inclusive security community without excluding any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collective defense system that is predicated on an exclusive nature of defense cooperation and the existence of common threats and common enemies. The transformation of collective defense system into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could signal a profound altering of America-centered alliance architecture. As the European experience shows, however, an American-centered alliance system can co-exist with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as a prelude to collective security system. Co-existence of NATO and OSCE is testimonial to it. It would

be much more preferable if the alliance system can be replaced by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which requires a collective regional identity transcending parochial individual interests. Most ideal starting point would be the creation of Northeast Asia Security Summit that includes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Russia, and the U.S.

Finally,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is essential. Northeast Asia has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untries in the region share common historical and cultural traits and are intermeshed through dens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networks. But they are also divided by different values and divergent political and economic regimes. Creation of a new Europe in Northeast Asia in the next one hundred years will hinge on to what extent they can narrow difference in values, while maximizing common traits.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long ago envisaged that the best way to achieve a stable and permanent peace is through a free market, republican polity, and a pacific federation of republics.<sup>16)</sup> Deepening and expanding market interdependence through trade can reduce the likelihood of war and enhance the prospects for peace, as market expansion creates vested commercial interests across borders that would oppose any outbreak of war that could undermine their wealth. According to Kant, republican (democratic) polity can also prevent war by assuring openness, transparency, and domestic

---

16)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Kant's Political Writings* (1795), trans. H.B. Nisbet and ed. Hans Rei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checks and balances in the management of foreign and defense policy. As Bruce Russett observes through extensive empirical works, democracies do not fight each other [e.g., OECD members].<sup>17)</sup> Thus, enlarging democracy serves as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a stable peace. As an extension of capitalist and democratic peace, forming a community of security can be another precondition for building a stable and permanent peace. A free market and democratic polity can foster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security through shared norms and values, common domestic institutions, and high levels of interdependence. At the regional level, a community of security can be manifested in terms of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s, or total regional integration a la “a unified Northeast Asia.” This scenario might sound too idealistic not only because China and North Korea are still short of embracing a free market and democratic polity, but also because parochial nationalism can obstruct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long run, however, the idea of Kantian peace could emerge as a concrete reality as the European experience illustrates.<sup>18)</sup>

---

17)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4).

18) A perpetual peace can also come under two additional scenarios. One is the case of Pax Americana in which peace can come from American hegemony in the region. Ultimate US triumph over China can create a regional order resembling the Kantian peace. The other is the case of Pax Sinica in which peace emanates from China's victory over the U.S. Under this scenario, China can revive an old China-centric tributary system in the region that could entail quite a regional order quite different from that under American hegemony. Such tributary system can be co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reality, however, neither of Pax Americana and Pax Sinica are likely. On this issue, refer to David Kang, *East Asia Before the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Our Strategic Choice toward a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A bigemonic status quo, a Hobbesian chaos, and a new Europe: which is the most desirable for Korea in next one hundred years? Undoubtedly, most Koreans will prefer an arrival of new Europe in Northeast Asia simply because such order will be based on a community of peace, tolerance, and prosperity. The most nightmarish will be the advent of the War of the Roses that will accompany protracted conflict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The bigemonic status quo, as long as a stable equilibrium is maintained between China and the U.S., might not be that bad since it can help Korea and the region escape from the trap of chaos and war.

The vision of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nothing new, however. Ahn Jung-geun, a Korea's patriotic leader who was executed by Japanese authorities after assassinating Japan's premier Ito Hirobumi in Harbin, Manchuria on October 26<sup>th</sup>, 1909, proposed an East Asian community in his unfinished book "Thesis on Oriental Peace (1910)." In his book, he made a harsh critique of Japan's war of aggression that caused enormous human casualties, while calling for cooperation among Q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against imperial ambition of white Western powers. He then offered very specific measures to realize the East Asian community.<sup>19)</sup>

---

19) Jung-geun Ahn, "Dongyang Pyonghwanron (Oriental Peace)," *Narasarang (Love of Country)*, No. 34 (December 1979), pp. 132-140, translated by Soon-hee Choi.

- Declare the Lushun area as a neutral zone and establish a trilateral organization for mutual cooperation among Korea, Japan, and Qing China there,
- Create a central bank and a common currency for China, Japan, and Korea,
- Establish a three country combined force and jointly counter the invasion of Western imperial powers,
- Korea and Qing China shoul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guidance of Japan,
- Emperors of Korea, Japan, and China should respect mutual sovereignty and promote peaceful relations under the mediation of the Pope of Vatican.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lso made a similar proposal in his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in 2004. He saw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world civilization. Let me quote from him:

“Many scholars define the 19<sup>th</sup> century as the Age of Europe, the 20<sup>th</sup> century the Age of the Atlantic, and predict the 21<sup>th</sup> century will be the Age of the Pacific or Northeast Asia. I do not agree with this description. While we have seen the gravity of economic and productive power shift from Europe toward the Atlantic, and more recently to Northeast Asia, such a shift does not necessarily put Northeast Asia at the heart of world civilization... Thus, I believe that the EU is still at the center of world civilization



because it has been shaping an order of co-existence through peaceful cooperative means.”<sup>20)</sup>

The European Union is now undergoing difficulties, as demonstrated by the BREXIT debate. But Europe is still far better than our part of the world. For it has managed to institutionalize peaceful co-existence as well as cooperation and integration. People in Europe are free from the fear of war.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m is wide and deep. Following the example of European integration model, President Roh pushed hard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summit, and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that goes beyond the alliance with the U.S. He was not successful in materializing all of his policy ideas, but the trilateral summit came true, and the idea of China-Japan-South Korea free trade area is currently undergoing official negotiation. More importantly, his vision still rests with us.

Teachings of Ahn Jung-geun and Roh Moo-hyun are still valid. Northeast Asia's future in next one hundred years is not preordained. It is we who determine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A unified Northeast Asia that enjoys peace, tolerance, and common prosperity depends on our vision, will, commitment, and imagination. We can avoid the recurrence of a Hobbesian anarchy. We can also overcome a perpetual insecurity associated with the bigemonic status quo. Future is our own making rather than predetermined by unknown

---

20) Roh Moo-hyun, "History, Nationalism, and Community," *Global Asia* 2:1 (Spring 2007).

forces. On the occasion of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I urge you not to forget lessons of the past, but to move forward creating a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next one hundred years.



■ 기조연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제1세션(Session 1)

## 한국사의 과거와 미래 Korean History: Past & Future

3·1운동 후 100년의 역사, 촛불항쟁 후 100년의 역사  
Centennial History after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entennial History after the Candlelight Movement

### 발표

Presentation

#### ‘자기 결정’의 시대

A Century of “Self-Determination”

우정은 Sweet Briar College 총장

/ Meredith Jung-En WOO President, Sweet Briar College

### 토론

Discussion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 PARK Tae Gy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유영주 University of Michigan 교수

/ RYU Youngju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 CHEON Jung-hwan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ersity

하네스 모슬러 Freie Universität Berlin 교수

/ Hannes B. MOSLER Professor, Freie Universität Berlin



발제자료 / Presentation Paper

# ‘자기 결정’의 시대

## A Century of “Self-Determination”

우정은

Sweet Briar College 총장

Meredith Jung-En WOO

President, Sweet Briar College





## 요약문

### ‘자기 결정’의 시대

우정은 Sweet Briar College 총장

이 논문은 월슨 이상주의로부터 힘을 얻은 3·1운동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현재, ‘자기 결정’이라는 개념이 2017년의 “촛불 시위”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마침내 일맥상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인 여건이 이제 우리 국민의 ‘자기 결정’에 유리해졌고, 마침내 분단된 한국을 탄생시킨 식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세기는 안정된 19세기 체제의 해체, 즉 경제에서의 자본주의, 정치에서의 자유주의, 문화에서의 부르주아의 종결로 시작되어, 1991년 서구 공산주의의 붕괴로 끝났다. 이번 세기는 많은 면에서 비극적이었고, 특히 두 번의 끔찍한 전쟁 사이에 끼어 있던 시대였다. 이는 또한 전쟁 후의 번영과 과학적 진보에서와 같이 다른 면에서도 비범함을 보여주었다. 여성과 소수의 시민권에 대한 위대한 업적으로 지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서구 공산주의의 흥망성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공산주의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서양과 일본의 근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동양의 공산주의 체제는 대체로 비이념적이고 그에 따라 집요함을 보인다.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공산주의는 스스로 채택되어 급변하는 사회에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였으며, 뻔뻔하고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혼합시켰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 보다 엄격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의 최고 수뇌부조차도 중국 공산주의식 실용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똑같은 제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조차도 중국식 실용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는 있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북한의 공산당은 유의한 수준의 민간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결여된 것은 1978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외교 인식이다. 이러한 돌파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안보와 자신감이 없다면, 중국인들과 같이 자본주의를 안정과 경제적 평등의 수호자로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동양의 공산주의는 북한 정권에게는 먼 꿈이다.

북한이 (공산당에 의해 통제된다면) 시장 경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를 요구하며 평화 시민 시위를 계승한 “촛불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노선을 따라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북한이 중국의 거울에 비친 스스로를 볼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될 것이며, 어쩌면 남북한 모두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A Century of “Self-Determination”

Meredith Jung-En WOO

President,  
Sweet Briar College

This paper argues that one hundred years after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which had been energized by Wilsonian idealism, the notion of “self-determination” has finally come full circle with the government that was ushered in with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7. It hopes that the structural conditions are now favorable for “self-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resolving finally the problem of colonialism that gave birth to the divided Korea.

The twentieth century began with the breakdown of the stable nineteenth century system - capitalist in its economy, liberal in political outlook, and bourgeois in its culture - and ended with the collapse of Western communism in 1991. This century was catastrophic in so many ways, especially the period that was sandwiched between the two horrific wars. It was also extraordinary in other ways, as in the prosperity and scientific advances in postwar years. It was lasting in its great achievements in civil rights of women and minorities. Above all, it was marked by the rise and fall of western communism.

Communism has yet to collapse in China and in North Korea,

however. A system born of resistance to modern imperialism - both Western and Japanese - communism in the East is largely non-ideological, and therefore, persistent. In China as in Vietnam, communism has adopted itself, providing political ballast in otherwise rapidly changing societies, and commingling with capitalism in ways both brazen and original. The practicality of this communism makes it enduring - with the exception of the more rigid North Korea, but even there the leadership do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nese-style practicality, hence the same old overture to the United States since the mid-1990s. Unlike China, however, th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has not generated significant private market. What the communists in North Korea lacks is a diplomatic recognition - their own 1978 as it were. Without this breakthrough, and the security and confidence that comes with it, the Communism in the East that the Chinese have engineered - resilient, practical, complementary to capitalism as the guardian of stability and economic equality - is a distant dream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For North Korea to evolve into a market economy (if controlled by the Communist Party), it needs to be more confident about its security. The “Candlelight Government,” which succeeded the peaceful citizen protest that demanded the rule of law, is uniquely situated to help North Korea evolve along the Chinese path. It is only when North Korea sees itself in the Chinese mirror, it will see a path forward - and perhaps both Koreas can see a path forward to an eventual unification.

## 원문

### ‘자기 결정’의 시대

우정은 Sweet Briar College 총장

2019년 10월 1일, 베이징은 공산당 집권 7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대를 개막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아 온 중국의 앞날과 같이, 장안 대로를 따라 힘차게 걷는 15,000명의 군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했습니다. 다른 100,000명의 공연자들은 “중국이라는 불가항력(Chinese juggernaut)이 바로 여기에 왔다”는 시진핑 주석의 선언을 발표하기 위한 무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당일 시진핑 주석은 연설 중 “우리의 위대한 조국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어떠한 힘도 중국 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을 방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군대의 퍼레이드 쇼는 중국에 관한 방송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TV 스크린의 단 절반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뉴스를 전달하는 TV 스크린의 또 다른 절반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최루가스, 길거리에서 발생한 화재, 바리케이드, 화염병, 구급차와 폭동 경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상한 대로 십대 청소년들에 대한 발포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넉 달 동안의 저항으로 정점에 달하였고, 이 저항은 홍콩이 속해 있는 “위대한 조국”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홍콩의 귀속 자체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일국양제”는 복잡한 현실에서 탄생한 현명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한 너무나 교활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와 현안의 딜레마라는 두 가지 영상이 스크린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주 흥미롭게 보이지만, TV 스크린에 나타나는 중국에 관한 주된 영상은

세 가지 주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 도광제의 흠차대신이었던 임칙서가 2백 5십만 파운드에 달하는 아편을 영국으로부터 몰수하여 바다에 소각했던, 따라서 영국과의 아편전쟁의 단초가 되었던 장소가 홍콩과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선출되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 의원은 “태생부터 부당한 전쟁이자, [영국]을 영원한 불명예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는 전쟁”이 이전에 영국에 존재했었는지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느끼는 불명예보다 더욱 깊은 도덕적 격분, 현대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이러한 격분한 심정이 평범한 중국인들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결연한 애국자들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홍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서양에 대한 도덕적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러한 채권자로서의 의식이 중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기술력이 더 이상 서양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술력을 통해 중국이 자유를 맞이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야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가상의 스크린 화면을 통해, 제국주의의 영원한 발자취,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기억과 현실, 그리고 중국에 드리운 제국주의의 그늘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드리운 제국주의의 그늘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본 발표문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 투쟁적인 이데올로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유순해진 이념이지만, 자신의 운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결하며, 1919년 이래로 대한민국의 열망이었던 “민족 자결권”에 대해 정의할 것입니다. 이 “민족 자결권”의 개념은 1919년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민족 자결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 이제 달성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위대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달성하기 힘들었던 꿈을 결국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나긴 20세기

3·1운동은 위대한 역사가 에릭 홉스봄이 20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를 “짧은 20세기”로 명명했습니다. 이 “짧은 20세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정치적 관점은 자유주의, 문화적 측면에서는 중산층의 문화로 안정되어 있던 19세기 체제를 와해시키며 시작되었고, 서구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며 종료되었습니다. 이 “짧은 세기”는 여러 측면에서 재앙이었으며, 특히 두 끔찍한 전쟁 사이에 끼여 있던 전간기 동안 그 비극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세기”는 종전 이후의 경제적 번영과 과학 분야의 진보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의미에서는 아주 경이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시민권에 대한 위대한 업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짧은 세기”동안 서구 공산주의가 융성하였다가 쇠퇴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정치의 출현으로 가능해진 이 공산주의는 적어도 서양에서는 이념적 명령에 따르는 체제였습니다. (러시아처럼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처음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양의 공산주의 시기를 수세기를 거쳐 온 진보적 사상의 절정기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직 중국과 북한에서는 붕괴되지 않았으니, 동북아는 독특한 “긴 20세기”의 장소입니다. 서양과 일본의 현대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시아적 공산주의는 대체로 이념적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공산주의가 자체 도입되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치적인 안정감을 주고, 교묘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혼합했습니다. 더욱 경직된 체제인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실용성이 공산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고, 이제는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들도 중국식 실용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접근했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일련의 상황들이 한국의 남반부가 최근의 역사를 통해 경험한 것들입니다. “짧은 20세기”에서와 같이, 서양 세계의 도처에서 순식간에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민족 자결권”, 즉 월슨식 이상주의에 힘입어, 한국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짧은 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만의 국가, 정체성, 그리고 주도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권리를 지향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수반되는 모든 문화적, 이념적 비유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당시 대한민국은 그다지 민족주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종결과 뒤이은 한국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의 억압적 식민 통치라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례를 제시하며 전후 시기에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을 정치 자유화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이뤄냈다는 점이 가장 특출한 점입니다.

“민족 자결권”이라는 월슨식 이상주의에 강력하게 자극 받아 일어난 3·1운동은 2016-2017년의 “촛불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촛불 혁명”은 평화적으로 1,700만이 넘는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그 3·1운동과 같은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짧은 20세기”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공산주의의 영구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적 공산주의

아시아적 공산주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진화하였고 장기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체로 근대 식민주의에 대한 반동의 역사였습니다.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중국인 소작농들을 민족주의자, 또는 심지어 공산주의자로 만든 장본인이 곧 “3대-말살” 정책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약탈한다.)을 행한 일본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담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주의는 적어도 80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담론은 사실상 더 과거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아편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중국에 대한 열강들의 적대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황실이 제국주의의 최악의 목적에 맞닥뜨리게 될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중국의 공산주의가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면, 중국 공산주의의 임무는 당연히 반식민 투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업적이 식민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그 투쟁의 동력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도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78년 이후, 중국의 공산주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상반되거나 반대되는 이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동반자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부를 창출하며 성장하는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사회의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중국 공산주의의 기능은 오랫동안(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모두 아닌) 자유 민주당이 지배한 일본의 “1.5당” 체제나,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독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공산당은 반부패 대책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기타 분배 정책을 통한 중국인의 경제적 평등을 구현하도록 요구되는 유일한 정당이자, 단독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리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도 역시 반식민 투쟁의 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소련의 김일성 후원으로 대외적으로는 위태로워졌지만,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국 소련의 후원 여부보다는 북한 공산당이 반식민 투쟁을 수행하였다는 인민들의 인식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북한 공산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적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외교적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지 수준이 1978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인식의 돌파구를 찾고, 이에 기반해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자신감을 갖지 않고서는, 안정과 경제적 평등의 수호자로서 중국인이 고안한 바와 같은, 회복 탄력성이 훌륭하고 실용적이며 자본주의와 상호 보완적인 아시아적 공산주의가 북한 정권에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결론: “민족 자결권”의 세기

한반도 분단은 식민주의에 기인한 미해결 과제입니다. 김일성이 건국하고 오늘날까지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정통성은, 김일성이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던 역사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동력은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항일 투쟁을 추적 연구하였습니다. 그 투쟁의 동력은 월슨식 “민족 자결권”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자신들의 인간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무르익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군대, 최소한 현재 보유한 133,000명의 병력을 태평양에 배치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철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언급하면, 중국이 태평양과 남중국해 연안을 둘러싼 분쟁으로 전전공공하고 있긴 하나,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스펙트럼은 현재의 불안정한 전체주의 정권에서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북한이 중국과 더욱 유사해지는 것으로, 시장 경제가 번창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중국 친화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보다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행한 시위를 성공시킨 “촛불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길을 따라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 비로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남북한이 궁극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Full Paper

### A Century of “Self-Determination”

Meredith Jung-En WOO

President,

Sweet Briar College

On October 1<sup>st</sup>, 2019, Beijing celebrated 70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rule. In a throwback to another era, 15,000 soldiers goose-stepped along the Boulevard of Eternal Peace, with another 100,000 performers setting the stage for President Xi Jinping’s declaration that the Chinese juggernaut was here to stay, unstoppable as any the world has seen. “No one can shake the status of our great motherland,” he said. “No force can obstruct the advance of the Chinese people and Chinese nation.”

The jaw-dropping show of force, it turned out, occupied only half of a TV screen that was beamed around the world. The other half carried the scenes of violence in the former British colony of Hong Kong, of tear gas, street fires, barricades, firebombs, ambulances and riot police - and almost inevitably, of a teenager shot. The violence was a culmination of four months of protest - not so much against the “great motherland” to which it belongs, but against the terms of this belonging. “One country two systems” may have been a clever solution born of a difficult reality, but it may have been too clever by half.

The juxtaposition of China’s future and its present dilemma was

visually arresting, but the screen could easily have been split three ways. It was not far from the same site in Hong Kong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Daoguang Emperor confiscated over two and a half million pounds of opium from the British empire and dumped it into the sea - thus to give cause to Britain to launch the first Opium War. That was 180 years ago. William Gladstone, newly elected to Parliament, asked whether there had ever been “a war more unjust in origin, a war more calculated to cover [Britain] with permanent disgrace.”

Deeper than the disgrace to the British then is the moral indignation that still lives in the heart of the Chinese now, an indignation still capable of turning an ordinary Chinese into a strident nationalist in a heartbeat. China lost the Opium War, and with it, Hong Kong. What it did win, however, was a moral claim against the West that still motivates them, a sense that the future is now theirs, set free by a technological prowess that no longer belongs exclusively to the West.

The imagined triptych of a TV screen points to the enduring legacy of imperialism - and the memory and reality of resistance against it - and how it still casts a long shadow over China, and as we shall see, Korea as well. In the rest of the paper, which is designed to commemorate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I shall make the case that the notion of “self-determination,” which is benign, in that it is bereft of combative ideologies, and noble, in that it emphasizes the earthly rights of people to own their destinies, has been the aspiration of the Korean people since 1919. This notion, which was unrealizable in 1919, still remains elusive in divided Korea. But many important conditions for collective self-determination -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 are now in place, and it is hoped that

with great courage and wisdom, the Korean people can finally make this elusive dream come true.

## The Long Twentieth Century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oincides with the ending of the Great War, which the great historian Eric Hobsbawm argued launched the twentieth century. He called it the “Short Twentieth Century.” It began with the breakdown of the stable nineteenth century system - capitalist in its economy, liberal in political outlook, and bourgeois in its culture - and ended with the collapse of Western communism. This “Short Century” was catastrophic in so many ways, especially the period that was sandwiched between the two horrific wars. It was also extraordinary in other ways, as in the prosperity and scientific advances in postwar years. It was lasting in its great achievements in civil rights of women and minorities. Above all, it was marked by the rise and fall of western communism. Made possible by the emergence of modern, centralized statehood, this communism was also a system that was dictated, at least in the West, by ideology. An apotheosis, one might say, of centuries of progressive ideas (even if the system was first actualized in a not-so-progressive country like Russia).

Communism has yet to collapse in China and in North Korea - and in that sense, Northeast Asia is uniquely a place of the “Long Twentieth Century.” A system born of resistance to modern imperialism - both Western and Japanese - communism in the East is largely non-

ideological, and therefore, persistent. In China as in Vietnam, communism has adopted itself, providing political ballast in otherwise rapidly changing societies, and commingling with capitalism in ways both brazen and original. The practicality of this communism makes it enduring - with the exception of the more rigid North Korea, but even there the leadership do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nese-style practicality, hence the same old overture to the United States since the mid-1990s.

This is then the circumstance into which the southern half of Korea has experienced its recent history. As with the “Short Twentieth Century,” it entered the century with the ending of Great War, buoyed by so much Wilsonian idealism - “self-determination” - which resonated powerfully with the Koreans even as it was quickly dashed everywhere in the West. It wasn’t so much as nationalistic - with all the cultural and ideological trope that goes with it - as it was aspirational, toward a simple right to have a country, an identity, and a future of their own. Korea then had its own catastrophes - colonial oppressions leading up to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Korean War. It had a remarkable post-war period that ended up one of the most brilliant, outstanding cases in the world of economic growth. Most remarkably, all this was followed by an extended period of political liberaliz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which was powerfully motivated by the Wilsonian idealism of “self-determination,” has come full circle with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2017. The “Candlelight Revolution” was unusual in its scope - more than 17 million people participated - and for its peaceful

nature. It almost looked the century has come circle. Except, there is still the enduring problem of communism that mak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into a long and enduring one.

## Communism in the East

Communism in the East has a long pedigree, evolving in different time and place. Even so, by and large, it was a reaction to modern colonialism. The political scientist Chalmers Johnson argued that it was the Japanese with its “Three-All” policy (kill all, burn all, loot all) that turned Chinese peasants into nationalists, and eventually into communists. This nationalist narrative dates the effective beginning of Chinese communism back at least 80 years. But the arc of the nationalist narrative was actually longer, reaching the time when imperial China was met with the worst intent of imperialism, as in the Opium War and subsequent humiliations inflicted upon the nation.

If communism in China was a response to colonialism, its mission was by definition anti-colonial. If the greatest feat of communism was its capacity to battle colonialism, this same capacity could be used for state-building as well.

Since 1978, communism in China has been *sui generis*, like nothing that the world has seen. It is not antithetical or opposed to capitalism but it is partner to it. It relies on capitalism to deliver growth and wealth, and in turn provides it with what the market is incapable of generating on its own - stability. Looked at it this way, the function of Chinese communism is not all that different than the “one and a half



party” system in Japan, long dominated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neither liberal nor democratic), or the authoritarian dictatorship in South Korea that presided over one of the most spectacular growths the world has seen.

In addition, the communist party stakes its legitimacy on something that it claims only the Party - and the Party alone - can deliver: a measure of economic equality for the Chinese people, through regional and other distribution as well as anti-corruption measures.

Communism in North Korea, too, has an anti-colonial pedigree. To the outside world, this pedigree is compromised by the Soviet sponsorship of Kim Il-Sung, but to the North Koreans, the pedigree is nearly impeccable - but in the end, perception is what counts. Unlike China, however, the communist party has not generated significant private market. What the communists in North Korea lacks is a diplomatic recognition - their own 1978 as it were. Without this breakthrough, and the security and confidence that comes with it, the Communism in the East that the Chinese have engineered - resilient, practical, complementary to capitalism as the guardian of stability and economic equality - is a distant dream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 **Finally, a Century of “Self-Determination”**

The division of Korea is an unresolved problem of colonialism. The dynasty that Kim Il Sung founded and that today rules North Korea derives its legitimacy from Kim’s anti-Japanese struggle in Manchuria

in the Pacific War. The fodder for this struggle was communism.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traces its anti-Japanese struggle to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fodder for this struggle was the Wilsonian “self-determina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45, the conditions are nearly ripe for the two Koreas to begin determining their own fate as people. The United States no longer has clear rationale for deploying troops in the Pacific - at least not to the strength it currently has of 133,000 - and could move to ease the tension with North Korea. As for China, in spite of its nervousness about being encircled along its Pacific and South China Sea coasts, there is a spectrum of regime possibilities in North Korea that China can live with - from the current, brittle, totalitarian regime to a capitalist regime much like South Korea's. The most favorable may be a North Korea that looks more like them: a stable and China-friendly communist country with a thriving market economy.

For this to happen, North Korea needs to be more confident about their security than they currently are. The “Candlelight Government,” which succeeded the peaceful citizen protest that demanded the rule of law, is uniquely situated to help North Korea evolve along the Chinese path. It is only when North Korea sees itself in the Chinese mirror, it will see a path forward - and perhaps both Koreas can see a path forward to an eventual unification.

# 토론/Discussion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PARK Tae Gy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유영주** University of Michigan 교수

**RYU Youngju**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CHEON Jung-hwan**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ersity

**하네스 모슬러** Freie Universität Berlin 교수

**Hannes B. MOSLER** Professor, Freie Universität Berlin



## 원문

### 100년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세기 말 최후의 기념비적인 다큐멘터리는 BBC가 제작한 “민중의 세기”였습니다. 20세기는 민중들이 역사상 첫 번째로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민중들은 다양한 역할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20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정은 교수의 연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은 민중의 세기를 위한 대한민국 민중들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투쟁은 계속되어 1960년 4·19 혁명, 1963년 한일 협정 반대 운동,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2008년 광우병 반대 집회,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2016-2017년 촛불 운동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이후로 대부분의 독립국들은 대대적인 민중저항을 한 차례씩 겪었지만, 1945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중 권력의 저항으로 4차례나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구해근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강한 시민사회와 강한 정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3·1운동 이래로,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특징과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중의 권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 자결권을 관철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번에 급작스럽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달성된 것입니다. 때때로 심지어 사회적 저항은 3·1운동과 부마 항쟁의 경우처럼,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저항도 다음 단계를 위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저항 그 자체만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Woo) 교수가 지적했듯이, 1945년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족 자결권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저항 이후 민중들의 지속적 관심이 없을 때 변화가 이룩될 수 없었습니다. 4월 항쟁과 6월 민주화 운동에서와 같이, 반혁명 세력의 반격으로 구체제로 후퇴하거나 본래의 모순이 재발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보에 대항한 반동은, 사람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을 때를 기회로 반격했습니다. 개혁과 진보를 원하지 않은 집단은 1945-1948년에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썼듯이, 1987년 이후의 시대에 미성숙한 혁명 세력보다 민중들에게 설득력 있는 보수주의의 가면을 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민족 자결 운동은 국가와 개인의 수준에서 동시에 수행되어 왔습니다. 3·1운동 이후 민중의 저항은 민족적 차원에서의 독립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방을 동시에 요구한 것이었다면, 1945년 이후의 항쟁은 독재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극복을 통한 민족자결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민중들의 목표는 국가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다른 수준의 목표들이 깊숙이 함께 결합된 것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집회에서 그 두 가지 목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9년 이후 지금까지의 100년간의 역사를 보며, 다음 100년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봅니다.

첫째로, 다음 100년의 역사에서, 국가와 개인의 수준에서의 민족 자결권은 점진적으로 진보할 것이며, 그 속도는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의 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진보와 변화를 방해하는 다양한 도전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때때로 의도치 못한 외부의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내부적으로 새로운 역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부 환경의 변화와 외부 자극에 대한 내부 반응의 변화 때문에 미래 100년의 변화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조선 시대의 유교적 질서가 붕괴했다고 하더라도, 체면과 도덕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믿고 있는 많은 일반 한국인들에게,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탄생은 1990년대 말까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수준에서 민족 자결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보의 계단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역할의 가면들은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100년간의 사회적 저항 운동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100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적 저항은 시위가 아닌, 불가에서 말하는 ‘온전히 깨어 있는 상태’와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시민 사회의 감시가 없다면 다음 100년의 역사는 이전보다 더욱 쓰라린 시련이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혁명에 대한 반동 세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주도면밀해질수록, 시민들은 진보를 향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다양하고 새롭게 다가올 많은 도전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련들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조만간 단일 민족의 환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이주 노동자와 탈북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은, 한국인들이 19세기부터 경험해 온 시련들을 다시 경험하게 할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적인 수준과 개인적인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권위주의적 시스템 하의 식민지, 전쟁과 분단의 시대의 한국인들이 겪었던 역경과 같은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본 포럼의 논제들은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 도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을 준비하고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시민 사회와 정부,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백일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착실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회는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는 고질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장애물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다음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족 자결권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훌륭히 진보할 것임을 믿습니다. 즉, 민중 저항 운동은 아직 끝나서는 안 됩니다.



## Full Paper

### Next Centennial Vision of Korea Seen Through the Past 100 Year History

PARK Tae Gy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st memorial documentary produced by BBC was “People’s Century” at the end of the 20<sup>th</sup> century. The 20<sup>th</sup> century was the first one when the people played a role as a main actor in human history. People participated at activities directly in diverse levels, and this created people’s uprisings all over the world during the 20<sup>th</sup> century.

As mentioned in the Prof. Woo’s speech,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Korean people’s first great step for the people’s century. And the struggle has been continued through April Revolution in 1960, Anti Korea-Japan treaty movement in 1963, Busan-Masan Uprising in 1979, Gwangju uprising in 1980, June uprising in 1987, Anti American forces campaign in 2002, Anti mad-cow uprising in 2008, Memorial Campaign of Sewol Incident in 2014, and Candlelight uprising in 2016 and 2017. While most of emerging nations experienced people’s uprising once since the 20<sup>th</sup> century, there were four people’s power which changed regime in South Korea since 1945. As Prof. Hagen Gu

mentioned, Korean society shows a model of strong state with contentious society.

The 100 year history of Korea since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shows several characteristics and lessons as below.

First of all, people's power made progress in democracy and self-determination. It was achieved not at one swoop, but gradually. Sometimes even the uprising could not reach its goal as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and Busan Masan uprising shows. However, the failed uprising deserves attention as a turning point for the next step.

Secondly, the uprising itself could not solve anything. As prof. Woo pointed out, self-determination was not achieved in spite of independence from the Japan Empire in 1945. What was accomplished through people's power had been getting elusive or even disappeared without people's continuous concern and participation in post uprising era.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e case of retreatment or recovery of outdated system by the anti-reform group, as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June Uprising shows. Reaction against the progress took advantage of people's unguarded moment. The group who did not want reform and progress had a mask of patriotism in 1945-1948 and that of conservatism post 1987 era, which were very persuasive to the popular rather than immature reform group.

Thirdly, campaign for self-determination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both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simultaneously due to geo-political characteristic.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was the expression of people for both national independence and individual security, while post 1945 people's uprising asked democratization along with

solution for overcoming division and for complete end of war. People's goal in two different level was combined together deeply in South Korea and we could see both in any rally in modern Korean history.

Through the 100 year history since 1919, the next centennial could be anticipated as below.

At first, the self-determination in both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would be progressed gradually, either rapidly or slowly, as we can see history of the past 100 years. Nothing could bother this positive direction since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 believe.

Secondly, diverse challenges would be continued to deter the progress and change. Sometimes it would come from outside without any intention, as the US China trade war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days shows. There is possibility that one of great power who has interest on Korea might not want progress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new challenge would appear domestically. Due to changes in internal environment, internal reaction and challenge in the future 100 year would be very different type and shape. No one expected birth of the Ilbe until 1990s, because general Koreans believe that sense of shame and virtue is operating in Korean society even after the collapse of Confucian Joseon society. There would be diverse new masks to bother any progressive step for boosting self-determination in both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In the end, the uprisings last 100 years are not ended yet and shall continue in next 100 years. The uprising does not mean demon-

stration, but ‘right mindfulness’ in Buddhist word and communication for social consensus. Without supervision by the civil society, next 100 year history might become the period of more bitter ordeal compared to before. People will want to more effective step for progress, while the reaction would be stronger and more deliberate. And the Korean society will face new challenge due to new conditions and environment.

At last, Korean government and leaders should prepare all of options for the future in order to make solutions to diverse and new challenges. The challenges will be more complicate than before. Koreans would possibly have to give up one ethnic family myth in near future. Orientalism in Korean society to Asian workers and North Korean refugees will return boomerang which Koreans experienced since the 19<sup>th</sup> century. Without preparation, Korean society and people would lose opportunity to achieve goals both in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and the result will be disastrous, as Koreans’ experience during the colonial, war time, and era of division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The topics of this forum are composed of future challenges in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the world. In order to prepare solution and to promote positive direction in the future, both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reality and overcome wishful thinking. The future will never go to the direction automatically without serious preparation where people wants to go. And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must escape from the swamp of politicizing every issues. In spite of these serious obstacles, I believe that Korea will achieve great progress for self-determination in the future of 100 years if people

continue to look squarely the reality and to prepare. People's uprising is not and should not be ended yet.

## 원문

### 탈권위주의 시대 한국의 미디어와 촛불 민주주의

유영주 University of Michigan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 세계(world)의 귀감이 되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 날인 2017년 5월 9일, 『워싱턴포스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 문구를 소개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계”란 표현은 제3세계 또는 이른바 ‘저개발 남반구(global south)’만이 아닌, 기사의 표현을 빌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서방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오랜 세월 서양의 전유물이자 가장 득의양양한 정치적 수출품이라고 여겨져 왔던 민주주의를 이제부터는 서구가 대한민국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발표자 우정은 교수가 지적하셨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빛나는 찬사임과 동시에 3·1운동으로 시작된 민족자결주의의 면면한 전통이 2016-2017년간의 “촛불 혁명”을 통해 완결된 형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한국이 겪어온 지난 백 년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에서 한국 문화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는 많은 미국 학생은 K-Pop과 K-드라마에 대한 열렬한 “팬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전통질서가 존재하리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진 채 수업에 임하곤 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현대 한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제 강의에서 함께 다루는 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변의 기정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은연중에 민주주의를 헌법의 “완벽함”과 국부들의 “지혜로움”이 탄생시킨 절대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따라서 굳이 생각해보거나 계속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견고한 어떤 것으로 여기는 까닭에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손으로 더 훌륭하게 가꾸어낼 여지가 큰 정치적 현실이라는 시각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강생 가운데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일부는 환경, 기후 변화, 인종 및 성적 소수자의 권리, 총기 규제, 이민 등, 구체적인 이슈들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들이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난 백 년에 걸쳐 한국 역사의 지형을 형성한 대중적 항의의 물결에 관해 알게 되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또 직접 민주주의가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고 ‘혁명’의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의 학생들이 한국의 지난 세기에 대해 보여주는 그러한 반응들은, “민주화를 향한 불굴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동시대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미국에서 한국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 미국인 학자의 지적을 보다 큰 실감과 함께 되새겨보도록 만듭니다.

그 후 겨우 2년이 지난 오늘, 다시 광장을 밝히기 시작한 촛불에 대해, 2016-2017년 세계를 사로잡았던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는 영미권 언론에서 그 자취를 감췄고, 촛불은 오히려 어려움, 혼란, 위기를 맞은 행정부로, 그리고 극심한 분열을 겪는 나라의 징후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외신의 진단이야말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2019년 다시 타오르는 촛불은 민주주의 위기는 커녕,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른 바 “국론분열”이라 명명되는 이 현상은 “공공성”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서초동과 여의도의 집회를 달군 구호 중 하나인 “언론개혁”이라는 의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 의견을 개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시위자들이 군집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장에서는, “기자”라는 명칭은 기사를 쓰레기와 동급으로 보는 “기레기”라는 전혀 유쾌할 수 없는 합성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공명정대한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언론에 대한 깊은 대중적 불신과 함께, 대중의 알 권리라는 추상적 명제 뒤에 숨어 자신들의 특권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행태는 언론이 마땅히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공익”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치고 대기업 등 자신의 재정적 후원자들을 위한 “홍보”에 급급하고 있다는 시위 참여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관련하여 계몽 기능의 소멸 문제는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집단 지성”에 기초한 정부의 청사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위 “기레기”의 대척점에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줄임말)”이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정보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적 역량이 언론의 권위를 구성하는 전통적 요소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전문성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한국의 대중에 의해서도 폭넓게 구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곳(connected plac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는 5G를 통해)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밀도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쌍방향 디지털화를 향유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에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악조건은 오히려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일상의 삶과 관련된 공통의 감수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공유 그리고 민족적 일체감에 기반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도 한국의 고등교육 관련 인프라는 크게 성장하여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미디어 환경의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양상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먼 미래에나 등장할 현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대해 하나의 테스트베드, 즉 시험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 전 세계에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을



기술한 교과서들은 한국을 주요 사례로 하여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문제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미디어가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특권적 전달체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상실하면서, 향후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 시스템이자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들에 대한 사회의 공공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가에 절대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여론이란 경이롭고 때론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뤄내는 힘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힘을 지켜내는 언론인들이야말로 필시 그 이름에 합당한 공복(公僕)이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이 지난 세기 한국 역사가 우리에게 되풀이하여 가르쳐준 교훈, 다시 말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현 실태로 우리 앞에 보여줄 것인가를 기대 속에서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의 과제일 것입니다.

## Full Paper

### On Media and Candlelight Democracy in Post-Authoritarian South Korea

RYU Youngju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ultures,

University of Michigan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declared The Washington Post on May 9<sup>th</sup>, 2017, the day after the the snap election that installed President Moon Jae-in in office. “The world” was not just the proverbial Third World or the Global South, but also the West where, the article argued, there was now “so much hand-wringing over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Such glowing endorsements that the Republic of Korea now had a thing or two to teach the West about the latter’s most prized political export are no doubt what Prof. Woo has in mind when she speaks of the aspirational century of self-determinism that began with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coming full circle with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2017.

Indeed, one of the acutest joys of teaching about modern Korea to my students in the American Midwest - who often come in on the one hand with preconceived stereotypes of Korea as a traditionalist and hierarchical society, and on the other with ardent fan’s love of all things K-pop and K-drama - is the opportunity it affords to think

collectively through the question of democracy as a dynamic process. For my American students, democracy in the US is a *fait accompli*, and as such, something that requires little active thought or continued intervention. They are not used to approaching democracy as something that they could actually shape with their own hands, too anointed and hallowed it appears to them by the “perfection” of the US Constitution and the wisdom of the founding fathers. Where their activism is concerned then, it is focused on issue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 rights of racial or sexual minorities, gun control, immigration. No wonder these students are awed to learn about the popular groundswells of protest that shaped the very terrain of Korea’s history over the last hundred years, and mesmerized by the fact that direct democracy can yield results and revolutions can take place peacefully. Such reactions of my students to the story of Korea’s past century never fail to remind me of the moving words of one senior historian of Korea: “the Korean struggle has been so enduring that there may be no other country more deserving of democracy in our own time than the Republic of Korea.”

Mere two years later, as candles light up the square again in protest, the “plaza democracy” that so enthralled the world in 2016-2017 is now seen in Anglophone press as a sign of a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trouble, of chaos and crisis, and of a nation thoroughly divided. To my mind, such an account misses the point utterly about what is actually happening on the ground in Korea. Far from representing a crisis in democracy, I would argue that the candlelight protests in 2019 manifest the deepening of it, and that what we are

witnessing is a fierce contestation over the nature and concept of the “public.” Let me elaborate briefly, using one of the current candlelight slogans as a point of departure: “Reform the the Press.”

In the online and offline squares where candlelight protesters congregate, *gija*, the Korean word for a journalist, has been replaced the unflattering portmanteau word that equates reporters with trash: *giregi*. The term reflects the public’s deep loss of faith in traditional news journalism to convey the truth impartially and the protesters’ growing sense that while *giregi* might trumpet loudly the need to preserve their privilege in order to safeguard the public’s right to know, “public interest” (*gongik*) has devolved into “public relations” (*hongbo*) for their corporate sponsors.

The dissolution of the enlightenment function associated with the press is not unrelated to President Moon Jae-in’s declaration in the speech he delivered on the hundredth day of his presidency that his will be a government built on collective intelligence (*jipdan jiseong*). The counter-partner of *giregi* is *kkaesimin* (enlightened citizenry). Access to quality information on the one hand and expertise with which to analyze that information on the other, factors that had constituted the basis of the authority that the traditional press once wielded, is now commanded much more broadly by the general public in Korea in unprecedented ways. South Korea is arguably the most connected place in the world. Technologically, it is the place of the fastest internet speeds (now with 5G) and highest percentage of smartphone users. It enjoys the densest networks of social media and bidirectional digitalization. Socially, Korea boasts a high density of

population in a relatively small territory, and its citizenry is united by a common sensibility regarding everyday life, as well as a shared cultural identity and national history. Educationally, the general level of higher education is the highest among the OECD nations; some seventy percent of graduating high school seniors enter college. The intensity of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these factors together create is utterly futuristic in my view for the rest of the world. This is the reason why I see Korea as a test bed; I have little doubt that in the years to come, communications textbooks the world over will have to be rewritten on the subj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democracy with South Korea as its primary example.

In closing, as the press loses its authority as a privileged vehicle of truth in South Korea, its survival in this century depends absolutely on its ability to regain public trust as a system and industry that delivers public service. Journalists who guard the awesome, terrible, and transformative power that inheres in the democracy of myriad tongues wagging must indeed be public servant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Time will tell whether the candlelight still burning af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can actualize once more the lesson that the past century of Korea's history has taught us repeatedly, that is to say,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 원문

# 100년의 항쟁 전통과 촛불의 다차원 민주주의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항쟁 전통과 공화국

2016-2017 촛불항쟁의 성공 뒤에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항쟁의 전통과 민주공화국의 ‘국민 서사’를 잇고 잠정적으로 완성하는 일처럼 보였다. ‘촛불정부’라는 자처와 ‘촛불혁명’이라는 수사도 그런 일을 상징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한국의 (젊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반공’, ‘애국’ 등이 아니라, 극우·군부 세력으로부터 구해낸 ‘시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또 광장의 주권이 의회나 법 제도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미화했다. 즉 ‘촛불’은 그같은 공화제 민주주의와 항쟁 전통의 갱신을 대유할 수 있다.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10 항쟁 그리고 2000년대의 촛불집회들로 이어진 집합행동의 문화적·정치적 가치는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의 요체로 인식되고 자부심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촛불항쟁 이후 ‘민주주의 국뽕’이라는 흥미로운 말도 생겼다. ‘애국적 공화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인식은 지난 7~8월의 반일 애국주의 대중 직접 행동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촛불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전통과 인민 주권의 형상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촛불 이후’는 안타깝게도 촛불항쟁에서 잠재적으로 합의되고 상상된 것을 완성하고 더 꽃피우지 못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은 물론 100년 민주항쟁 전통의 전유의 문제와 결부되며, 항쟁의 이상과 그 배반의 과정을 곱씹게 한다.

## 2. 현재(1) : 촛불항쟁은 혁명인가? 청원인가?

2016-2017 촛불항쟁에 대해 촛불혁명, 촛불시위, 촛불집회 등의 말이 함께 쓰여왔다. 이는 촛불의 성취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지시한다. 촛불항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헤게모니의 구조와 주체성을 소위 ‘조국 사태’로 인해 대규모 시민 집회가 다시 열리고 여론(또는 마음)이 삼분된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돌아보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촛불혁명’이라는 명명은 과도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촛불항쟁은 기본적으로 전민적 규모의 가두 직접행동(direct action)이었지만, 그 행동의 양상이나 권력교체 과정이 ‘체제 내’ 또는 ‘합법’의 틀 안에 있었다. 촛불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새로운 헌정 질서가 아니라 기존 체제의 정상성의 회복이었던 점이 한계다. 촛불시민들은 스스로 권력을 구성하려 하거나 기존의 법과 행정·사법 기구를 파괴하지 않고, 외려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980년 5·18 광주항쟁 때는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내고 왜곡보도를 일삼은 방송국을 파괴하였으며 ‘시민군’과 ‘수습대책위’를 만들고 일종의 ‘자치’ 공간을 일구었다. 1987년 6월항쟁 때 학생과 노동자들은 전국의 민정당 사무실과 파출소를 공격했다.

촛불의 ‘항쟁’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했지만 전체 과정은 온건하고 결과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촛불은 미완의 혁명’이라고도 한다. 들여다보면 ‘혁명’론의 혼란 속에는 사회 변혁의 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인다. 오늘날 사회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포스트민주주의 또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파탄으로 표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퇴락과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에 결부돼 있다. ‘박근혜 퇴진 시민행동’ 같은 시민 주체는 사라지고 ‘촛불 정치’는 문재인 정부 지지의 제도정치 속으로 회수되었다. 몇 가지 작은 현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구조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 이 정부 들어 양극화의 구조는 더 단단하게 고착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농노'라 일컬어지는 플랫폼 노동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이 정부 들어 최대치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의 완화를 꾀한다지만 역부족이거나(잠정) 실패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혁명'의 정명은 차라리 고전적인 기준, 즉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성립에 회수된다. 경제의 압도적 우위와 다른 버전의 금권정치 덕분에 '혁명'과 경제를 연결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노동존중'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촛불정부라는 자처도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슬며시 사라지고 있다.

### 3. 현재(2) : 촛불의 균열과 다중 민주주의의 전선

'촛불' 내부의 노선 차이와 갈등은 대선에서의 경쟁을 통해 표현되고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조국 사태'를 통해 폭발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여성주의자를 위시한 일군의 시민은 이미 촛불 광장의 한켠에서 '차별 없는 민주주의'와 촛불의 남성연대를 지적했다. 이는 큰 논란을 만들었다. 일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은 '현정부를 옹호하는 것=촛불 개혁'의 등식으로 사안을 바라본다. 그들은 진영정치의 논리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도 경계 또는 적대한다. 열성 지지자의 행동양식과 그들이 개입된 분란은 촛불 이후의 시민정치를 특징짓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전선은 교차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분단이 지속되고 전쟁의 불안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 '민주 대 반민주(독재·극우)의 구도'가 실제로 전선의 주요 구성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정황도 있다. 그런데 '민주 대 반민주'의 표상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는 민주화과정에서도 늘 '다음에'라는 '시기상조론'과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비판적 지지론이 횡행하게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의 장기 전략이자 동원의 전술인 측면이 더 강했던 것은 아닌가?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는 활력을 잃었다. 노동·여성·생태 등의 가치 지향이 유보·억압되는 상황이 사회적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질과 양을 후퇴시켜, 억압의 총량은 더 커지고 극우가 더 활개 치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정치’를 헌정체제만을 중심으로 초점화하는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전일화된 한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인 ‘97년 체제’는 고용불안과 금융화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87년체제’와 ‘97년 체제’는 중첩된다. 이런 견지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은 재벌과 기득권동맹 중심의 경제질서·축적체제와 대다수 민중이 처한 현실로 재해석·재배치되어야 한다.

문제는 ‘중첩’이 내장한 분열이다. 즉 민주주의 전선의 다차원성은 ‘민주 대 반민주’처럼 전선의 통합이나 일관된 동원의 기표가 아닌 ‘분할’로 표상된다. 세대 단절이나 젠더 대립, 그리고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분할로도 표시되는 사회경제적 분단 상태는 극심해졌다. 이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20 대 80 사회’라든가, ‘1대 99’ 등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 변화로 표상되는 생태위기 또한 다른 모순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전선은 이제 언제나 교차하며 길항한다. 범‘진보’ 분파들 사이의 갈등이 항존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현실에 대한 쉬운 진단과 단일한 처방을 피하고자 할 때, 억압과 모순이 교차하고 연관되는 선을 찾고 교차하고 길항하는 전선의 지점들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단지 10:90 또는 1:99가 아니라 광범위한 노동의 분할과 중간층 내부의 격차도 만들어내는 효과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심화된 새로운 불평등의 체계 또한 더 복잡한 차이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같은 ‘분할’은 정당 간의 상쟁이나 투표행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심지어 운동에서도 잘 재현되지 못한다. 최상의 특권계급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10% 또는 20%의 상위계층의 목소리는 더 강하게 가시화되고 나머지 80% 이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

#### 4. 나가며 : 미래 100년을 위한 불쏘시개

2017년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등 가치 있는 다각적 시도를 했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 한편 사회개혁과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명백히 한계지워진 것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장면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역사에서의 위치와 그 반복과 차이를 곱씹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2016-2017 촛불항쟁에서 확인한 항쟁의 전통은 어떻게 시민정치에 새겨져 있는가? ‘서초동 촛불’의 함의는 착잡하다. ‘서초동’이라는 관형어 자체가 촛불항쟁의 주체성의 분기와 동맹의 결손을 의미한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또한 중대한 일반 민주주의의 과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에는 그보다 결코 작지 않은 ‘노이즈’가 끼었다.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다. 한편 ‘조국 사태’의 부가적 효과는, 87년체제와 한몸이 되어온 586세대의 윤리적·정치적 헤게모니의 상실과 ‘장기 1980년대’의 종결을 규범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6-2017년 촛불항쟁에서 내장되었던, 또 그 너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체를 찾아내고 정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민주정부라면 그런 일을 통해 항쟁 전통과 미래 한국 민주주의를 불가역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더 치열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

## Full Paper

### The 100-Year Tradition of Protest and the Multidimensional Democracy of Candlelight

CHEON Jung-hwa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 1. The tradition of protest and the republic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at followed the triumph of the 2016-2017 South Korean Candlelight Protest seemed to promise a continuation of the country's tradition of protest and the republic's "national narrative and bring that narrative to a tentative conclusion. The administration's self-proclaimed nickname "Candlelight Government" and the rhetoric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both symbolize that continuation. The Candlelight Protest helped South Korean citizens, and the young ones in particular, define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as "anti-Communism" or "patriotism," but as the "citizens' democratic republic" saved from the control of far-right militarism, and assert tha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n the (Gwanghwamun) Square is more fundamental than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untry's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 "candlelight" represents a renewal of the republic democracy and the

tradition of protest.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collective actions in South Korea, such as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the April Revolution,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the May 18<sup>th</sup> Democratic Uprising,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nd the candlelight protests in the 2000s, is considered to be at the core of Korea's democratic culture and has become a source of national pride. The Candlelight Protest has even given rise to such interesting neologisms as “Democratic Guk-ppong,” meaning “being intoxicated with the nation's own democracy.” This very notion, which may well translate to “patriotic republicanism,”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the direct, patriotic action that the masses took to boycott Japanese products this past July to August. The Candlelight Protest has become a symbol of the tradition of Korean democracy and people's sovereignty.

Unfortunately,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after the Candlelight” does not represent the realization of the promises that the people tentatively agreed on and imagined the society to be during the Candlelight Protest. This situation is, of course, related to how the 100-year tradition of South Korea's democratic protests has been appropriated, and prompts reflections on the ideals of protest and how those ideals have been betrayed.

## **2. Present (1): Is the Candlelight Protest a revolution, or a petition?**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has also been called “candlelight revolution” and “candlelight rally.” Such different expressions point to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Candlelight Protest. What exactly did the Candlelight Protest mean? How about taking a look at the hegemony and citizen agency of the movement, in the context of massive citizen rallies that took place once again, following the so-called “Cho Kuk controversies, and of divided public opinion on the current situation?

To begin with, the phrase “candlelight revolution” seems an overstatement, which is used more often with political undertones. The Candlelight Protest was basically a direct action that took place on a national scale, but the patterns of the action and the whole process of the power shift remained within the limits of “the system” or “legitimacy.” Among the limitations of the candlelight protest was that it did not lead to the emergence of a new constitutional order, but to the restoration of the normalcy of the existing system. The “candlelight” citizens did not attempt to establish a new power or demolish the existing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rather, they tried to solve the problems using such institutions. During the May 18<sup>th</sup> Movement, in 1980, the protesters drove the military forces out of the city of Gwangju; destroyed the broadcasting company that kept spreading falsehoods and distortion; and organized a “citizens’ army” and “situation control measures committee” to create a sort of space of “sovereignty.” During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the students and workers attacked the offices of Democratic Justice Party and police stations across the country.

Characteristically, the candlelight movement undoubtedly qualifies as “protest,” but the entire process was actually moderate and it

remains to be seen what effect it will bring. That is why some say, “the candlelight protest is an unfinished revolution.” On close examination, amid the chaos of the “revolution” theory, there is the problem of an image of social change. This problem deserves a close look based on the definition of today’s society, and the definition of today’s politics. This problem is closely related to the decline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economic polarization, which are also referred to the failures of post-democracy or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 agencies such as the “Citizens’ Action for the Resignation of Park Geun-gye” have vanished, and the “candlelight politics” were absorbed into the established political system that supports the Moon Jae-in government. Despite a few apparent changes, no changes have ever been made to the established structur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expected to become even worse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For instance, the current government has seen a growing number of platform workers, also known as the new “slav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umber of irregular (part-time) workers reach its peak. The government tries to reduce the economic inequality based on the income-led growth model, but the endeavor has not been successful or is rather a failed attempt. Such fundamental problems revert the “revolution” to the classical standards—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socioeconomic system. The overwhelming dominance of economy and other versions of plutocracy inevitably associates the “revolution” with economy.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headed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respect for labor,” and its self-proclaimed label and reputation as “Candlelight Government” has also started to fade away.

### **3. Present (2): The divide of the candlelight and the pluralist democracy line**

The divide and conflict in the “candlelight” politics is represented by the presidential election competition, and has also been restructured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has recently boiled over amid the “Cho Kuk” controversy. In fact, some groups of citizens, represented by feminists, have already voiced criticism of the “democracy without discrimination” and the male candlelight activists. The criticism escalated into a bigger controversy. Some fanatic supporter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ink of the whole situation as “support for the current government equals the candlelight reform.”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factional politics, they are cautious of, or even hostile to, labor and feminist movements. The behavioral patterns of these fanatic supporters and all the controversies they have been embroiled in have become a criterion by which post-candlelight citizen politics are characterized.

Today’s democratic line in Korea is intersectional and multidimensional. As Korea still remains divided and anxiety about war is still lingering, it is perhaps inevitable that the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dictatorship and far-right)” opposition is at the core of the political landscape. However, the notion of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has also created a vicious cycle. Even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e “prematurity” theory (which always argues for “next time”) and the critical support theory (which argues, “do nothing”) became prevalent. However, was it not the long-term

strategy, as well as the tactic for mobilizing voters, adopted by the liberals, who are represented by Democratic Party of Korea, rather than some unavoidable reality? This has resulted in the loss of vigor of Korea's democracy. When the values of labor, women, and ecology are put on hold and suppressed, it means a move backward in terms of social diversity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democracy. It has created the vicious cycle in which the total amount of oppression increases, while the far right influence grows.

Furthermore, the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notion also runs the risk of narrowing down “politics” and bringing only the constitutional system into focus. Since the IMF financial crisis, Korea has become unified into the 1997 neoliberal system, which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 to people's lives, particularly along with job insecurity and financialization. There is an overlap between the 1987 system and the 1997 system. From this standpoint, the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line needs to be reinterpreted and reorganized into the economic order and accumulation of wealth of the chaebol and the establishment versus the reality in which most masses live.

The problem is the divide in which “overlaps” are embedded.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democratic line is represented by the “divide,” not by the unification of the “democracy versus anti-democracy” line or the signifier of consistent mobilization. The socioeconomic divide, as indicated by the generational divide, the gender conflict, and the divide in the labor class, has become even more intense. The “20 versus 80” society or “1 versus 99” term is not



enough to represent this reality. Even the ecological crisis, represented by climate change, cannot be reduced to another contradiction. The democratic line is always intersectional and antagonistic. That is why there is ongoing conflict among the broad “progressive” factions. This is not the time for an easy diagnosis and an easy cure for this reality. “Politics” should now come down to looking for the area where oppression and contradiction intersect and relate to one another, and recognizing the areas of the democratic line that intersect and contradict.

Lastly,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 socioeconomic polarization is not merely about the 10:90 or 1:99 inequality, but also about the impact of the broader divide in labor and the gap within the middle class. The new system of inequality, which has become more intense, is also creating more complicated differences. However, the “divide” does not reflect well in any interparty strife or voting behavior; it does not even translate well to any political movement. The voice of the top 10% or 20%, who seem opposed to the power elite, has become even more strongly visible, whereas the voice of the bottom 80% has become hardly audible.

#### **4. Conclusion: the next 100 years**

Since its 2017 inaugura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made noteworthy attempts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outcome is not entirely satisfactory. The government's endeavors to effect social reform and

achieve a democracy without discrimination obviously have their limita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flect on the positions taken by the Chang Myon government,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current government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repetitions have been made and what the differences have been among them.

How has the tradition of protest manifested in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been integrated into citizen politics? The “Seochodong Candlelight” has some troubling implications. The qualifier “Seochodong” itself signifies a crisis in the agency of the Candlelight Protest and a breakdown of the alliance of the protest. The candlelight rally in support of the prosecution reform was also aimed at reaffirming the significance of commitment to democracy in general, but it involved some “noise” that was not so small—which is the problem of class and inequality. The “Cho Kuk controversy” incidentally normalized the loss of the ethical and political hegemony of the “586 Generation,” who aligned themselves with the 1987 political system, and the end of the “long-running 1980s.” Then, it is our duty to discover and establish the agents of a new democracy embedded in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or those who are beyond the protest. By fulfilling these duties, a democratic government in South Korea should commit itself to making the country’s tradition of protest and its future democracy irreversible.

## 원문

### 한국인의 지속적인 자결에 대한 의지

하네스 모슬러 Freie Universität Berlin 교수

Meredith WOO 총장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인의 오랜 역사 - 3·1운동이 아시아의 오랜 20세기의 이러한 의지의 요람이 되었다고 지적한 점에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세기 말에 이미 조선 사람들(demos)이 계몽운동, 독립협회와 같이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하기(cratia)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전이 사람들이 국민으로서의 자유, 국가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자부하고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1919년 3·1운동이 유일했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이상은 한국 최초의 헌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한국의 독립운동은 자결과 민주주의의 조건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질적인 과정의 결과로 국가분단이라는 희생을 대가로 하는 중요한 상황이 1948년에 발생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중운동은 자결과 민주주의의 이행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21세기 초 두 정부의 전복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시작되었고, 일련의 진화하는 촛불운동이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2017년의 “촛불 혁명”은 한국의 자결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의 1조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은 자신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확인 시켰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당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즉 부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시작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민주적 자기확신과 자기 결정에 대한 투쟁이 마침내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 엘리트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되돌려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대중 시위는 전 세계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3·1 독립운동 후 1세기가 지난 최근에 증가한 이러한 시위는 1919년 이래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 국민의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자결을 실현하는 데에는 큰 도전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대중시위는 제도화된 정치 분야에서 국민의 의지와 그들의 대표 사이의 넓은 격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 대표 민주주의에도 도전하는 정치 양극화로 심화된 정치 집단 사이의 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향후 수백 년 동안 한국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내 적대적 지형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동북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상호 구성적인 국가 분단과 한국 내의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이중 분열은 단순히 절단할 수 없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어려운 문제)이지만 조심스럽게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주권과 함께 국민들이 엘리트들과 진정으로 화합하려는 노력의 빛나는 사례인, 1919년 3·1 독립운동에서 태어난 한국 임시정부의 대의를 지지하고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공은 지속 가능한 자결을 달성하려는 한국 국민의 지속적인 결단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 Full Paper

### The Korean People's Continuous Determination to Self-Determination

Hannes B. MOSLER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President Meredith Woo is right in pointing out the long history of Korea's people struggling for liberty, peace, and democracy -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being the cradle of this determination in Asia's long twentieth century. Of course, already at the end of the 19<sup>th</sup> century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by the Joseon people (*demos*) to take their fate into their own hands (*cratia*) such as in the Enlightenment Movement, the Tonghak Peasants' War, and the Independence Club. Nevertheless, it was only at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n 1919 that this evolution culminated in the people self-confidently and explicitly articulating their will and demand for freedom as a people, independence as a n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with others. In other words, having developed a self-assurance the Korean people forcefully, yet peacefully, requested the right to and conditions for self-determination. These ideas and ideals were institutionalized in Korea's first constitutions, and put into practice in the Republic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form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struggled for the conditions for self-determination and democracy. A milestone in this respect was achieved in 1948, though as a result of a heteronomous process, and at the price of national division. Through the decades of the century's latter half, popular movements in Korea fought for the implementa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democracy. With the two government turnover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slowly but surely democratic consolidation started to set in, and an evolving sequence of candlelight movements marked a new level of the people expressing their will, one that demands more quality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2017 marks yet another turn in Korea's history of self-determination. Chanting the first article of the constitution the people unequivocally confirmed to themselves as well as to the political elites that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that]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m]". Eventually, the people pressured political parties to fulfill their duty, that is, to initiate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the corrupt president. Put differently, the people's democratic self-assurance and their struggle for self-determination finally came full circle, and, in so doing, once again put right what political elites had done wrong.

These peaceful and self-confident mass demonstrations in Korea were praised all over the world, justifiably so. At the same time, these recently increasing protests, one century after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lso indicate the great challenge to realizing

self-determination in the sense of the republic's people's sovereignty as it has bee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ince 1919. In other words, the popular protests indirectly show the wide gap between the people's will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al arena. This is closely related to rift between political camps that has been deepening into political polarization contributing to challenging a functioning representative democracy. Korea's biggest challenge for the next hundred years is to address this domestic antagonistic topography adequately, also because this will be crucial for responding effectively to the geopolitical challeng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is double division of mutually constitutive nation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tical polarization within South Korea represent a Gordian knot that cannot simply be cut, but has to be cautiously untied. For this to happen it will be important to upholding and further establish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which is a shining example of a genuinely concerted effort by the people together with the elite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people's sovereignty. Success will depend on the whole Korean people's continuous determination and efforts to achieving sustainable self-determination.



사회 - 박찬승 교수



발제 - 우정은 총장



토론 - 박태균 교수





토론 - 유영주 교수



토론 - 천정환 교수



토론 - 하네스 모슬러 교수



# 제2세션(Session 2)

## 한반도·대외관계 Korean Peninsula & its External Relations

3·1운동 100주년: 비폭력 반제국주의 정신을 이어 평화의 한반도 미래 100년으로  
Centennial Anniversary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Continuing the Non-violent Anti-Imperialist Spirit, Towards Future  
Century of a Peaceful Korean Peninsula

발표

Presentation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쟁

Korea's Struggles for Survival and Peace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 KIM Ki-ju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토론

Discussion

스펜서 김 CBOL 회장 /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 Spencer KIM CEO, CBOL / Co-founder, Pacific Century Institute

서재정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교수

/ SUH Jae-Jung Professor,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정계영 Fudan University 교수

/ ZHENG Jiyo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발제자료 / Presentation Paper

#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쟁

Korea's Struggles for Survival and Peace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KIM Ki-ju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요약문

###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쟁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은 가난한 피식민지 국가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한국의 외교는 한국인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심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취약성은 자신들의 운명이 강대국과 주변국가가 내린 결정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근대적 국제질서에 통합된 이후로, 한국은 생존을 위하여 균세 전략, 중립화 전략, 저항과 투쟁, 그리고 동맹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외교정책 중 어떤 것은 정치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통일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생존 담론에 압도되어 있는 인식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취약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만든 심리상태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기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생존 담론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미 주어진 지역적 정치 상황에서(예컨대, 현상유지), 제한된 사고 체계 안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고 형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공존을 향하여 나아가갈 때, 생존에 대한 민감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은

국제정치 게임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더 안전한 상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외교적 의제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떼어놓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에는 ‘국가 간 영역’과 ‘민족 내부 영역’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이와 동일한 관점과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 구상이 평화 유지, 평화 조성, 평화 구축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제정치 영역과 민족 내부 영역이 함께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평화 유지, 평화 조성, 평화 구축 단계를 거치고서, 달성해야 할 한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체제의 확립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과 지역안보를 위한 새로운 안보 구조(architecture) 구축을 포함한 것이어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촉진자 전략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외교적 플랫폼’과 ‘외교적 기동성’을 또한 확장해야 하고, 그동안 사고와 행위의 범위를 좁혀왔던 한계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기동성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을 요구합니다.



## Abstract

### Korea's Struggles for Survival and Peace

KIM Ki-j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Over the last 100 years,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has changed dramatically, from a poor and colonized country to the ten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Korea's foreign policy behaviors have been an expression of how to overcome Koreans' deep-rooted sense of vulnerability. Koreans' sense of vulnerability was derived from the belief that its fate lied in the hands of larger and neighboring international powers. Since its integration into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Korean have pursued such foreign policies as balancing strategy, neutrality, resistance, struggles for independence, and bilateral alliance. While some of them ended up with political failure, the alliance with the US has guaranteed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of South Korea. It has provided stability on a divided peninsula, but not a solution for unification.

South Korea was now a top ten player in the world ranking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s. Despite this huge feat, South Koreans have a tendency to think within the framework of survival. This is due not only to their memories of vulnerability but to the mentality derived

from a geopolitical condition. For a next century, however, a new strategy should be mapped out and designed.

Discourse on survival is important. However, it should not be discussed within the limited framework of a given set of regional political circumstances (i.e. status quo) but within a broader conversation on how Korea could transform and shape a regional order fitted for Korea's sustainable survival. Moving away from confrontation and conflict, and towards peaceful co-existence, will minimize survival sensitivity. For the past 100 years, Korea has been the victim of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has a right - and furthermore a responsibility - to insist on safer conditions in the regional politics.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top priority on South Korea's diplomatic agenda for the near future. Peace in the Northeast Asia will be unthinkable with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two domains that shape 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domains. The peace initiative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examined from the same lens and context. An informed discussion cannot occur when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spheres are separated, even when the peace initiative is comprised of three parts: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The ultimate goal for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phases of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sh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including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 new architecture for regional security.

With the next 100 years in mind, South Korea must center its

diplomacy around the facilitator strategy, in order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Koreans need to expand their imaginations and creativity. South Korean diplomacy needs to expand its platform and diplomatic maneuverability as well, liberating itself from limitations and constraints. Maneuverability calls for flexible thinking and strategy.

## 원문

#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쟁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및 유산들에 관한 짧은 역사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독립 요구의 민족적 외침은,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억압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횃불이었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식민지배, 분단, 전쟁, 극도의 빈곤 상태, 그리고 권위주의를 포함하여, 과거 100년간의 고된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목표로서 “신한반도 체제”를 제안하며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이 과거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은 가난한 피식민지 국가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활동은 한국인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심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취약성은 자신들의 운명이 강대국과 주변국가가 내린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은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귀결된, 제국주의 열강들이 벌인 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역시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해방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패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한국사회의 혼란은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해방에 이어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실로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의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의 한국인들은 극도의 가난, 군사 쿠데타, 권위주의 정권의 잇따른 등장,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풀뿌리 수준에서의 사회적 운동이 낳은 민주화를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100년여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한국의 성공담을 만들었습니다.

외교정책은 전략과 실천의 영역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기념비적 성공을 이룩하는 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외교정책의 성과는 부분적 성공에 불과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이 이어지던 시기, 한국은 중립 상태를 지키면서 균세전략으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균세전략은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력은 한 때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드러낸 이후 러시아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이 소망했던 균형 상태는 오직 일시적으로만 존재 하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사이의 일시적 세력균형은 사실 열강들 간 적대감의 균형이었고, 한국인들을 향한 폭력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균세전략도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담한’ 외교정책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러일전쟁 직전 한국의 중립 선언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이 열망했던 중립적 지위는 주요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희망적 사고(wishful-thinking)에 불과했습니다. 균세와 중립 전략은 한국에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가해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지배층은 한국과 서구 열강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 속에 전술상 포함되어 있던 것에 불과했던 ‘우호적 중재 조항’(good-office clause)에 내재된 한계를 이해 하기에는 지나치게 순진하고, 또 경험 역시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국제법에 대한

지배층의 무지는 국가주권이 협정(agreement)에 의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국의 지배층은 국민들이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에 저항하도록 설득하거나, 국민들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 강탈당하자 분열된 지배층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의병’을 조직하고, 전국적인 반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이 반일 운동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행한 외교활동과 주로 만주를 무대로 했던 무장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외교활동과 무장투쟁 모두 주권회복의 즉각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 한국인들의 결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된 한반도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쟁과 군사적 대치상황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남한) 정부는 그 시작부터 생존을 위해 한반도 바깥에서 지원세력을 찾았고, 이는 한반도의 취약성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하였던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분단된 한반도에 안정을 주었으나, 통일을 위한 해결책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의 원천이었지만, 남한사회의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의존성’(dependency)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 2. 다음 세기를 위한 평화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취약성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주권 상실, 그리고 전쟁의 경험과 기억은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시켰고, 전략 담론의 한 부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위상의 변화를 이루어냈고,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대 군사적, 경제적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생존 담론에 압도되어 있는 인식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취약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만든 심리상태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이 주된 고려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더라도, 다음 세기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과거 70년간 동맹은 한국의 훌륭한 전략 선택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시대에도 여전히 양자동맹이 생존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생존 담론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지역적 정치 상황에서 (예컨대, 현상유지), 제한된 사고 체계 안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고 형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불안정한 지역적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생존 담론의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공존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생존에 대한 민감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은 국제정치 게임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더 안전한 상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될 한반도 체제는 이러한 가치들을 아우르면서, 폭력의 시대를 넘어 평화 시대를 위한 희망, 단절의 시대를 넘어 연결의 시대에 대한 소망, 한국에 강요된 희생을 넘어 동북아시아 인접 국가들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새로운 체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외교 의제로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이 “분할된 채 관리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또 항상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지역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의 주창자(init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갈등이 한반도 분단 구조를 지배해 왔습니다. 분단은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내린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지만, 또한 냉전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정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평화적 공존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국가 간 영역’(international domain)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 내부의 영역’(intra-national domain)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이와 동일한 관점과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평화 구상이 평화 유지, 평화 조성, 평화 구축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제정치 영역과 민족 내부 영역이 함께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평화 유지는 억지(deterrence)에 기반한 현행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평화 조성은 남북한 관계에서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평화 구축은 남북한이 단일시장을 공유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 한반도 갈등과 대립 질서의 역사도 국제정치 요인과 민족 내부 영역의 정치적 결정이 결합되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평화 조성, 평화 구축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치 영역과 민족 내부 영역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한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합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향해 거쳐야 할 각 단계를 만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 유지, 평화 조성, 평화 구축 단계를 거치고서, 달성해야 할 한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체제의 확립이어야만 합니다. “체제”란 여기서 인식, 행위,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아래에서 남북한 요인과 국제적인 요인이 상충되지 않고, 양립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현존하는 적대적 공존(평화 유지) 상태와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대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이 체제와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으로써 이해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확립은 민족 내부와 국가 간 영역에서 또한 설명될 수 있는 평화 조성과 평화 구축 단계를 거쳐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결하면서 휴전 협정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협정이 4자간 협정(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의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복수의 양자협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자 협정을 통하여 여러 개의 양자적 조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정에는 주권, 휴전 협정 공식 종결, 정치적 화해,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비핵화, 경제 교류 및 협력, 외교적 관계 정상화 선언,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UNC) 해체에 대한 상호 승인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협정은 동북아시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역 안보 구조(architecture)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구조는 특히 비핵화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성공할 경우에는 지역 안보 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안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증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게 핵과 관련된 사안은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후 안보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몽골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안보 협력은 동북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도화하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예방 외교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자간 안보 협력의 목적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호 동맹을 고려하여, 그 시작은 동맹과 다자간 안보협력 체계의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촉진자 전략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상대적 약소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순응적 태도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외교는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교적 기동성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고와 행위의 범위를 좁혀왔던 한계와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적 기동성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을 요구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추국가(pivot state)로서, 한국은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레버리지를 언제 사용할지, 혹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유연한 외교 전략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추국가의 피벗팅 전략은 개방성, 연결에 대한 비전, 협력의 원칙,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들을 주관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수준의 외교적 대안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Full Paper

### Korea's Struggles for Survival and Peace

KIM Ki-j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1. Short History of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y and Legacies

The year 2019 marks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The nation-wide cry for independence came as a beacon of hope to Koreans who at the time were deeply oppressed and agoniz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resident Moon Jae-in remarked in his speech that Koreans successfully overcame such formidable challenges in the last 100 years, including colonization, division, war, extreme poverty, and authoritarianism. He declared the commencement of a new century, moving past a painful one, advocating a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t describes a vision and symbolizes a determination that Koreans will never repeat the tragedies of the past.

Over the last 100 years,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has changed dramatically, from a poor and colonized country to the ten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s a relatively small state in the corner of Asia, Korea's foreign policy behaviors have been an expression of how to

overcome Koreans' deep-rooted sense of vulnerability. Koreans' sense of vulnerability was derived from the belief that its fate lied in the hands of larger and neighboring international powers.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Korea fell victim to rivalries between large imperial powers, which ended in multiple wars. Colonization by Japan in 1910 was also a product of the imperialist intrusion of the Peninsula.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came as a result of Japan's defeat to the US in the Pacific War. Even after the liberation, turbulence in Korea continued with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to two states: the Korean War ensued, leading to a long and sustained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The Koreans in the South also experienced severe poverty, a military coup, a series of authoritarian regime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grassroots social movements resulting in democratization. These events over the last 100 years make up the Korean story of remarkable success.

Foreign policy, in strategy and practice, has been an undeniable agent of the monumental transition that occurred amid the turbulence. However, it was only partially successful. During the imperialist intrusion, Korea tried to seek for safety by employing a balancing strategy while maintaining neutrality. The balancing strategy aimed to maintain balance of power by using one power to check the other's aggression. Japan's power was once perceived to check a Chinese dominating influence, while Russia emerged when Japan expressed explicit hostility against Korea. These strategies all ended in failure. The balance that Korea desired existed only temporarily. Indeed, the temporary balance of power surrounding Korea was the phase of

intensified hostility, and indeed, balance of aggression to Koreans. A balancing strategy in any form would have never succeeded without a courageous foreign policy, possibly incurring risks. The neutrality Korea declared just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was never recognized by outside powers. The neutral stance that Korea desired was nothing but wishful-thinking of non-involvement in the major powers' entanglements. Strategies of balancing and neutrality did not provide Korea the protection it needed to withstand against pressures from imperialist aggression. The Korean ruling elites of that time were too naïve and inexperienced to understand the limits of a 'good office clause' tactically included in the treaties Korea had signed with the West. Moreover, their inexperience in international law was painfully evident in their blind belief that a nation's sovereignty would be respected by agreements. Ultimately, the ruling class failed to persuade and mobilize the people to fight against external influences encroaching on their statehood.

As Korea's sovereignty was stripped by Japan, ordinary people of Korea, not the fragmented ruling elites, took it upon themselves to resist colonization of the peninsula. They formed a 'righteous army' and launched anti-Japanese fights across the country.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was a culmination of such events. During Japan's colonization, Koreans' struggles for independence manifested in two strategies: in diplomacy carried out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in armed struggles mostly in Manchuria. Both failed to provide immediate solutions to restore independence, but more importantly, symbolized the resolve of Koreans in their continued

quest to survive.

A divided peninsula after the liberation posed a set of new challenges for Koreans: war and confrontation. From the time of its inaugu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arched for outside supporter for survival, which appeared as a form of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at dramatized a sense of vulnerability. The alliance has guaranteed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of South Korea. It has provided stability on a divided peninsula, but not a solution for unification. While being a source of stability and security, the ROK-US alliance also produced an unintended side-effect of dependency from South Koreans.

## 2. Peace for the next century

In retrospect, South Korea's overarching concern in diplomatic strategy was in regards to their vulnerability. Experiences and memories of lost sovereignty and war have prompted Koreans to keep it part of their discourse of strategy. Yet South Korea achieved a major milestone, marking a shift in international affairs: South Korea was now a top ten player in the world ranking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s. Despite this huge feat, South Koreans have a tendency to think within the framework of survival. This is due not only to their memories of vulnerability but to the mentality derived from a geopolitical condition. For a next century, however, a new strategy should be mapped out and designed even if national survival would be considered as a principal concern. Few people can be convinced that

the current bilateral alliance will be the only path to survival for the next 100 years, as it has been for the past 70 years.

Discourse on survival is important. However, it should not be discussed within the limited framework of a given set of regional political circumstances (i.e. status quo) but within a broader conversation on how Korea could transform and shape a regional order fitted for Korea's sustainable survival. If Korea finds itself in an unstable regional situation, it will find it difficult to escape a survivalist frame of mind. Moving away from confrontation and conflict, and towards peaceful co-existence, will minimize survival sensitivity. For the past 100 years, Korea has been the victim of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has a right - and furthermore a responsibility - to insist on safer conditions in the regional politics.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encompasses these values, and signals a hope for an era of peace, transcending one defined by violence. A hope for an era of connection, transcending one defined by detachment. A request to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its Northeast Asian neighbors, transcending a time when sacrifices were imposed on Korea.

Peace in the Northeast Asia will be unthinkable with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top priority on South Korea's diplomatic agenda for the near future. The perception of a divided Korea in a constant state of "divide and conquer" or confrontation needs to change. South Korea is tasked with this responsibility, having to act as an initiator of peace.

The dominant structure of the division was one of conflict. It was the result of political choices both regimes in North and South have made,

but was also the produc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politics of the Cold War. This structure of conflict must be converted to a structure of peaceful co-existence. There are two domains that shape 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domains. The peace initiative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examined from the same lens and context. An informed discussion cannot occur when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spheres are separated, even when the peace initiative is comprised of three parts: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Peace-keeping refers the current strategy based on deterrence, while peace-making aims to reduce military tensions through operational arms control in inter-Korean relations. Peace-building could be achievable when North and South Korea share one-market Korea.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factors have worked in tandem even during periods of confrontation and unstable peace, as both Koreas have used outside forces (i.e., alliances) to retain hostility, which became the source of the so-called antagonistic coexistence structure on the peninsula. The same goes for phases of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Contemplative cohesion of both intra and international domains is imperative; each phase toward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unobtainable without political agreements on both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ultimate goal for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phases of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sh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Regime” here encompasses notions of perception, action, and institution, in which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factors ought to be compatible.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must supersede the existing state of antagonistic coexistence (peace-keeping) and unstable peace, and be understood and built as a process in which the principle of peaceful coexistence is employed into system and practice. The installation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s the objective, which follows stages of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that can also be explained in two domains, intra-national and international.

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officially would end the Korean War and effectively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hile this can occur as a four-way treaty (South Korea, North Korea, U.S., China), it can possibly arise in parallel with multiple bilateral agreements; endorsing multiple bilateral agreements through a multilateral agreement. The peace treaty can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official termin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political reconciliation, military trust-buil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declaration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dissolution of UNC.

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i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n peace order. We will need a new architecture of regional security to shape and maintain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A new architecture is necessary especially because denuclearization process, if succeeded, would produce profound changes in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t will be also a signal of international commitment to North Korean national security.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agenda advanced to ensure its own national security,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s post-denuclearization security is inevitable. One option may be the establishment of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consisting of the two Koreas, U.S., China, Russia, Japan, and Mongolia. Thi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strive to institutiona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Northeast Asia's regional issues and encourage preventive diplomacy as a means to deter conflicts in advance. The goal, therefore, should be arms control and military trust-building on a regional leve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isting bilateral alliance, our starting point should focus on the cultivation of the alliance and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next 100 years in mind, South Korea must center its diplomacy around the facilitator strategy, in order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n order to do so, Koreans need to expand their imaginations and creativity. As a relatively smaller power, Koreans have remained compliant in their thinking and actions; it is now time to adopt an assertive frame of mind. In fact, South Korean diplomacy needs to expand its platform and diplomatic maneuverability as well, liberating itself from limitations and constraints. Maneuverability calls for flexible thinking and strategy. As a pivot state of Northeast Asia, South Korea is now equipped to change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It is hard to anticipate when we will act on this leverage or whether we will at all, but there is no need to be apprehensive of a flexible diplomatic strategy. The pivoting strategy of a pivot state calls for psychology of open-mindedness,

vision of connection, principle of cooperation, and a diplomatic bandwidth large enough to host a variety of options.



# 토론/Discussion

**스펜서 김** CBOL 회장 /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Spencer KIM** CEO, CBOL / Co-founder, Pacific Century Institute

**서재정**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교수

**SUH Jae-Jung** Professor,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정계영** Fudan University 교수

**ZHENG Jiyo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 원문

### 미래 전망-대한민국 계획

스펜서 김 CBOL 회장 /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예측을 하지 않는 사업은 쇠약해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직업으로 삼은 사업가입니다. 저는 전망을 예측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것이 미래의 사업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버드에서 레지던트 펠로우로 일년을 보내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전망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살펴봅시다. 191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외교는 1880-1910년 당시의 다양한 변화 즉, 현대화, 기술화, 산업화, 제국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의 지도층의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이 실패는 식민지화, 빈곤, 굶주림, 내전과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반응은 많이 달랐으나 “다시는 안 된다”는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남한은 다시는 지배당할 정도로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을 따랐습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국방체계를 미국에 위탁하였고 일본의 배상금과 미국의 지원을, 최고의 글로벌 모델을 통하여 투자하였고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발전에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남한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독립을 선택하였습니다.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영향을 철저히 폐쇄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지적 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도자에 대한 모든 정치적 이견을 거부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국민과 지도자는 한 유기체가 되어야 했으며 그 나름대로 북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반도의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운 미국 주도의 안보 구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파괴와 격변을 일으켜 공백을 만들었고, 미국이 그 자리로 끌려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것을 관찰하다가 급기야 성장을 한국 내로 국한시키고,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비한 방벽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와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개혁을 독려했습니다. 군사비용을 낮추고 경제적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 두 국가들에게 방어와 핵무기라는 우산을 제공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제품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거대한 경제와 군사력, 지리적 규모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과 일본에게 전략적인 깊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세의 근본이 됩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서 미래 100년을 예측하면, 여러 동향은 기존의 정세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에 보증을 확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이 된,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왜 국방비를 지불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미국에게 여전히 이익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타당한 답은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비 예산보다 그 이자에 대한 지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 지구온난화, 보건이나 교육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해외 보증 삭감을 위한 주장은 동북아시아에 현존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질서를 위한 미국의 헌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적법성은 굴욕의 세기를 바로잡아 중화 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시진핑 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지배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싸드(THAAD),



미국 프로 농구 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티벳, 홍콩, 대만과 위구르, 남중국해 등에 대한 최근의 강경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상하는 중국의 가공되지 않은 힘은 21세기의 가장 주된 화두입니다. 중국은 일본, 남한과 북한에 자신의 뜻을 강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능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빠른 인구 노령화, 그리고 수출과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로 인해 당이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개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힘에 직면하게 되면 공격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실질적인 일개 성이 될 위협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경제를 다변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기는 미국의 제재로 이어져 도리어 중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또한 잘 사는 남한에 너무 의지하게 되어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활기차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포함한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보-보수 정치가 북한 및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관해 가지는 관점이 매우 달라 장기적인 양당정책이 시급합니다.

일본은 인구 통계적, 재정적 이슈가 결합된 거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령화 및 인구 감소,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부채 문제입니다. 군사 잠재력은 헌법으로 인해 제재당하고 있고, 수정주의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이들은 보수파 정치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일본과 동등하다는 것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 지도자들은 1880-1910년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위기를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적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조약기구의 설립을 해결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또는 안보관련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약에 메커니즘을 포함시켜 경제적 무역과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중국, 미국, 일본, 북한과 남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동등한 멤버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책임을 줄이되 조약타상토론에 자리를 제공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이 지역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비핵화된 북한에 미국이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남한과 북한이 평화와 협력에 집중하여 흡수 없이 상호 간에 동의하는 통일을 향한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조약기구를 활용하여 일본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군사 및 경제적 시안에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 Full Paper

### Future Trends, Korean Planning

Spencer KIM

CEO, CBOL

/ Co-founder, Pacific Century Institute

Businesses that do not anticipate, suffer. It is the same for countries. I am a businessman by training and profession. I have learned the necessity of anticipating trends which will affect future business prospects. I spent a year as a resident fellow at Harvard where I studied the future trends I believe will affect the Korean Peninsula. Today I give you my conclusions.

But first, let's look at how we got to today. Korea's external relations from 1919 to 2019 have been dominated by the failure of Korea's leadership 1880-1910 to respond to the great changes that were happening at that time. modernization,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imperialism. Their failure brought colonialization, poverty, humiliation, civil war and destructi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sponded very differently, but with the same goal of "never again." South Korea followed a policy of never again being weak enough to allow domination. It outsourced the high cost of defense to the US; invested Japanese reparations and US aid; chose the best parts of global models; focused resources o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South was basically successful.

The North chose radical, rabid independence based on domestic military strength. It chose to seal out foreign influence and reject any political dissent to a deified leader who claimed he needed absolute loyalty to protect his people from outside threats. The people and the leader are to be one organic entity. In its own way, the North was also successful.

So where are we today? Simply p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dominated by the US-led security architecture that was built up after World War Two. The war brought destruction and upheaval that caused a vacuum into which the US was sucked. Washington first watched as communism expanded in China and North Korea, but then decided to contain its growth in Korea and make occupied Japan a bulwark against communism.

The US concluded defense treaties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It pushed for democratic reform. It provided defense and nuclear umbrellas that allowed the countries to keep military spending low and invest in economic development. It provided markets for Japanese and Korean goods. Its enormous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and geographic size, provided strategic depth to Korea and Japan's relatively small size compared to Russia and China.

This is the fundamental basis of today's status quo. But looking at th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equation as the next one hundred years unfolds, many trends tell us the existing status quo is highly unlikely to remain in place.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has asked the question why the US has extended guarantees to 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pays so much for their defense when they have become wealthy themselves and often run trade surpluses with the US. There are solid answers to why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still serves US interests. But Trump has rung the bell questioning why and it cannot be un-rung. Current projections are for US budget deficits to increase dramatically over the next decades, with interest becoming a bigger expense than defense budgets. There are also increasing calls for more spending on social issues, global warming, healthcare and education. Eventually calls to cut back on America's overseas guarantees will impact America's commitment to the existing post-WWII order in NEAsia.

China.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is based on rectifying the Century of Humiliation and restoring the glory of the Middle Kingdom. Under Xi Jinping, China is exercising its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to bend others to its will. witness THAAD, the recent hardline against America's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Tibet, Hong Kong, Taiwan, the Uighurs, South China Sea, etc. The rise of Chinese raw power is the biggest story of the 21<sup>st</sup> Century. China will try to enforce its will on Japan,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China's capability may be somewhat crippled by two factors. Its population is aging rapidly; and, its economy is reliant on exports and debt; the Party may not be able to make necessary revitalization reforms. So China may be less aggressive if faced with strength.

North Korea has boxed itself into a situation where it faces the threat of becoming a de facto province of China. It desperately wants to diversify its economy. But it also faces a US military threat and nuclear

weapons to deal with that threat have brought sanctions, forcing even greater reliance on China. North Korea also fears becoming too reliant on the prosperous South could lead to unification by absorption.

South Korea is vibrant but has an aging population and an economy reliant on trade, including with China. Most problematic, its progressive-conservative politics have very different views on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NE Asia while a bipartisan long-term strategy is what is needed.

Japan has an enormous combined demographic and fiscal problem: It has an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 and the worst national debt problem of any developed country. Its military potential is held back by its constitution. Revisionist views on history make its conservative politicians unable to see Korea as Japan's future equal.

Given Trends, What Can Leaders of Korea Today Do To Avoid A Repeat of 1880-1910?

Use the nuclear crisis as an opportunity. Push creation of a strong regional security/economic treaty organization as the solution. Put mechanisms in treaty to arbitrate economic or security disputes and promote economic trade and development.

Include China, US, Jap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maybe Russia, as equal members.

Lessen US long-term responsibility but give it seat at the treaty organization table; keep it engaged in the region as long as possible.

Assure denuclearized North Korea of no US attack; North and South focus on peace and cooperation with no absorption, but path of mutually agreed reunification left open. Use the treaty organization to

allow Japan to be a “normal” country; with a strong military.

Two Koreas, Japan closely cooperate on military, economic matters  
- counterweight to China.

## 원문

### ‘왕도’나 ‘패도’냐? 지난 백 년과 새로운 백 년

서재정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교수

1919년은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그 해에, 한국은 독립을 위한 비폭력 투쟁 즉 쑨원이 “왕도”라고 하는 것을 연호하면서 왕이나 문인계급이 아닌 국민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외부인들에 의한 예측이나 간섭이 없이 자신들의 정보를 수립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평화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일본인들은 쑨원이 “패도”라고 부른 것, 즉 군대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확장을 넘어 공격 및 지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첫 번째 항공 모함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두 나라를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반대의 발전 방향, 즉 한 쪽에서는 평화와 독립, 다른 쪽에서는 군사화와 예측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평화와 군사화 사이의 이러한 충돌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로 확대되었고, 곧 이어 세계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들 간의 “냉전”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이러한 평화와 군사화 사이의 갈등은 아직도 녹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 단락이 지난 백년을 요약했다면, 앞으로 다가 올 백 년 동안의 문제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는 한국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구조라고 부르는 것의 도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는 3·1운동 당시에는 없었지만 한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고통스러운 상태인 분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분단이 식민지의 지속적인 유산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어려운 관계는 식민지 과거와 탈식민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분단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여전히 식민주의의



과거를 보는 방식과 식민지 이후 동아시아의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한 분쟁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분단은, 대륙 세력과 해상 세력 사이의 세계적 분단의 형태인 냉전과 현재의 신냉전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분단은 각각 독자성을 획득하는 한편 서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를 극복하는 것보다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구 반대편에서 약 1세기 전에 제기되었던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은 1919년에 선택했던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생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최종적으로 왕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3중분단의 구조를 평화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1세기 전 일본의 선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군대, 산업,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여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분단의 다른 측과 대적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인들의 손으로 “패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인은 지난 100년을 지배했던 “극단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그 모든 불확실성과 모순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실패했습니다. 비폭력 경로가 그 당시 한국과 동아시아로부터 식민주의와 군사주의의 무게를 극복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한국의 주인으로 등장한 국민들의 정신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 촛불을 들어올리면서 3·1운동의 정신은 최근에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진전시켜 지난 백 년 이어온 3·1운동의 정신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분단된 한반도를 다시 연결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을 극복한 한국의 모습에 대한 전망, 즉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군사동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말 이전까지 연합군사 훈련을 종식시키기로 워싱턴과 합의를 이룬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실질적인 “왕도”의 방향을 취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향한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하지 못할 경우, 지난 100년간 지속된 3·1운동의 정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패도”를 향한 추락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 Full Paper

### The Kingly Way or the Martial Way? The Past Hundred Years and a New Hundred Years

SUH Jae-J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Japan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The year 1919 was a critical turning moment in history. In that year, Koreans launched their non-violent struggle for independence, charting what Sun Yat-sen called the “Kingly Way,” the peaceful path toward a new world where the people, not a king or a literary class, would be the master of the world, where they will form their own governments without subjugation or interference by outsiders. The following year, Japanese launched their project to build their first aircraft carrier, a platform from which their military would project power throughout the Asia-Pacific and beyond for expansion, aggression and domination, charting what Sun called the “martial way” The divergence set the two nations in opposite directions of development for the coming decades and on a collision course between peace and independence on the one side and militarization and subjugation on the other. The collision between peace and militarization grew to the Asia-Pacific before it was frozen in the “Cold War,” a ubiquitous yet unstable competition between what aspired to

be global powers. Even the end of the Cold War has not thawed, much less resolve, the frozen conflict between peace and militarization.

If the preceding paragraph summarizes the past one hundred years, it also points to the challenges in the coming one hundred years. The past century has challenged Koreans with what I call a structure of triple divisions. First,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divided, a painful condition that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but created in the process of Korea's transition from its colonialization. Just as the division evinces the lasting legacies of the colonization, so does the difficul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etray the division in East Asia between the colonial past and the post-colonial future, with Korea, China and Japan still entangled in a dispute over how to view the past of colonialism and how to construct the future of post-colonial East Asia. The divisions of Korea and East Asia are in turn embedded in the global division between the continental and the maritime powers, in the form first of the Cold War and now of a new Cold War. The divisions on the three levels have acquired their own life while at the same time reinforcing one another, making it more challenging to overcome them than it was to overcome Japan's colonial rule.

So what is to be done, to ask a classical question raised about a century ago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Koreans may choose the course they chose in 1919: let the people be the masters of their life who will build relations with other peoples on the principle of “live and let live” (相生) and peacefully resolve the structure of triple divisions to realize, finally, the “kingly way” in the peninsula and the

Asia-Pacific. Koreans will then be the forerunner who opens the Pacific Century. Or they may choose the course that the Japanese chose: let the military, industry, and government rule the country so that they can produce their own “aircraft carriers” to confront the other on the other side of the divisions on the principle of “kill or be killed” and take, finally, the “martial way” in Koreans’ own hands. Koreans will then make themselves the last who retroactively enters the “Age of Extremes,” with all the uncertainties and contradictions so palpable in the past 100 years.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failed in 1919. It did not bring about Korea’s independence that year for its non-violent path was not powerful enough to lift the weight of colonialism and militarism from the Korea and East Asia of the time. The movement has nonetheless survived with its spirit being carried on by the people who have made them the masters of their country through the democracy movement. The March 1<sup>st</sup> Movement’s spirit has in recent years resurfaced as Korean citizens raise candle lights to consolidate Korea’s democracy and open the door to the peninsula’s peace. The Moon Administration now has a critical decision. It may choose to continue the century-old movement by forging ahead with the peace process. It can start a set of projects to turn the Armistice into a peace regime as well as reconnect the divided Korea. It can start a national soul searching about what a post-colonial, post-division Korea may entail, what its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nations may look like, and what its alliance will become. It will be a most consequential, for the short term, and most substantial, for the long term, step in the direction of

the “kingly way,” if it manages to make an agreement with Washington to terminate the joint military exercis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f the Moon Administration fails to take decisive steps towards peace soon, however, it may end up starting the process of descent toward the “martial way” for the next 100 years, dealing a fatal blow to the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that has been sustained for the past hundred years.

## 원문

### 국제환경변수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정계영 Fudan University 교수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및 대한민국의 합법적으로 구성된 통치권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시국이 10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반(半)식민 및 반(半)봉건 국가였기에, 군벌을 비롯한 온갖 세력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기타 열강에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해,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신세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사람들은 중국과 극동의 독립을 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및 조선의 국제적인 지지 호소는 중국과 조선이 너무나 약했던 터라 강대국의 관심사 밖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대국들은 두 허약한 나라의 주권을 먹어 치우는 잔치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싸우지 않았거나 나가 싸울 정도의 힘이 없었고, 그러고도 차후에는 불가피하게 일본 및 기타 열강의 손에 죽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흐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대국의 이름과 등장인물의 배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I. 지구적 정치 변동

첫째, 강대국의 역할은 항상 변하며,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동시에, 소국들의 자율성과 역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갖가지 행태로 인해 각자의 이해 관계를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있으며, 강대국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강대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둘째, 국제관계와 국제관계의 원칙은 무용한 것입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특별한 이론이나 패러다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임시 해결책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국제관계와 국제관계 원칙 이론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족주의가 대두하여 통제불능으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광분 중이며, 대중추수 정치가 각 나라와 지역에서 주류적 행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셋째, 역사 논리는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있어서, 정의와 악에 대한 최종 기준은 더 이상 선명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처럼, 과거 세력의 사악한 면이 피해자에게 역사의 망각을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이익 추구는 행위자들의 주류적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생각이 많은 것을 바꾸며, 세계 정치는 현실주의 이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II. 중미 간 경쟁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예측 불가능한 지경에 들어섰으며, 단 하나의 이론이나 논리로 는 오늘의 국제 관계에서 지침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기술로부터 문화 및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층위와 차원에서 소위 대중국 전쟁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미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중국과 미국의 미래에는 경쟁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또는 최종 분석으로써, 본인은 중국이 방어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 권력 변동에서 중미 경쟁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정치 권력 변동 대부분은 농민 혁명과 농지 개혁의 형태였습니다. 농민 계급이 토지를 잃었을 때 민중 봉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왕조가 농민의 토지 관련 우려를 해결하면, 장기간 존속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의 성격으로 보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영토 및 토지를 가진 황제들이어서, 자신의 토지와 식량을 빼앗지 않는 한 중국은 대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은 “호시절”에 집중하여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은 이제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중이며, 중국의 “토지”를 기술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가피하게 압제에 저항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항모와 구축함 등 해군력을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군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기술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현대 국제판” 모택동 식 신전략을 채택 중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동맹 기만, 조약 파기, 전략 지역으로부터 철수 등 미국 스스로 자체 붕괴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불리함은 통치 경험의 부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봉기 지도자인 리 지청과 같이 도시로 간 농민들과 같은 모양새인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중국이 옛 것을 뒤엎는 데는 능하나 새 것을 세우는 실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투쟁의 와중에서 중국이 어떻게 광범위한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서 대부분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 III. 한반도 평화 관련

1953년부터 현재까지는 짧은 평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사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평화의 정의를 강대국들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통제 가능한 혼돈을 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사실 한반도 평화에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인 남북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협정 및 조약의 중대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이 창출되고, 실현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사실 평화상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휴전 협정, 비핵화 결의, 남한과 북한 및 기타 국가들의 선언, 6자회담의 결정 등은 모두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남한과 북한의 헌법 간의 갈등 또한 평화의 초석입니다. 남북의 헌법에서는 상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반도 통일로 연결되고, 공존을 위한 선결 조건의 바탕이 되어 한국의 주민들과 국가의 통일을 위한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북의 체제 간 명확한 차이와 압도적인 분쟁들이 평화를 실제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민족적 기반, 차이점 및 합일점 위에서 새로운 평화 요소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극히 빠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화와 단일화를 이루는 첩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의 꿈이고, 남북의 주민들은 통일의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급속한 통일은 남북 간의 한국 전쟁, 분쟁, 무질서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게 되면 평화와 단일화를 향해 가는 새로운 출구와 통로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강대국 요인의 역할이 한반도에 너무 과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및 전쟁은 원래 강대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강대국의 개입으로 복잡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주요 국가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이후 한반도에서의 변화를 고찰하면, 두 한국이 아주 훌륭하게 진전을 이루던 판국에 중국과 미국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무역 전쟁을 전개하면서 한반도를 이전보다 더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 정부는 남한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보여준 무능함과 남한이 완전히 미국을 추종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북한은 금강산의 남한 측 건물들과 시설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 북한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코리아가 이용하려는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영향력을 피하면서 스스로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Full Paper

### Environment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ZHENG Jiyong

Professor and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 Secretary-General,

Shanghai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his year marks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unding of ROK's legally constituted authority. Over 100 years, there has been a hug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left a lot of thoughts to us.

It should be said that today's times are similar to 100 years ago. At that time, China was in a semi-colonial and semi-feudal country, and the warlords and all kinds of forces were controlled by the imperialists and other powers. In contrast, Korea has become a dead puppet in Japan's hands. The people, in China and also in Korea, called for independence in China and the Far East. China and Korea's international support begging have not been even big powers' attention, because China and Korea were too weak. And even, big powers were joining the banquet of eating the two weak countries' sovereignty. If

the Chinese and Korean peoples have not fight themselves, or they would not be strong enough to fight, and then afterwards proved that they would inevitably die in Japan and other powers.

Today, although times and tides are different, bu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 which we are in. Only the powers' name and the role of the characters have been changed. Therefore, the result will not be quite different.

## **I. Global Political Change**

First, the role of a great power is constantly changing, and constantly strengthening control of its own power toward others, and at the same time, the autonomy and effectiveness of small states are constantly increasing. Each country and all kinds of behaviors are risking their own for their own interests, and each country is not willing to rely on big nations, but also to have to rely on great powers. This a huge paradox.

Seco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rincipl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useless. There is no one special theory or paradigm can solve one special problem. Planning does not work; temporary solution becomes popular. Traditional IR or IP theories are facing challenges.

Furthermore, nationalism is rising and running out of control, and grass-rootism is rampant, and grass-root-flattery-politics becomes the mainstream in all countries and regions. Even in North Korea.

Fourthly, the logic of history is obscured and forgotten, and the

bottom-line of justice and evil is no longer sharp and clear, and even the evil side of the past forces the victim to forget history, like Japan. Pursuing interests becomes actors' mainstream behave.

Fifthly, the thinking of solving major problems change a lot, and realism theory becomes the favor of global politics.

## II.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entered an unpredictable state, and a single theory or logic cannot guid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wadays. It is true that the United States launched a so-called war against China, ranging from technology to cultural fields and political fields, on all levels of hierarchy and dimension of dimension. Sino-US relations are no longer able to return to the past, and the future of China and US will enter a competitive era.

If let me discuss from the conclusion, or in the final analysis, I can say that China adopted a defensive strategy. I think we can predict the result of China -US rivalry from the power shifts of China's political power historically.

Most of China's political power shift, is the peasant revolution and the agrarian revolution. When the peasants lost their land, they will have a popular uprising. And if one dynasty can solve peasants' land concern, it will last a long time. And from Chinese character, the Chinese are the emperor and the emperor of his own territory and lands, and not to take away his land and bread, and generally China

will not resist. From now on, China is trying to live up to the “good day” and keep it safe. But unfortunately, the United States is now under compulsion to China, is trying to rob China’s “lands” technologically, politically, culturally, and militarily. So, China unavoidably resists the suppressing.

Especially, China is developing the sea power, such as the construction of carriers and destroyers, as well as enhancing the strength of the land.

China is adopting a newer version of Mao Zedong’s “modern international edition” strategy, which is named “surrounding the cities from the countryside”, to defeat the United States technologically, politically, culturally, and militarily. And added that America’s own efforts to accelerate the collapse of itself, such as deceiving allies, tearing treaties, and withdrawing from strategic areas.

However, China’s disadvantage lies in the lack of experience in governance. Just like farmers go to town, like Li Zicheng, a typical Chinese upriser. That means China is good at throwing down an old one, but not good at building a new one. Therefore, How China achieves a broader consensus in the struggle,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most countries, ar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success or failure.

### **III. On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Peace is a state. 1953-Today, it can be regarded as a brief peace, or a passive peace. In fact, it does not exist in strict definition.

But as stated earlier, the definition of peace cannot be determined

by great powers. Great powers simp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by making controllable chaos. In order to achieve their own interests, they do not really care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followed by two Koreas, the two most important parties on the peninsula. We can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

1. From this perspective, there is an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s and treaties existing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have created, realized and managed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in fact a reality of peace status. The Korean Peninsula's armistice agreement, resolutions on denuclearization, declar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other countries, and decisions of the six-party talks, are both worth noting, and also are the peace makers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2. The conflicts between/in the two Koreas' constitution is also one bottom stone of peace.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Constitution include each other, which leads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basis for the coexisting and preconditions and starting point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nations un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obvious difference between the regimes of two Koreas, and the vast majority of conflicts, has actually been maintaining the peace. It is important to create new peace factors based on the same ethnic base, differences and divergences.
3. Without the pursuit of extreme quick unification, it may be a shortcut to making peace and unity.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he dream of two Koreas, and the people of two Koreas



deserves the fruits of the reunification. However, historically, including the Korean War, and extreme fast reunification, it is an important reason of Korean war, conflicts and disorders between two Koreas. To admit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lifestyle, it may lead to a new outlet and passway for peace and unity.

4. The role of big power factor over-affects the Korean Peninsula, and needs to be utilized and reduc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ar originally comes from great powers, and the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process became complicated by the intervention of great powers.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can not completely exclude major national factors. But if we look through the changes in Korean peninsula from 2018, the reason why two Koreas are actively engaged in very good progress, it just reasoned that China and USA are in a serious confrontation and trade war and they ignored the Korean peninsula than before. And n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criticized South Korea's inability to grasp its chances and South Korea followed US so tightly, and North Korea is tearing South Korea's buildings and facilities in Gungang Mountain. in this aspect, North Korea was corr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ly on how two Koreas avoid the influence of big powers of utilizing China and USA, an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by themselves.



사회 - 이수훈 교수



발제 - 김기정 교수



토론 - 스펜서 김 회장



토론 - 서재정 교수



토론 - 정계영 교수



# 제3세션(Session 3)

## 정치·민주공화 Politics & Democratic Republic

3·1운동의 화합정신으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민주공화 미래 100년 조망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발표  
Presentation

3·1운동 정신에 의한 지역 갈등 극복과  
평화와 공존을 향한 미래 100년의 전망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 KANG Won-Tae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Discussion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  
/ LEE Yeon H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  
/ CHANG Dukj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학교 교수  
/ Erik MOBRAND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3·1운동 정신에 의한 지역 갈등 극복과 평화와 공존을 향한 미래 100년의 전망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KANG Won-Tae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요약문

### 3·1운동 정신에 의한 지역 갈등 극복과 평화와 공존을 향한 미래 100년의 전망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3·1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다. 3·1운동의 핵심 정신은 통합과 단결, 조화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3·1운동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로 남아 있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제 서로 달라진 두 개의 나라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주의 정치가 여전히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갈등과 분열을 타파하는 것도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제 지역, 사회적 지위, 성,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독립과 평화를 위해 단결했던 100년 전 운동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정신은 향후 100년 이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을 극복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가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해야 하며, 개별 시민은 다양성을 수용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결국, 오늘날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고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중요성이다.

## Abstract

#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KANG Won-Taek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s the cornerstone that made Korea what it is today. The core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s integration, unity and harmony. However, the spirit of the Movement has not yet been fully accomplished.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Movement, Korean society is struggling with multiple divisions and conflicts.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divided, and the military confrontation of the two Koreas still persists. Unifying two vastly different nations cannot be easy to realize. Breaking down the domestic divisions also remains a huge sticking point, as regional politics still hinder social integration.

We should honour the spirit of the Movement 100 years ago when all the people became united for independence and peace regardless of region, social status, gender, and age. And that spir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overcoming the various challenges that we have to face in the next 100 years. To succeed the spirit of the Movement

today, the political system needs to be more inclusive and flexible, and individual citizens must be tolerant and accountable. After all, the greatest lesson that the Movement gives us today is to deepen our democracy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that bring people together.

## 원문

### 3·1운동 정신에 의한 지역 갈등 극복과 평화와 공존을 향한 미래 100년의 전망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I.

1919년의 3·1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은 곧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화국은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형태의 정체였습니다. 이 임시 헌법의 제3조는 성별, 재산 또는 계급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의 선언은 3·1운동의 정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봉건 관습과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지속되던 상황이었음에도, 3·1운동의 핵심 정신은 사회 통합과 조화였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10% 이상의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규모보다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3·1운동에는 남자와 여자,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등의 구별없이 모두가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독립을 향한 열망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1운동의 핵심 정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 단결, 조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임시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는 다양한 양상의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열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분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국가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1948년 분단 이후로 적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빠른 시일 내에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대한민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이념, 계층, 세대 및 지역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분열은 화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 통합과 조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의 정신은 다음 100년간, 통일과 사회 통합을 성취하기 위해 계승되어야 합니다.

## II.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이는 사실 남북한 모든 한국인들의 숙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미래에 통일이 될 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이 이어질 지의 여부는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이야말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망했던 꿈과 미래, 즉 통일된 민족국가를 마침내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 이내에 한반도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원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수십 년 간의 분단 동안,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에 관한 남북한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의 차이는 너무 커져서 이제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란 사실상 “두 개의 완전히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통합입니다. 따라서 통일로 지역 통합과 사회 조화가 단숨에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며, 통일은 그 목표들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더욱 중요하고 클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은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독일 통일 이후 반 세기가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과거 서독과 동독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용, 사회기반시설, 소득 및 지역 개발 측면에서 차이가 큼니다. 지역적 불균형과 비대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독 지역 사람들은 자신을 ‘2등 시민’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감도 동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치적 불만족과 지역 불균등으로 동독 사람들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동독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이란 단순히 영토의 재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한 번 분단되었던 국가에서는 정치적 통합과 사회 조화를 이루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독일은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제적 불균등은 현재의 남북한보다 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동독은 고립된 전체주의적 국가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적 왕정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두 독일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었던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험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새로운 분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남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놓여 있어서 통일 이후 갈등의 강도는 더욱 강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3·1운동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을 경우 통일은 심각한 분열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일은 평화, 공존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또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통일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는 정당을 포함한 현재 정치 시스템이 다양한 갈등과 차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더욱 포용적이며 유연한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이 실질적인 지역 통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정치개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III.

100년 전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발전된 나라로 변화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 세계 제 12위 국가이며, 세계 5대 수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제 3의 민주화의 물결’을 탄 전 세계 수십 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민주적 공고화를 이룬 몇 안 되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통치 체제에 불만족스러워 하며 정치에 대한 불신도 심각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분쟁과 갈등은 여러 가지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첩된 분열은 대한민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분열에 더하여,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크게 3가지의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갑작스럽게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북한과의 통일 역시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결국 다른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민”이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민 인구의 유입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100년을 구상할 때, 우리는 사회 통합과 조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성과 관용의 중요성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과 산업의 변혁에 따른 갈등입니다. 최초의 산업 혁명이 출현한 200년 전 당시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심각한 갈등도 나타났습니다. 상공업자와 지주 간의 갈등,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경제적 변화는 이념 갈등과 계급 정치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무인 자동차, 로봇 등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적 변화는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 기회, 부의 사회적 분배, 그리고 지역 불균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산업혁명의 경우처럼,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는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술 변화의 규모와 속도에 따라 그로 인한 갈등은 더욱 강하고 격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촉발될 사회 변화에도 주목하면서 사회통합과 조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정보 통신 기술(ICT)의 발달이 정치와 민주주의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ICT의 발전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시민 개인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연결되어, 중간 매개체 없이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자신과 생각이 유사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이야기하려는 경향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사회적 논의의 양극화와 파편화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향후 ICT가 발전되면 이러한 현상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는 정당과 같은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당 정치를 우회하는 정치 활동은 정치적 책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양극화된 사회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는 포퓰리즘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ICT의 발전이 대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 IV.

3·1운동은 현대 대한민국의 초석이었습니다. 3·1운동의 핵심 정신은 통합, 단결,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정신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3·1운동의 정신과 모순되는 복잡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분단된 채로 머물러 있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도 여전합니다. 이제 너무나 달라진 남북한 간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 갈등의 정치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 사회적 지위, 성, 그리고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독립과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100년 전의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우리가 다음 100년간 직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더욱 포용력 있고 유연하게 변해야 하며, 시민 개개인이 다양성을 수용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지난 100년 전 3·1운동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사회 통합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Full Paper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with the Harmonious Spirit of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Overlooking the Future  
Century Towards a Democratic Republic of  
Peace and Coexistence

KANG Won-Taek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I.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1<sup>st</sup>, 1919 signifies the beginning of Korea as a republic.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soon l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China.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made a provisional Constitutional Charter on April 11<sup>th</sup>, 1919, it declared that Korea was a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was an unprecedented form of government in Korean history.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al Charter stipulated the equality of human beings regardless of gender, property or class. The core spirit of the Movement was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although feudal customs and social inequalities then persisted. More than 10 percent of the nation's population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However, the composition of the protesters is more important than the size of the Movement.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cluded men and women, noblemen and commons,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old and the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united in aspiration to regain independence. In this respect, one of the core spirits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s integration, unity and harmony of Korean society. The Provisional Government later reflected the spirit of the Movement in the Constitutional Charter. The spirit of the Movement gives us significant lessons and enlightenment.

Today, however, Korean society suffers from a wide variety of divisions. Such divisions can be divided into two general dimensions. The first one i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has not yet finished building a nation state. The two Koreas have had antagonistic relations since 1948. Despite continuous efforts for reconciliation, there is no immediate prospect of eternal peace and reunification. Second, South Korean society is internally divided into ideologies, classes, generations and regions. Liberal democracy is based on pluralism. However, severe divisions show no sign of resolving, negatively affecting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The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should be inherited to achieve re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e next 100 years.

## II.

The most critical and urgent task is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is is a long-held dream of the Koreans. In reality, it is not clear at this point whether two Koreas can achieve reunification or whether the

divis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the reunification is the final realization of the ideals and hopes envision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For fulfilling such dreams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eacefully reunified well before 2119.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unification does not mean a return to where we used to be. With decades of division, the gaps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people on economy, politics, culture, and social relations have widened, which is an obstacle that cannot be easily overcome. Reunification is, in effect, a merger of 'two vastly different states.' Thus, reunification cannot necessarily be expected to bring regional integration and social harmony overnight, and it will only be a first step towards them. Some experts often pay attention to economic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reunification, but political and social costs will be more important and enormous.

The experience of German reunification gives us a valuable lesson. More than a quarter of a century after German reunification, there are still gaps between former West and former East Germany. Despite the numerous efforts to break down the gaps, there are still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ions in terms of employment, infrastructure, income, and regional development. Sustained regional imbalances and asymmetries have made some East Germans regard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The confid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is also less pronounced in eastern states. Political alien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led East Germans to support the far-right party, Alternative for Germany (AfD). The AfD tried to seize on the dis-

gruntlement that voters in eastern states felt. Such German experiences clearly show that reunification never mean an annexation of the territory, and that a once-divided country has to carefully deal with such issues as political integration and social harmony for a long time to come. In fact, compared to Korea, Germany achieved reunification in much more favorable environments. Economic disparity was much narrower in Germanys than in Koreas today. Politically East Germany was neither an isolated totalitarian state nor a communist monarchy. Moreover, two Germanys did not go through a tragic war that led to extreme hatred each other.

Considering the German experiences, reunification in Korea is much more difficult. Even if reunification works peacefully, it will be able to create new divisions internally. Along with unification, conflicts between ideologies, classes, regions, generations, and cultures can simultaneously burst. Unlike in Germany, two Koreas are almost completely cut off, so the intensity of conflict can be even stronger.

Reunification will be an embodiment of the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but if not properly prepared, it can be a source of serious divisions and conflicts. For reunifica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eace, coexistence and unity, its process must be peaceful and gradual. More important for reunification is that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including party politics must be reformed into a more inclusive and flexible form that can embrace and coordinate various conflicts and differences. In order for reunification to be truly regional and social integration, our democracy must be deepened. The first step to a successful reunification is to begin with political reforms.

### III.

Compared to 100 years ago, Korea has become a completely different country. In particular, South Korea has made great progress. Over the past 70 years, South Korea has changed from a poverty-stricken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South Korea becomes the 12<sup>th</sup> largest country in terms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and the 5<sup>th</sup> largest export economy in the world in 2018. South Korea has also transformed from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democratic state. South Korea is one of a few successful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democratic consolidation among the new democracies that have ridde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Despite these political and economic successes, Korean society has many problems to solve. Above all, the society is divided and people are dissatisfied. People are very disaffected with the way they are governed, and the level of distrust in politics is very serious. Although variou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divide people,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em. Such multiple divisions are related to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has changed dramatically in a very fast time. In addition to such complicated divisions, Korean society will face new challeng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for the next 100 years, which will make social conflict and divide more serious and difficult. Here are three challenges to consider.

The first challenge will come from a decline in population. South Korea is one of the lowest birth rate country in the world and, sooner or later, its population will rapidly shrink. It is not easy to reverse this

trend overnight because it is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lifestyle and family structure.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demographic challenge. Births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clined after reunification. More than anything else, immigration is a potential solution to the declining population. However, the influx of immigrants can create another social conflict and political division, considering that Korea is a very racially homogeneous society. This will be an unprecedented challenge. In that sense, as we consider the next 100 years, we should pay greater attention to social peace and harmony and to the importance of diversity and tolerance.

Second, the transformation of technology and industry will pose a new challenge. The advent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200 years ago completely changed the society at that time. It produced serious conflicts at the same time. Tensions between industrialists and landowners first appeared, followed by struggles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Such huge economic change brought about ideological and class politics. We are now facing a massive technological change called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vehicles, robotics, etc. will greatly change the mode of living and the economic structure, which inevitably affects th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alth, and regional disparities. Lik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his industrial breakthrough will cause new cleavages and conflicts. Given the extent and speed of such technological upheaval, the conflicts will be more



intense and violent. For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not only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o the social changes and the consequent conflict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about.

Thir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will also greatly change politics and democratic governance. This evolution of ICTs has radically altered the way that politics work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operate. Advances in communication enable individual citizens to connect more effectively and rapidly,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directly, not through intermediate institutions.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can intensify the tendency only to meet and talk with like-minded people, making social debate polarized or fragmented. Besides, there is also the danger of fake news stories from untrustworthy sources to spread rapidly. This is already happening, but the developments in ICTs in the future can further undermine the found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may be more active, but it will be in the form of direct participation, not through representative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Political activities that bypass party politics will not be able to secure political accountability, nor will it be likely to build social consensus in a polarized situation. At the same time, the society will be very vulnerable to populist appeals. In the situation where the development of ICTs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we must consider how to establish political stability and to social integration.

#### IV.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s the cornerstone that made Korea what it is today. The core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s integration, unity and harmony. However, the spirit of the Movement has not yet been fully accomplished.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Movement, Korean society is struggling with multiple divisions and conflicts.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divided, and the military confrontation of the two Koreas still persists. Unifying two vastly different nations cannot be easy to realize. Breaking down the domestic divisions also remains a huge sticking point, as regional politics still hinder social integration.

We should honour the spirit of the Movement 100 years ago when all the people became united for independence and peace regardless of region, social status, gender, and age. And that spir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overcoming the various challenges that we have to face in the next 100 years. To succeed the spirit of the Movement today, the political system needs to be more inclusive and flexible, and individual citizens must be tolerant and accountable. After all, the greatest lesson that the Movement gives us today is to deepen our democracy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that bring people together.

# 토론/Discussion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

**LEE Yeon H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

**CHANG Dukj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학교 교수

**Erik MOBRAND**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원문

### 강원택 교수 논문에 관한 논평

이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분열된 민주 국가

1960, 70, 80년대의 권위주의는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1987년의 민주화를 겪은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지역주의적 요소는 약화되었으나, 민주주의 시대의 한국정치에서는 사상과 계급이 중요해졌다. 2016년 겨울과 지난 해 몇 개월 동안 볼 수 있었듯, 민주국가 시민들은 서로 간에 분쟁 중이다. 더 나아가 정당들은 중위투표자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2.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줄어들면서 자유 민주주의, 간접 및 의회 민주주의 모델은 아래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포퓰리스트로 인해 취약해진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의 진보당에서 제시한 참여 민주주의 모델은 시민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지지한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된 이념으로 인해 참여정치의 비용이 증가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3. 불균등 발달과 불평등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핵심이 되는 분열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평한 성장패턴이 결국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측면에서 불평등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아 대중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은 더욱 크다. 불평등의 정신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 4. 민주주의와 통합

민주주의가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까? 현재 시민중심의 참여와 진보주의 및 의회 중심 모델 등 두 유형의 민주주의를 위한 향후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모델이 대중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실제 정치적 기반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만은 시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다른 정치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유산 계층과 빈곤층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는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가설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 Full Paper

### Discussion for Professor KANG Won-Taek's paper

LEE Yeon Ho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I. Democracy Divided

Authoritarianism in the 1960s, 70s and 80s brought about divided society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however, the country has been still remaining divided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the year of 1987. The factor of regionalism has diminished, but those of ideology and class become more important in Korean politics in the era of democracy. As we have witnessed in the 2016 winter and the past months of this year, democratic citizens are fighting against each other. Moreover, political parties advocate their own supporters rather than trying to persuade median voters.

#### 2. Democracy and Populism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Korean democracy is populism at the present. With the declining public trust on the elite, the liberal, indirect and parliamentary democratic model grows vulnerable to the

populist influence from the below. The participatory democratic model, which has been suggested by the progressive governments in Korea since the DJ Kim administration period, supports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No one can, however, deny that the cost of participatory politics has increased with the strengthening idea of the direct democracy.

### **3. Unequal Development and Inequality**

Then, what is the cause of democratic division in Korea? The prime division factor of the present Korean politics is economic inequality. The unequal growth pattern of the Korean economy inevitably brought about inequality in terms of economic income and psychology. The history of Korean capitalism is relatively short, and, therefore, the relative deprivation feeling amongst the people has grown even more serious. It is more difficult to deal with the psychological aspect of inequality than its economic counterpart.

### **4. Democracy and Integration**

Can democracy deliver integration to Korean politics? We now can consider two types of future democratic alternatives: the citizen-centered participatory and the liberal and parliament-centered models. The citizen-led democracy models might sound persuasive to the public. However, its practical political foundation is growing fragile. The internet-based 3<sup>rd</sup> industrial revolution helped the



citizens' participation to explode powerfully, but the 4<sup>th</sup> industrial wave will deliver a different political environ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pertied and the deprived citizen class will become even more intensive, which will mak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politically more volatile. This hypothetical trend is already visible in Korea.

## 원문

### 통일을 어렵게 하는 마음의 습관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원택 교수님의 주장처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한이 다시 통일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통일 과정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통일의 시련들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마음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통일을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손익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통일을 대박이라 생각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통일로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해도 좋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통일은 대박일까요?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요오드 결핍증을 겪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수가 천 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오드 결핍증의 주요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신장이 140-150cm에서 성장을 멈추며, IQ는 80-100 사이에서 멈추게 됩니다. 천만명, 또는 40퍼센트의 북한 사람들이 이러한 결핍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오드 결핍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학 전문가들은 1년에 두 그릇 정도의 미역국을 섭취하면 이러한 결핍증을 겪을 일이 없다고 조언합니다. 천만명의 요오드 결핍증 환자들이 통일 후 대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되기보다는 복지 지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을 맞이하지 않고자 한다면, 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긴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의 장기적인 정책과 북한에 대한 단기적 압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을 단지 경제적 비용/이익의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점점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비용, 즉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아직 도래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을 도입하여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일은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점증하는 사회 집단 간 혐오가 통일의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혐오는 현재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혐오를 먹고 자라나는 극우 정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표를 얻고 있습니다. 유럽의 결과에 기초한 정치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혐오란 현재 인구의 동질성과 이질적 인구의 유입 속도, 이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된 함수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동질성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에 혐오 감정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주관적 인식 속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사회라고 스스로 생각해왔습니다. 통일이 예측가능한 미래일 경우, 북한 인구의 유입 속도는 매우 빠를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혐오의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됩니다. 경제학자들은 혐오의 공급과 수요(수용)를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정치인들은 더욱 좋은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반대 정파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를 퍼뜨리는데 주력합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려는 경쟁자인 진보 정치인들에게 승리하고자 할 때, 분배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진보 정치인들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보수 정치인들에게 승리하고자 할 때, 성장 정책으로 감세 혜택을 받을 부유층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에서 혐오가 공급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혐오는 악성 소문들의 진위를 판별하고자 할 유인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무관심은 혐오를 부추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적대적 정치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태는 20대 국회 때 극에 달하였습니다. 합의에 기초한 정치 문화를 대한민국에 도입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 자본의 증발과 그에 따른 불안감의 지속적 증가입니다. KB 국민은행의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KB 국민은행은 ‘한국부자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부자”란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1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금 자산만 계산하더라도, 그들은 ‘백만장자’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들에게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기는지 물었더니 70%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성 자산 5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자인지 물었더니 50%가 “아니오”라고 답하였습니다. 기준을 더 높일 수 없으니 이 백만장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길 수 있는지 직접 금액을 기입하게 하였습니다. 그 답변의 평균 금액은 100억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빈곤층은 당연히 걱정이 많습니다. 중산층도 불안합니다. “각자도생”의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부유층도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금전으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도 스스로를 죽을 때까지 알아서 챙겨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항상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의 5회차 조사에 참여한 50개국에서 ‘관용성’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르완다에 이은 5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은 강원택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 시장에서 기인한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조화롭게 활용되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사회 혁신 프로그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통일 비용은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연대 없이는, 통일이란 감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 Full Paper

### Three Habits of the Heart Challenging Reunification

CHANG Dukji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 cannot agree more with W.T.Kang's argument that we should achiev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e spirit of March 1<sup>st</sup> Movement. In line with his argument let me add a few thoughts on the challenges to reunification. They come from our everyday habits of the heart.

First of all, we have to admit that in our minds we tend to think of reunification almost totally in terms of 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We all remember that a few years ago the then-President Park Geun-hye stated that reunification would become a bonanza. Why do we think reunification a bonanza? Because we basically consider reunification a supply of cheap labor. It is of course not appropriate to see reunification only in economic terms. But let us pretend it is for the time being. Can reunification be a bonanza? There is a research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that 10 million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suffer from iodine deficit. The main symptoms of iodine deficit are two: physical height stops at 140-150 centimeters and the IQ stops at 80-100. Ten million, or 40 percent, of

all North Koreans suffer from this deficit. Then what is the cause of iodine deficit? Medical doctors advise that you do not suffer from this deficit if you ate two bowls of sea weed soup a year. Is reunification with ten million iodine deficit patients going to be a bonanza? They are more likely to be put on welfare pay-roll rather than becoming cheap labor. If we want to avoid this kind of reunification, then we should be able to start seeing North Koreans a part of our people and managing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Although the military threat from North Korea has ever been on the rise, we should be able to separate our long-term policy from short-term pressure on North Korea. When reunification is understood only in terms of economic cost/benefit, increasingly more South Koreans oppose to it because they know that they will be the hardest-hit taxpayers for the reunification cost. Although reunification is yet to come, we should start a long-term policy to minimize the reunification cost. Otherwise, reunification might not be economically feasible.

Second, growing hatred against different social groups is likely to explode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Hatred is now a global phenomenon. Ultra-rightist parties feeding on hatred are gaining more votes than ever before. Political demography, based on findings from Europe, suggests that hatred is a function of two things: homogeneity of existing population and the speed of the inflow of foreign population. The more homogenous the existing population is, the more vulnerable to hatred the society is. The faster the inflow of foreign population, the more likely the society is to grow hatred.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homogenous society in the world. When

reunification becomes a foreseeable future, the speed of the inflow of North Koreans will be extremely fast. Two conditions combined predicts that hatred is very likely to explode. Economists come up with the supply and demand (acceptance) of hatred. They explain that antagonistic politics brings about the supply of hatred. Politicians spread hatred about those who will benefit from the policies of their competitors, rather than coming up with a better policy. When conservative politicians want to win their progressive competitors who want distributive economic policy, they simply spread hatred about those lazy and irresponsible people who will benefit from distributive policy. When progressive politicians want to win their conservative competitors who want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they simply spread hatred about those tax-eroding rich people who will benefit from the growth policy. This is how hatred is supplied by politics. This hatred tends to be easily accepted because ordinary people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check whether those rumors are true or not. Political apathy nurtures demand of hatred.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especially the 20<sup>th</sup> National Assembly, demonstrates an extreme form of antagonistic politics. If we cannot introduce consensus-based politics to South Korea, reunification may not be politically acceptable.

Third, evaporating social capital and consequent anxiety is another obstacle. Let me introduce an interesting research by KB Kookmin Bank. Every year the bank publishes a report on 'Korea's rich.' Here the 'rich' is defined people with one million dollars in cash in addition to real estates. In other words they are 'millionaires' even when only



their cash asset is counted. A few years ago the bank asked these millionaires whether they thought they were rich, to which 70 percent of those millionaires answered 'No.' Then we might need a higher standard. The bank asked those with at least five million dollars in cash whether they thought they were rich, to which 50 percent answered 'No.' Then the bank, not being able to introduce an even higher standard, asked those millionaires to fill in the blank how much people had to have in cash if they were to be called rich. The average answer was ten million dollars. Why do they need that much money? Because they are anxious. Poor people are of course anxious. Middle class is also anxious. Even rich people are also anxious because they know that ours is a 'help-yourself' society. They know that they will have to take care of themselves with their own money until they die. They know that their children will have to take care of themselves with their own money until they die. That's why they need that much money. When I compared the level of generosity across 50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5<sup>th</sup> Wave of World Values Survey a few years ago, Korea ranked 50<sup>th</sup>, next to Rwanda. Increasing inequality fundamentally comes from the labor marke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ike W.T.Kang pointed out, will speed this up. However, it is the role of politics to lay a social foundation for the coordinated future of technolog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o be understood as a social innovation program, not simply a technological change.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estimated to be about four to five trillion dollars. Without social capital and social solidarity reunification might not be emotionally acceptable.

## 원문

### 3·1운동 이후의 민족과 국가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은 임시정부와 식민지 국가, 둘 중 어느 것입니까? 많은 후기 식민지 국가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기원은 두 가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체제, 다른 하나는 저항 운동입니다. 이 선택 항목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로서의 인도는 영국령 인도 제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관료 체제를 설계하였고, 국민 회의파와 그 협력 세력들은 헌법을 구성하며 국가 지도자들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현대 인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가 그 정치 체제를 열망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에서 네덜란드를 위한 국부를 추출하기 위한 국가 체제를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더 서술하자면, 이제 고인이 된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에서 국가를 구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민족과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식민지 이후의 맥락에서 정치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란 주로 제국주의의 권력에 봉사하기 위해 식민 상태를 도입한 것입니다. 반면, 민족이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리더십을 통합하는 상징들의 집합입니다.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은 민족이 갑작스레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적인 힘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분투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965년이 될 때까지 이 운동은 실패하였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이 외부적인 힘으로서의 국가는, 식민 통치자들에게 훈련 받고

쿠데타로 권력을 쥔 수하르토라는 군인의 세력이 커지면서 비로소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시 정부는 민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압제를 해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식민 통치의 종결로 민족이 국가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한반도의 분단을 보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식민지 국가와 관련된 세력들이 민족주의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 중 한 사람이 선출되어 새 공화국의 정점에 섰지만, 그는 여전히 식민지 국가의 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기간은 식민지의 역사적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는 앤더슨이 해석한 바의 1950년부터 1965년까지의 인도네시아와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1960년대가 되자, 이 식민지 국가는 식민국에서 교육 받은 소수의 군인들의 것이 되었고, 이때 식민지 국가의 권력이 반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으로부터 가해진 부담과 이를 통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식민주의는 한국인들의 분열을 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잘 헤쳐 나갔고, 1945년 이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이익을 획득하였고, 국가의 역할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강압적인 체제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국내의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우선 외국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식민주의를 통해 이득을 획득하던 계층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식민 통치 체제를 재창조하고 최적화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통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도 구축하였고, 이는 과거의 통제 메커니즘과 강하게 연관되며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식민지 이후의 대한민국을 단순히 식민 국가의 연장으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사회적 기반과 한국인들이 직접 도입하고 구축한 것들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족이 국가를 통제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독립을 획책하였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식민 통치의 억압적인 제도에 의지하거나 이를 부활시키지 않고는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국가 보안법이나 경찰의 역사가 이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민족주의자들은 모두 식민 구조로서의 국가에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 간의 내부 분열은 희망과 낙관주의의 원천을 제시합니다. 일련의 사회적 추동력이 이 나라에 식민주의적 경향성을 필요로 하더라도, 이 특정한 힘이 충분히 강해지면 다시 기존의 식민주의적 경향을 일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의 형성이 성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창조되면, 과거 수십 년간, 특히 최근 3년간의 국가적 사업의 의미와 부합하게 됩니다. 대중에 기반한 사회의 힘은 대한민국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얼마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들은 자본을 조직화하고 거대한 건축 공사를 지도하며, 노동력을 훈련하고 반대 의견을 제한하는 국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노동 시간 절감, 공기 오염 규제, 만인의 준법 정신 확립, 모든 공무원의 투명성 확립은 다른 선결 과제 사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 일부분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의 성취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이유도, 심지어 주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듯, 선거 종료 후 대부분의 사람들을 섬기는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 이 국가의 시스템을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일이야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가, 미디어 그룹, 일부 사회 엘리트들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투쟁을 보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취는 눈부셨습니다. 2019년,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전세계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간주하는 장소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분노의 움직임이 대중 정치 참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년간의 대중 운동은 매우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포용하며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운동들은 강한 대중적 참여 정신에 기반하여 행정 관리 체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식민주의적 양상에서 시작된 것들에 대해서 국가 통제권을 회복하고 한국인들을 위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부정적인 정치 운동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특별한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이제 모든 곳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의 사회적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전통적인 비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요구 사상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민주주의란 개방성과 공정성을 포용하는 척 하였으나, 변화가 진행 중인 국가를 다시 형성하는 짜릿한 작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방해해 온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를 더더욱 재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식민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처리하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 체제의 역량을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다시 집중하는 일입니다. 최근 건강한 민주 정치 실천을 지시하기 위한 사법 체제 개혁 이슈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낙관주의의 실질적인 근거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델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민주주의를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있습니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희망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포용하고 있다면, 미래의 흥미로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환경 악화, 불평등 및 사회 동력 저하,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더 높은 추구 등 21세기의 공통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국가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놀랄 만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역경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 일어난 일들을 회고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Full Paper

### Nation and State since March 1<sup>st</sup>

Erik MOBRAN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oday's Republic the descen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r of the colonial state? Like many postcolonial states, South Korea's has two possible origins. One is in the colonial apparatus, the other in the resistance movement. We can think about other examples to clarify these alternatives. The Indian state today has roots in the British raj, which designed the bureaucracy, and in the Congress Party and its allies, who formulated the constitution and served as the source of national leaders. In Indonesia, the Dutch built the state machinery, oriented to extracting wealth from the archipelago for Holland, while Indonesian nationalists like Sukarno set out aspirations for the political system.

Writing on Indonesia, the late political scientist Benedict Anderson suggested that we can distinguish the state from the nation. Doing so, he claimed, could shed better light on politics in a postcolonial context. The state, in his formulation, is a colonial imposition oriented to serving imperial power, and it tends to stick around even after independence. The nation, on the other hand, is a set of symbols

that unites a leadership who seek to serve people. Independence from colonial rule did not mean that the nation suddenly became master of the state. In Indonesia, according to Anderson, national forces struggled to exert control over the state. By 1965, this struggle failed: The state as this external force, working not for the people, gained dominance through the rise of a military man, Suharto, trained under colonial rulers, who seized power in a coup.

In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might be likened to the nation. It sought to cast off the oppression of the colonial state. Did the end of colonial rule in Korea put the nation in charge of the state? The peninsula's division complicates any answer to this question. Here in Seoul, those associated with the colonial state worked closely with a set of nationalists to re-assert authority. A figure from the nation was put at the apex of the new Republic, but he relied heavily on those from the state. Indeed, the period from 1945 to the early 1960s can be seen as a brief departure from the colonial pattern, much as Anderson interprets the period from 1950 to 1965 in Indonesia. By the 1960s, the colonial state, now in the hands of a military man trained under the colonizing power, might be said to have returned to power.

A trouble with reading the South Korean state mostly as a foreign imposition is that many Koreans were caught up in it. Perhaps unlike in Indonesia, colonialism in Korea fostered profound social divisions in the local population. Some did well, and many of these excelled at remaining relevant after 1945. They had their own interests, and they bent the state to serving those. The state gained a domestic social base,



albeit one defined in part through its links to the coercive apparatus of the state. These figures, at first with foreign support, actively re-created and appropriated colonial institutions for their own purposes. They also built new mechanisms of control, some with strong continuities to the present. To label the later Republic of Korea state as simply a continuation of the colonial state underestimates the social base and these appropriations by Koreans.

Yet neither can we say that the nation controlled the state. Nobody who agitated for independence wielded power through the state without resorting to, or resurrecting, colonial repressive instrument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r the police, offer examples. Nationalists who gained power were all tainted by the state as a colonial structure.

All of this may sound gloomy, but it is not. Internal divisions among Koreans represent a source of hope and optimism. If one set of social forces could re-assert colonial tendencies in the state, then a distinct social force, once powerful enough, could work to undo those tendencies. And that undoing, or re-making, is precisely the project of the past few decades and the last three years in particular. Forces with a popular base have sought to re-take control of the state. The challenge of this task is immense and yet there has been some success. For decades, Koreans made the state one that coordinates capital, directs massive construction projects, disciplines the workforce, and restricts dissent. It is a tall order for such a state to do other things: provide health care, reduce working hours, regulate air pollution, ensure nobody is above the law, make all officials accountable, among others.

Some of these tasks go against what the dominant social forces have pushed the state to do. Achieving them takes not only, and not even mainly, winning elections. The real struggle, as we have seen, is after elections, in forcing the state to adjust to new tasks that serve most people. The resistance is fierce, coming from parts of the state, the media groups, and a section of the social elite.

And this is where Korea's accomplishments are extraordinary - in spite of the day to day news on these struggles themselves. In 2019, the outlook for democracy worldwide is bleak. The places that Koreans used to view as models can no longer be seen that way. Angry movements characterize mass political participation abroad. In Korea, mass movements of the past three years have been positive, happy, inclusive, empowering events. These movements have ushered in a change of administration backed with a strong popular, participatory spirit. They are fighting to re-gain control of the state from those who for decades have shaped the it, starting from the colonial pattern, for their own purposes. And these effort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most positive way. The contrast with the negativity in politics elsewhere in the world is astounding.

Korea is today at a special moment. Koreans can reimagine democracy. They have nowhere to look except their future for ideas. The social forces that resist the movements of the past few years frame their claims in classic tropes of democracy. They pretend to embrace openness and fairness, but really only in order to stall or prevent the exciting reshaping of the state that is underway. This is all the more reason why a reimagining of democracy is needed.

The reimagining of democracy has to involve dealing with South Korea's particular postcolonial situation. It means reorienting state institutions to serve most people, instead of serving the privileged minority. President Moon has lauded the recent public contestation around issues in reform of judicial institutions as an indication of healthy democratic practice. There are real grounds for optimism. Koreans can now imagine what their democracy should look like. We do not need external models or the advice of specialists; they can reinvent democracy for themselves. Here we are at the forefront of democracy worldwide. Many around the world will be watching Korea with hope.

If this year we are embracing the spirit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then we should focus squarely on the future for that is what is exciting. Now there is a remarkable opportunity to remake the state so that it can deal with the collective problems of 21<sup>st</sup> century: environmental degradation, inequality and slowed social mobility, and obstacles to achieving better work-life balance. That Korea has the chance to define how we respond to these global challenges today is a far more inspiring prospect than reminiscing on what transpired 100 years ago.



사회 - 임혁백 교수



발제 - 강원택 교수



토론 - 이연호 교수



토론 - 장덕진 교수



토론 - 에릭 모브랜드 교수



# 제4세션(Session 4)

## 경제·미래혁신 Economy & Future Innovation

대한독립선언과 대동평화 정신 100주년:  
광복,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혁신의 리더로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its Spirit of the Grand Union for Peace (大同平和): Korea as the Global  
Economic Innovation Leader of the Next Century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발표  
Presentation

광복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 리더로  
A Global Economic Leader for the Next 100 Years,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  
/ KIM Hyun-Chul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Discussion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 YOO Chul-Gyue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이강국 Ritsumeikan University 교수  
/ LEE Kang-Kook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 특별보좌관 / 서울대학교 교수  
/ LEE Jeong-Dong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conomy and Scienc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제자료 / Presentation Paper

# 광복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 리더로

A Global Economic Leader for the Next 100 Years,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

KIM Hyun-Chul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요약문

### 광복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 리더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8년, 한국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국가 중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경사 발전 방식'이라는 독특한 경제 성장 방식이 있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정한 산업 및 기업만을 선정하여 자원을 몰아주는 성장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장 방식은 '한강의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또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제(exclusion)의 제도화'다. 기회와 혜택은 선정된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었고, 많은 기업이 소외되었던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말한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가를 말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소외되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들을 포용하여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Innovation)도 필요하다. 혁신이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힘을 말한다.

혁신과 포용은 상보적 관계에 있다. 혁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야 포용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다. 역으로 포용은 삶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혁신하려는 의지를 제공해 준다.

혁신적 포용국가가 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광복 후 남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분단국가가

되었고, 오랫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었다. 이제 이 관계를 청산하고 남북이 서로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경제는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행운이자 기회이다. 남북한에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한국에게는 저성장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평화경제가 형성되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될 것이다.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해양으로는 아세안과 인도, 아프리카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 축이 될 것이다.

한국은 광복 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경제선진국이 된 나라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문턱에서 양극화와 저성장에 고민하는 중견국들에게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경험은 대단히 소중하다. 특히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가는 한국의 경험은 세계 여러 나라에 모범이 될 것이다.

혁신과 포용의 모범국, 평화와 번영의 모범국. 한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100년의 모습이다.

## Abstract

### A Global Economic Leader for the Next 100 Years,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IM Hyun-Chu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8, the GDP per capita in Korea reached the level of \$30,000. Of the countries with more than 5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Korea became the seventh member of the 3050 club.

Behind this remarkable development was a unique way of economic growth called “Uneven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e country took a growth approach that focused resources on specific industries and companies.

This type of growth was also a driving force behi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but it had its limitations.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xclusion’. Opportunities and benefits were focused on only a few selected companies and many were marginalized.

In short,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IIC) means ‘a country where everyone lives well together’. It is a country where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or excluded, and everyone enjoys a decent human life. In the field of econom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mall business owners, non-regular workers, young people, wom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who have all been neglected in the past, can now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ogether.

On the other hand, innovation is also needed in the economy. Innovation is the power to create better results than ever before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in all areas of the economy.

Innovation and inclusion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 Economic growth based on innovation can provide a financial basis for inclusion. Conversely, inclusion provides a sense of security and happiness in life and the willingness to innovate.

Besides being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we have another goal -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independence, Korea became divided into two countries due to ideological conflict and the two countries have long been hostile to each other. The two Koreas should now end this situation and embrace each other, and we must create a country where everyone lives well in peace and harmony.

The peace economy of the two Koreas which means economically cooperative relations in peace is a great fortune and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If a peace economy is realized in the two Koreas, South Korea will open a new way to escape from low growth.

In addition, if a peace economy is formed, Korea will become a bridge state connecting the continent and the ocean.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China, Russia, and Eurasia on the continent, and a starting point for ASEAN, India, and Africa on the ocean. Working with

these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key pillar of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Korea was previously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shortly after achieving independence, and now it has developed into an advanced economy. Such success can be shared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s experience in pursuing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is also valuable for middle-tier countries struggling with polarization and low growth at the threshold of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South Korea's experience in resolving hosti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achieving peace and prosperity will be a model for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 model for innovation and inclusion and for peace and prosperity- this is what Korea will be aiming for in the next 100 years.

## 원문

# 광복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미래 100년 글로벌 경제 리더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1. 한강의 기적과 발전국가 모델

2018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되는 국가 중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경사 발전 방식'이라는 독특한 경제 성장 방식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정한 산업 및 기업만을 선정하여 자원을 몰아주는 성장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들도 이러한 경제 성장 방식에서 선택받은 기업들이었다.

이러한 성장 방식은 소위 '한강의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또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제(exclusion)의 제도화'다. 기회와 혜택은 선정된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었고 많은 기업이 소외되었던 것이다. 물론 성장 초기에는 돈과 인력과 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수의 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중의 하나였지만 배제된 기업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 이후의 정권들은 이 경사 발전 방식이라 '성공의 방정식'을 계속 사용하며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더욱 제도화된 배제는 점점 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재벌과 비재벌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부자와 서민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등 배제가 가져온 피해는 점점 더 커져 가기만 했고, 그와 더불어 경제



성장률도 3%대로 추락해 갔다.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으로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더욱 강고해진 배제의 틀을 허물지는 못하였다.

이제 제도화된 배제는 한국을 저성장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제도화된 배제 속에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기 시작하여 합계 출산율이 0.98까지 추락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던 한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2. 혁신적 포용국가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양극화를 경험하였던 서구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란 사회 각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이론이다.

이 대안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IMF와 OECD, World Bank, APEC 등이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였지만,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가 배제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을 가져왔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포용적 성장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또한 D.Acemoglu (2012)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속에서 쇠퇴한 국가와 융성한 국가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의 포용성 차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약탈적 정치 경제에서 포용적 정치 경제로의 이행을 성공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럼 국가론으로써 포용 국가(Inclusive State)는 어떠한 국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말한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가를 말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소외되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들을 포용하여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이다. 특히 한국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적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혁신(Innovation)도 중요하다. 혁신이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힘을 말한다. 혁신을 통하여 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을 재생시켜야 하며 새로운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기후 환경 변화도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택과 공장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혁신과 포용은 상보적 관계에 있다. 혁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야 포용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다. 역으로 포용은 삶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혁신하려는 의지를 제공해 준다. 포용은 업무 몰입도도 증대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 또한 협동심과 상호 신뢰를 고양시켜 경제적 비용도 절감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도 축적해 준다. 이처럼 혁신은 포용의 기반을 제공하며, 포용 또한 혁신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국가가 바로 혁신적 포용국가이다.

### 3.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

한강의 기적을 낳으며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대체로 5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이 1% 정도씩 하락하더니, 지금은 2%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배제를 제도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1.1%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선진국들도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1%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같은 질적 성장에 있다. 다양한 포용 정책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용하기 위한 재원은 혁신을 통하여 얻어진다. 혁신적 정책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경제 혁신 등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2045년에 2%대의 성장률도 이룩할 수 있다. 현재의 예측치보다 1%가 추가되는 정도의 성장률이지만, 우리와 같은 선진 경제가 25년에 걸쳐 2%대 성장률로 수렴해 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3만불의 1인당 국민소득도 6만불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6만불과 삶의 질이 함께 이룩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된다.

그림 1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포용성에서는 매우 낮지만 혁신성은 중간 정도에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미래 비전 하에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혁신성 또한 함께 높여 나간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포용성과 혁신성이 대단히 높은 국가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이다. 이게 바로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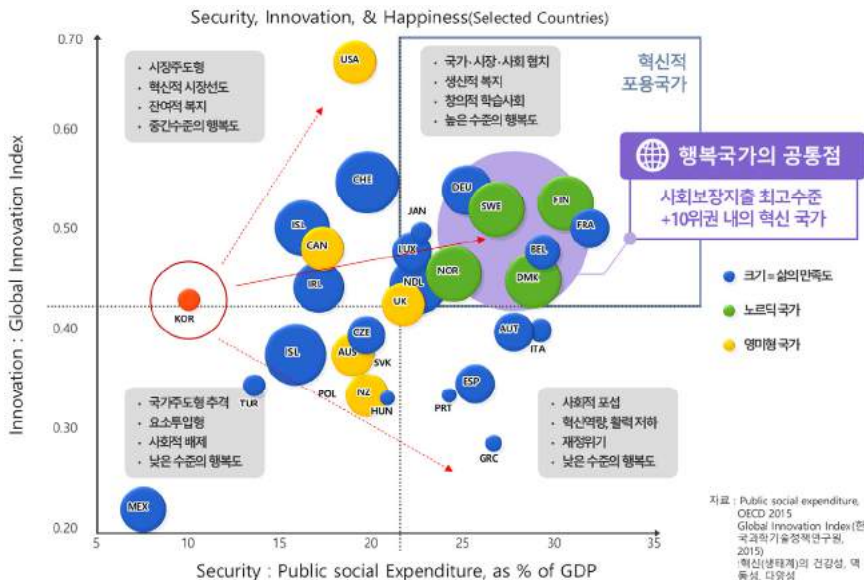


그림 1. 2045년 한국의 국제적 위상

#### 4. 한반도 포용과 평화경제 구축

미래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가 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광복 후 남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분단국가가 되었고, 오랫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었다. 배제는 고사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였다. 이제 이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도로와 철도로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환동해권은 에너지 자원 벨트로 개발되고, 환서해권은 산업과 물류, 교통의 중심 벨트로 개발되어 나갈 것이다. 군사 분계 지역인 DMZ에는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평화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이 더욱 진전되면 남북은

평화공동체와 더불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동북아 경제권에 있어서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환동해권은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극동 러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환서해권은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는 중국의 연안과, 특히 중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뒤쳐져 있는 동북 3성에게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경제는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행운이자 기회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저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으로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남북한의 평화경제가 보태진다면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남과 북의 대립으로 오랫동안 섬처럼 갇혀있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대륙과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수출입국을 기치로 해양으로 적극 진출하는 경제 정책을 구사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경제가 도래하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될 것이다.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해양으로는 아세안과 인도, 아프리카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다. 2030년만 내다보더라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들과 협력하고, 또한 북극항로마저 열리게 되면,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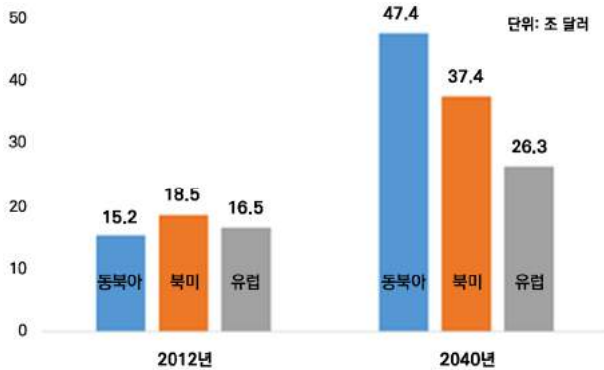


그림 2. 평화경제 실현 후 지역별 경제 규모

## 5. 글로벌 포용과 모범국가

한국은 광복 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이제는 경제 선진국이 된 나라다. 한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로 출발하였지만,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업화에도 성공하였다.

현재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도 포용하며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것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들을 설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가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물다. 그것도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이 모든 것을 이룩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경험이 한국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농업 국가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반도체와 ICT와 같은 최첨단 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많은 질문에 한국만큼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 전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들의 핵심 관료나 기업가들을 모셔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점 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함께 경제개발을 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다. 단순히 성공 경험을 전수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여러 중견국들에게 있어서도 모범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양극화와 저성장에 고민하는 중견국들에게 한국의 경험은 대단히 소중하다. 특히 포용성과 혁신성을 양립하면서 양극화와 저성장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한국의 경험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중견국들을 대표하여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함께 평화와 번영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모범국가가 될 수도 있다.

혁신과 포용의 모범국, 평화와 번영의 모범국. 한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100년의 모습이다.

## Full Paper

### A Global Economic Leader for the Next 100 Years, Beyond Independence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IM Hyun-Chu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and a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In 2018, the GDP per capita in Korea reached the level of \$30,000. Of the countries with more than 5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Korea became the seventh member of the 3050 club.

Behind this remarkable development was a unique way of economic growth called the “Uneven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e Park Chung-Hee regime took an approach to growth that focused resources on specific industries and companies. Representative Korean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and Hyundai, were also the companies selected for this type of economic growth.

This type of growth was also a driving force behi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but it had its limitations.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xclusion’. Opportunities and benefits were focused on only a few selected companies and many were marginalized. Of course, because resources such as money and



manpower were limited in the early stages of growth, it was a reasonable option to concentrate resources on a small number of companies, but it was an unfair economic policy for those that were excluded.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lso aware of these problems and made efforts to improve them, but eventually failed. Rather, the later regimes continued to use the equation of success - uneven development - to achieve economic growth, but more institutional exclusion began to reveal the limitations of this approach. The harmful effects of exclusion such as the gap between chaebols and non-chaebols, large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the rich and the middle class,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and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provinces only continued to grow, and at the same time, the economic growth rate dropped to 3%. In the end, President Park Geun-Hye, the daughter of President Park Chung-Hee, tried to correct these problems with the policy of “economic democracy,” but could not break down the already rigid framework of exclusion.

Now, institutional exclusion has not only forced Korea into a swamp of low growth, but also threatens its sustainability. Young people, who have lost hope in the system of institutional exclusion, have begun to give up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fallen to 0.98. Korea, which accomplish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is now facing a new challenge.

## 2.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IIC)

Western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low growth and polarization ahead of Korea, offer the strategy of “inclusive growth” as an alternative. Inclusive growth is the theory that providing equal access to economic activity for all members of society contributes to easing inequality and growing the economy. The theory argues that a fair share of the benefits of growth resolves income polarization,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theory was presented by the IMF, the OECD, the World Bank, and APEC as a reflection on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neoliberalism).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maximized market freedom but resulted in exclusive growth in which the fruits of growth are concentrated on a few people and the majority is excluded. In reflection, the inclusive growth policy was presented.

Scholars such as D. Acemoglu (2012) also argued in the book “Why Does the State Fail?” that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a declining state and a prosperous state lies in the inclusivenes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transition from a predatory political economy to an inclusive political economy was presented as a key policy of a successful country.

If that is the case, what is an Inclusive State in the theory of the State? In short, it is a country ‘where everyone lives well together’. In other words, it is a country where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or excluded, and everyone enjoys a decent human life.

In the field of econom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mall business owners, non-regular workers, young people, wom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who have all been neglected in the past, can now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ogether. In particular, Korea needs the hands of each one as it will see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face a super-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On the other hand, innovation is also needed in the economy. Innovation is the power to create better results than ever before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in all areas of the economy. Through innovation, the economy can jump to a higher level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At present, the Korean economy needs innovation. Traditional major industries must be regenerated and new ones must be fostered. Especially in thi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industries in the future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should be actively fostered. Climate change also requires innovation. Houses and factories must be converted into energy-saving types, and the renewable energy fields must be intensively nurtured.

Innovation and inclusion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Economic growth based on innovation can provide a financial basis for inclusion. Conversely, inclusion provides a sense of security and happiness in life and the willingness to innovate. Inclusion increases work engagement, increasing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t also boosts cooperation and mutual trust, reducing economic costs and building up social capital. As such, innov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inclusion, and inclusion is also a source of innovation. A country

that aims for this is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 3. Future of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The Korean economy, which crossed the threshold of developed economies with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has recently been declining. In fact, the economic growth rate fell by 1% every five years, and is now just over 2%. There are a number of causes for this, such as the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however, this is also the resul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xclusion. At this rate, a growth rate of 1.1% is expected i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Of course, 1.1% is not a low growth rate.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Japan, also see growth rates around 1% as their economies mature. Rather, the problem of the Korean economy is not in this quantitative growth but in qualitative growth such as quality of lif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various inclusive policies are needed.

But as we have seen, resources for inclusion come from innovation. Innovative policies can increase the quantitative growth of our economy. Properly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economic innovation can give us a growth rate of over 2% in 2045. If our economic growth converges to 2% over the next 25 years by adding 1% growth to the current forecast, the added value will be enormous. If this is achieved, the current GDP per capita of \$30,000 will be as high as \$60,000. If the quality of life improves with a GDP

per capita of \$60,000, Korea will become one of the best countries to live in the world in terms of quality of life.

Figure 1 shows the status of the world's major countries. Korea is very low in inclusiveness, but in the middle in terms of innovation. Under the vision of becoming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enhancing inclusiveness and innovation together can allow Korea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countries such as Sweden, Denmark, Finland and France. Not only are these countries highly inclusive and innovative, but also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This is the goal of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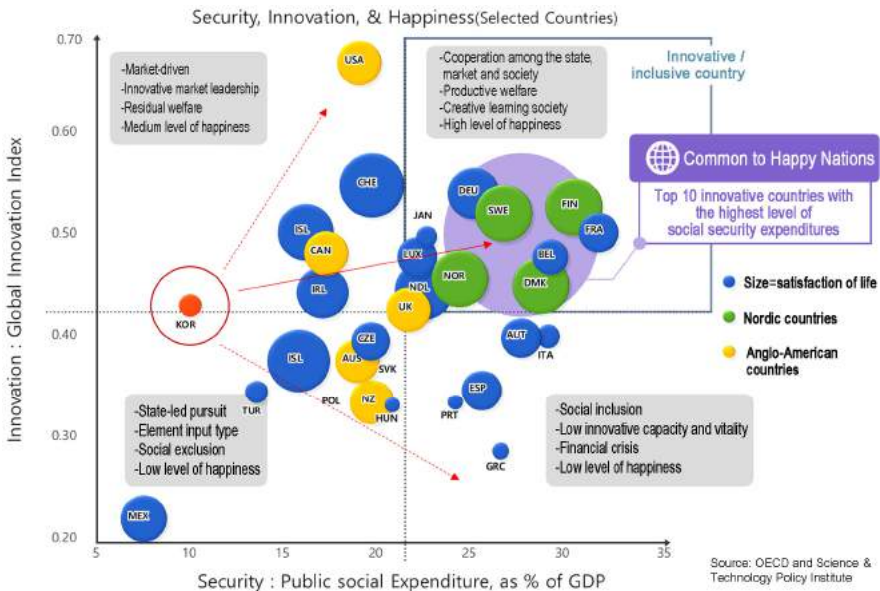


Figure 1. Korea's International Status in 2045

#### 4. Embracing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Peace Economy

Besides being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we have another goal for the next 100 years, which is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independence, Korea became divided into two countries due to ideological conflict and the two countries have long been hostile to each other. The two Koreas should now end this situation and embrace each other, and we must create a country where everyone lives well in peace and harmony.

As the two Koreas connect to each other by road and rail, they must achieve economic growth together. The East Sea rim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eveloped as an energy resource belt, and the West Sea rim will be developed as a central belt for industry,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There will be a 'peace park'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to promote peace tourism. As this progresses, the two Koreas will become an economic community as well as a peace community.

Such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a new opportunity for the Northeast Asian economy. The East Sea rim will serve as a new path of economic growth for Japan and far-eastern Russia, which are experiencing sluggish growth. In addition, the West Sea rim will provide new economic growth opportunities for the coastal areas of China, which are falling into a low-growth swamp, and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which are most lagging in economic growth in China.

The peace economy of the two Koreas is a great fortune and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As mentioned earlier, Korea is currently facing the crisis of low fertility and low growth. If a peace economy is added to efforts to escape this crisis by realizing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South Korea will open up a new way to escape from low growth.

Moreover, Korea has long been geographically isolated like an islan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t has long been blocked from the continent without being able to utilize the geopolitical advantage that connects the continent with the ocea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established an economic strategy to actively advance into the ocean under the banner of “National Prosperity through Export” and, as a result, achiev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Now, if the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and a peace economy is achieved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will become a bridge state connecting the continent and the ocean.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China, Russia, and Eurasia on the continent, and a starting point for ASEAN, India, and Africa on the ocean. In particular, ASEAN, India and Africa are emerging as new growth engines for the global economy. By 2030, India and Indonesia will be two of the world's five largest economies. Working with these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key pillar of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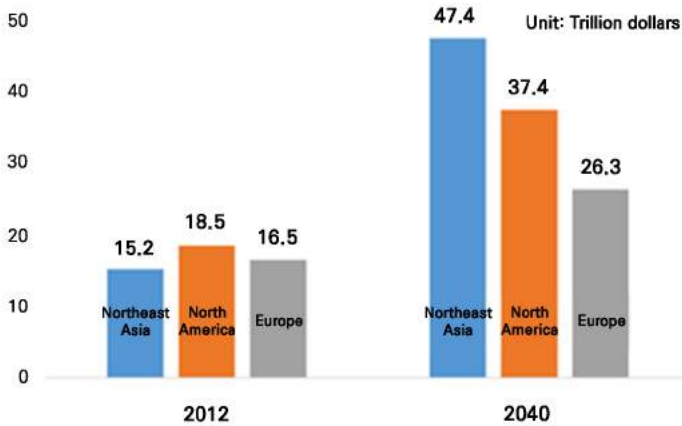


Figure 2. Economic Scale by Region After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 5. Global Inclusion and Model Country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shortly after independence, and has now developed into an advanced economy. Korea started as a poor agricultural country, but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by developing light industry, heavy chemical industry, and cutting-edge industries.

Korea is currently facing the difficulties of low growth and polarization, but will overcome these under the banner of becoming an innovative and inclusive country.

South Korea will move on from the hostile relations of the past and embrace North Korea, bringing peace and prosperity together. It will also be a nation that realizes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persuading powerful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while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them.



Countries with this kind of experience are rar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achieved all of this in the short period of 100 years. This experience will be a valuable asset for Korea.

For developing countries seeking to become developed, Korea will be the best benchmark. How to escape from an agricultural country? How to switch from light industry to heavy chemical industry? How to foster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ICT? No country can answer many of these questions with certainty. Korea can be a hub country that passes on its experiences of succes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f necessary, can work together with their key bureaucrats and entrepreneurs to solve problems.

In particular, South Korea will have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an economy and building an economic community with North Korea. This will also be a valuable experi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because Korea can be a model country that not only transfers successful experiences but also thinks and works together with developing countries.

Its role as a model country is also important for many of the world's middle powers. Korea's experience is valuable for countries that are struggling with polarization and low growth at the threshold of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s experience of overcoming polarization and low growth, while embracing inclusiveness and innovation, is of great importance for middle powers.

Korea is also a model country that can persuade powerful nations on behalf of middle powers and work together with them to create a

world order of peace and prosperity.

A model for innovation and inclusion and for peace and prosperity  
- this is what Korea will be aiming for in the next 100 years.

# 토론/Discussion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YOO Chul-Gyue**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이강국** Ritsumeikan University 교수

**LEE Kang-Kook**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 특별보좌관 / 서울대학교 교수

**LEE Jeong-Dong**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conomy and Scienc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원문

### 제조업의 위기인가 탈공업화인가 : 한국은 탈공업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의 비전이 필요하다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4월 한국은행은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0.3%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한국경제의 상황과 경제정책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발표가 있기 전에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일반적인 전망치는 0.0~0.3% 정도였는데 이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다. 이번 발표에서 업종별로 볼 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조업이다. 마이너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0.3%를 기여도별로 나누어 보면 서비스업은 0.9%포인트, 건설업은 -0.4%포인트인데, 제조업은 무려 -2.4%포인트를 차지했다. 또 한가지 제조업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다음날 발표한 2018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이다. 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외국에 공장을 짓고 부지를 매입한 금액이 1980년 이후 최고치인 478억 달러이었다. 2017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31.5%, 대기업은 4.4%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015-2018년 간 두 배로 커졌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규제강화와 개입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야당은 계속 정책실패만 강조한다. 정부는 마치 전혀 몰랐다는 듯 갑자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보여주기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전에도 수십 번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제조업 위기’라는 주제로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도 법인세가 높다든가, 규제를 친기업 방향으로 완화해서 기업 기살리기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이미 과거에 사용했었던 천편일률적인 방책을 중심으로 논란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위기’라고 쓰는 말

속에 각종 단기 처방들을 써가며 어떻게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전과 같은 모양의 제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담긴 것이라면 잘못 생각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에 진행되고 있는 일은 ‘위기’라는 관점보다는 ‘탈공업화’란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전자를 제외한 모든 수출업종에서 수출증가가 2011년의 정점을 지나 정체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역사상 최초로 두해 연속해서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정체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다. 대체로 1960년대 말까지 중화학공업화(산업화)를 마무리한 미국, 유럽, 일본은 70년대에 들어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탈공업화라 부르는 산업구조상의 변화가 나타나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조차 1960년 29.8%에 달했던 제조업 고용 비중이 2012년에는 20%로 줄었다. 일본을 보더라도 1974년 27.6%에서 2011년에는 17% 선 아래로 푹 떨어졌다. 이와 함께 GDP 대비 비중(부가가치 기준)도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다. 서구의 탈공업화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의 시작 시점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LG전자가 경기도 평택의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전부 베트남 하이퐁으로 옮겨 가기로 한 것도 위기라기 보다는 탈공업화의 맥락이다.

한국의 GDP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30% 내외로 아마도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이 EU전체를 내수시장으로 삼고 있다는 점(즉, 독일은 유럽전체의 제조업 기지라고 봐야 함.)을 고려하면서 보면, 한국은 제조업에 관한 한 독보적인 국가이다. 1998년 외환위기가 일단 마무리된 2000년대 이후 한국제조업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독일은 같은 시기 임금상승률을 크게 낮추었지만, 한국의 제조업 부문 임금 상승률은 OECD 국가군 중 최상위그룹에 속했다. 생산성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아도 OECD 최상위권이었다.

서구에서 탈공업화의 시작은 대체로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기는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이른 한국에서 탈공업화가

시작되는 것은 오히려 너무 늦어 놀라울 정도이다. ‘위기’로 보지 않고 탈공업화라 보면, 가장 큰 정책상의 과제는 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이다. 그리고 혁신과 기초학문에 기반한 교육시스템까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하여 제조업 이후를 그리는 큰 그림을 요구한다.

삼성전자가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6,000만대의 스마트 폰을 세계각지에 있는 자기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중국업체에 ‘제조사(생산자) 개발방식(ODM)’으로 외주 생산을 맡기기로 했다고 알려졌으며, 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체 생산물의 구성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급격한 확대는 그 부품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하청 문제 등 중소기업 문제의 급격한 지형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경제는 탈공업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의 비전이 필요하다.

## Full Paper

### The Crisis of Korean Manufacturing? : Korea Needs a New Vision for Post-industrial Economy

YOO Chul-Gyue

Professor,  
Economics, Division of Soci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In April, the Bank of Korea announced that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contracted 0.3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from a quarter earlier. It had considerable social impacts on discussions about economic situation and policy. The estimated value that was initially known in the market was around 0.0-0.3%, but the actual value is well below this level. The most noticeable part of this announcement is the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it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negative grow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ed for -2.4 percentage points. Another noteworthy point relat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2018, announced by the Korea Export and Import Bank the following day. The purchases of foreign companies,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in a foreign countries and the purchase of factory sites are \$ 47.8 billion, the highest since the year of 1980. Compared to 2017, SME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creased it by 31.5% and large companies increased its



amount only by 4.4%. SMEs' overseas investment doubled between 2015 and 2018.

The business community has pointed out the government's stricter regulations and interventions, including such as raising minimum wages and shortening working hours, and the opposition parties continue to place stress only on the total policy failures. The government suddenly held an "emergency" meeting of the relevant Ministers as if they had never known it.

As was the case in the past, discussions will continue on the theme of "the crisis of manufacturing". It will provoke controversies over policy measures centered on uniform measures that have already been used in the past, such as the corporate tax reduction, relaxed corporate regulations and support package for the industry. However, the word "crisis" may contain the prospect that if we pass only the worst corner while using various short-term prescriptions, we will be able to maintain manufacturing business as before. It may be wrong.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s currently not in a "crisis", but in the advent of an era of "post-industrial economy". In all export industry except electronic industries, export growth has stagnated since the peak of 2011. And in two consecutive years, 2015 and 2016,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sales growth rate of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gative.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has already been stalled for a quite long time.

In general,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had completed their industrialization based on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by the end of the 1960s. In the 1970s, a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called

deindustrialization (or post-industrialization) appeared, centered on a decrease in the employment sha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o far it is in progress. For example, even in Germany, where the percentage share of manufacturing is the highest in Europe, the employment in manufacturing, which reached 29.8% in 1960, decreased to 20% in 2012. Looking at Japan, it dropped from 27.6% in 1974 to 17% in 2011. At the same time, the relative share in GDP (based on added value) also shows decreases in a similar trend.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de-industrialization of Western Europe is related to the start of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LG Electronics decided to move the entire production lines of Smartphone in Pyeongtaek, Gyeonggi-do to Hai Phong, Vietnam. It is the symptom of not so much crisis as of post-industrialization.

South Korean economy may have the largest share of manufacturing in the advanced economies (around 30% of GDP). Considering that Germany has the entire EU as a kind of domestic market (that is, Germany must be seen as a manufacturing base for the whole of Europe), it is a unique advanced economy as far as manufacturing is concerned.

Since the end of the 1998 currency crisis,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has achieved the best practice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Germany has greatly reduced the rate of wage growth in the same period, but the wage growth rat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Korea belonged to the highest group in OECD member countries. Even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sales standards, it belonged to the highest group in OECD countries. The succes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tself is the main reason of the crisis phenomena.

It is known that the start of de-industrialization in Western Europe generally coincides with the point where income per capita exceeds \$ 10,000. The start of post-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reaching \$ 30,000 is rather surpr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post-industrialization in spite of the “crisis”, the biggest policy challenge is the soft landing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And it demands a big picture depicting the subsequent production structure that includes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an educational system.

Samsung Electronics decided to outsource the production of 60 million smartphones to Chinese makers and Hyundai Motor Group announced that automobiles will account for 50 percent of the group's portfolio. In addition, the arrival of an era of the eco-friendly vehicle also indicates the coming radical changes in the subcontracting issues and SME problems. Korean economy needs a new vision for post-industrial condition.

## 원문

### 다음 100년간 대한민국의 공평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강국 Ritsumeikan University 교수

#### 1. 대한민국의 기적으로부터 기적의 종말까지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개발 도상국들과는 달리, 급속한 경제 성장과 평등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과거 한강의 기적 또는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렸습니다. 민족의 해방 이후의 토지 개혁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평등을 달성하여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으며,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발전국가의 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토지 개혁이 실현되었던 식민지 기간 동안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1919년, 임시 정부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등에 대한 강한 신념은 당시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았던 정치 체제에서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유인을 발전시킴으로써 일궈낸 경제 성장과, 동반 성장을 위한 포용적인 경제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재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침체된 경제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1997년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도 심각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생산성상승이 둔화되는 최근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는 이윤 주도, 부채 주도 성장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빈부격차와 화합을 간과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 성장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인 정책 수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하여, 이제 포용과 진보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그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 2.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평

불평등의 심화는 세계화, 기술 진보 및 권력 관계와 제도의 변화로 인해 많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기초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포용 성장이라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학도 크게 변화되어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해로우며, 삶의 질에 의해 측정되는 진정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불평등은 금융 시장이 불완전한 현실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락시키고, 또한 정치적 안정성을 악화시키며 사회 포용을 위한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 실제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금융 위기 이후 GDP에서 임금에 대한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과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불평등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소득과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고 공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번영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틀렸으며,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국가 간 실증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은 특히로 측정되는 혁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평등이 빈곤 가구 자녀들의 성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과 정치적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는 포용적 제도의 발전을 방해하는데, 그 결과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이 저하됩니다. 결국 포용은 확실히 혁신을 촉진하며,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집권 정당조차 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에서, 분배와 공평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적인 의지를 동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라는 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의제는 공평함과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의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었듯이, 다음 100년간 민주주의로 뒷받침되는 포용 성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 Full Paper

### Promoting Equity and Growth in Korea for the Next 100 Years

LEE Kang-Kook

Professor,

College of Economics,

Ritsumeikan University

#### 1. From the Miracle to Its Demise in Korea

Korea was called the miracle in the past such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or the East Asian miracle because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equal income distribution, different from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land reform after national liberation was essential to the great success of the Korean economy. It made the whole country equal, leading to an increase in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al state that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successfully. We should remember that the Korean people struggled to achieve national liberation and equality in the colonial period, and i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land reform. In 1919, the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declared that all Korean people were equal. The strong idea of equality in Korea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after the 1960s by increasing human capital investment, developing an incentive to work hard, and promoting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for shared growth although

its political regime was not very democratic.

However, the miracle in Korea appears to have been gone entirely for now. Koreans are currently concerned about a vicious circle of rising inequality and stagnant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rose fast after the mid-1990s, particularl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growth slowed down seriously. The fast aging and low fertility problem in the recent period depress the Korean society and economy. Conservative governments to pursue profit and debt-led growth made the problem worse by ignoring 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The Moon government tried to change the course by promoting income-led and inclusive growth, but there was some limitation in term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reality such as the limitation of fiscal expansion. Thus, it is crucial for now to think of the new direction of the Korean economy for inclusion and innovation in this centennial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2. Promotion of Equity is Good for Innovation and Growth**

Inequality has risen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long with globalization, technical progress, and changes in power relations and institutions. Along with harsh criticism against this, especiall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esent the policy agenda of inclusive growth. Economics also changed a lot. Now it emphasizes that serious inequality is harmful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and hampers real



development measured by a quality of life. Many recent studies report that inequality exerts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reality without perfect financial markets by depressing human capital investment, aggravating political instability and blocking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institutions. The Korean economy is certainly a case for this new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inequality because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fallen together with rising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and the falling share of wages out of GDP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s suggests that Koreans should make efforts for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to promote equity, which is essential to long-run economic prosperity. The efforts include the reform in the labor market to overcome the divided market structure by empowering vulnerable workers. The larger role of the government in redistribution and the reform for fair competition are also called on. Some argue that income-led growth in the Moon government was wrong and we need more innovation for growth based on more deregulation. However, my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reports that inequality of income and that of opportunity are bad to innovation measured by the number of patents. It is because inequality hinders the success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without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Besides,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political power results in bad institutions, which hampers incentives for hard work and innovation. Inclusiveness certainly promotes innovation, and the effort to reduce inequality could encourage innovation and thus long-run prosperity.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including fiscal

expansion and tax reform is called on for this purpose. But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to mobilize political will to promote better distribution and equity in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in which the ruling party does not seem to be very interested in it.

The Moon government presents the agenda of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I believe that it is really meaningful in that the agenda underscores the essential and virtuous interaction between equity and growth.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strong enthusiasm of Korean people for political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If the agenda is achieved successfully, Korea will become a paragon of developed countries for its inclusive growth supported by strong democracy for the next 100 years as it was a parag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st.

## 원문

### ‘새로운 대한민국’부터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경제의 과제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 특별보좌관  
/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

한국 산업 기술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도전”과 “축적”의 역사였습니다. 첫 도전이 되었던 결정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수입된 매뉴얼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기술을 일구겠다는 것 또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첨단기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모두가 ‘현재와 같은’ 것은 아니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도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시행착오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산업기술의 발전사는 ‘도전’과 ‘축적’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이는 시행착오가 없고, 축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음 단계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도전과 축적 과정이 톱니바퀴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도전과 축적을 통해 하나씩 지식을 발전시켜 온 산업기술 발달사는 또한 중대한 전환이 지표면에 단층으로 새겨지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 첫 번째 전환이 됐습니다. 1980년대 생산 역량을 넘어서 기술 발전에 투자하던 과정은 두 번째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에 집중된 첨단 기술 수준에 도전하던 과정도 중요한 전환의 사례였습니다.

산업 기술과 관련하여, 패러다임은 기술 도입으로부터 내생적인 기술 학습 및

독자 기술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각각의 패러다임 전환 이후에는, 기술 구성의 깊이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산업 구성도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의 변화도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회고해 보건대,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산업이 오늘날 이룬 성취는 희미한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에서도 반짝여 보이는 별빛과 같은 것이며, 다수의 개도국들이 선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깊이를 가진 우주를 건넌 것과는 같은 도전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성공적인 노력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밤을 낮처럼 밝히며 한국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든 기술 개발의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한국 산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술은 빠르게 도입 기술로, 체화 기술,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선진국들에서 입증되었던 개념 또는 기술의 여정 위에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그것들은 선진국들의 기술을 가져오거나 (도입 기술), 그것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재생산하거나 (체화 기술), 첨단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한 (독자 기술)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다른 개도국도 이 단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분명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산업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더욱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 대신에, 한국은 선진국들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기술들과 제품들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눈 내리는 들판을 앞서 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없이 자신의 길을 처음 찾아가야 하는 사람처럼, 한국은 실패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며 대담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계속 가기 위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 수입, 기술 체화, 그리고 독자 기술로 표현되는 추격자 전략을 넘어서 말입니다. 새로운 개념들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도 전략의 목표로 산업의 틀을 바꿀 때인 것입니다.

새로운 발걸음이 필요하지만, 불행히도 수년에 걸쳐 한국 산업 기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진정한 도전이 되는 선도 기술의 기반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이 기존 및 신규 산업 모두에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진국들은 새로운 개념들로 게임의 룰을 부단히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한국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더욱 노력 중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업가 정신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 거의 아무것도 없던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오늘의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목표와 접근방법 또는 모든 과거의 관행들을 다시 생각하여 바꾸기 위해 대담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산업이 지난 70년간 도전적인 목표를 계속 설정하면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축적을 이어왔다는 근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사회 모든 혁신의 주역들이 함께 어울려 달성해냈던 성공적 전환의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도전, 축적, 그리고 전환’. 이는 미래 발전을 향해 가는 한국 산업을 인도하는 지침의 키워드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 내용은 “한국공학한림원(2019)”, “대전환”, “서울: 지식노마드”에서 제시된 발제자의 원고를 참조한 것입니다.

## Full Paper

### Challenges of the Korean Economy from ‘New to the Korea’ to ‘New to the World’

LEE Jeong-Dong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conomy and Scienc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y of industrial technology in Korea is, above all, the record of “challenge” and “accumulation”. The first challenging decision was to build a production facility in a ground-zero state with nothing. Beyond simply learning the imported manuals, trying to build your own skills was also a difficult decision. Trying to reach the level of advanced technology was a difficult decision for developing countries. It wasn’t all ‘as it is now’, but rather a challenge to higher goals. Hard trial and error experience has accumulated in the very process of setting and achieving these tough goals. Therefore, the history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can be best expressed in terms of the history of ‘challenge’ and ‘accumulation’. Without the challenge, there would be no trial and error, and there would have been no accumulation. If not, the next step would not have started. Challenges and accumulation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like cogwheels.

The history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has

developed the knowledge one by one with challenges and accumulation, is also a record of a paradigm shift in which several major transitions are clearly carved as faults in the ground. In the 1970s, the process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heavy chemical industry was the first transition. The process of investing in technology development beyond the production capacity in the 1980s was also the second transition. And since the 2000s, the process of challenging the level of advanced technology centered on digital technology was also an important transi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the paradigm shif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to endogenous learning of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one's own technology. After each paradigm shift, technology portfolios and depths have been upgraded, and the industry portfolio has deepened. Besides, changes in corporate strategy and government policy support this transition. Looking back after the paradigm shift, all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felt the necessity of the transition and the result of their efforts made a breakthrough.

Today's achievements in the Korean industry are starlight shining even in the night sky full of faint stars, and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envious. But it is the result of challenge and patience that has crossed the universe of infinite depth. Based on the memory of the successful efforts, researchers and engineers are illuminating the night as day to solve the difficult task of technology development anywhere in the Korean industry. Based on such efforts, the Korean industry will go one step further.

It is always sweet to look back on accomplishments so far. But yesterday's success doesn't guarantee tomorrow's success.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has been rapidly transformed into introduced technology, embodied technology, and its own technology, but it was based on the concept or technology path that has been proven in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they focused on bringing the technology of developed countries (introduction technology), reproducing it by their own efforts (embodied technology), or aiming for the level of advanced technology (own technology). No developing country has yet succeeded in this stage, except in Korea. It is evident that the process is so difficult, and it is also a sufficient basis for us to be proud of ourselves.

But now, the Korean industry faces different challenges from the past. Rather than making better technologies and products already developed in advanced countries, South Korea should challenge the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advanced countries have not yet tried. Like the first person to make his way to a snowy field without the footprints of the person who walked ahead, he must be prepared to fail and be bold. There is also a need for perseverance that keeps on going the way. Now we are facing another paradigm shift. Beyond the fast follower strategy, which is expressed in terms of importing technology, embodying technology, and own technology. It is time to change the industry's framework with the aim of the leading technology, changing the rules of the game with new concepts.

Although a new step is needed, a warning continues, unfortunately, that the foundation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has weakened



over the years. The foundation of leading technologies that truly challenge new concepts is not mature enough, and the overtaking of China is becoming a reality for both existing and new industries. Traditional developed countries are constantly changing the rules of the game with new concepts. Also,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more to actively check the growth of Korean industry. Even inside Korea,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deterioration of entrepreneurship.

Korean industry created today's miracle in virtually nothing ground-zero. To move forward, rethinking and changing goals and approaches, or all the practices in the past requires a bold transformation. However, we must remember the meta-principle that the Korean industry has accumulated one step at a time while continuously setting challenging goals for the past 70 years. Besides, we must look back on our current situation and have a consensus that a revolutionary paradigm shift is necessary. We must also revive the successful transition experience that all the actors of innovation in Korean society have achieved together. 'Challenge, Accumulation, and Transition': This is also a keyword of the guidelines that the Korean industry should guide as to future development.

The above message was based on the author's manuscript published in "National Academy of Engineers of Korea (1992)", "Great Transformation", "Seoul: Jisik Nomad."



사회 - 최정표 원장



발제 - 김현철 교수



토론 - 유철규 교수



토론 - 이강국 교수



토론 -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 특별보좌관



# 제5세션(Session 5)

## 사회 Society

100년의 인구변천과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과제  
A Century of Population Change and  
Future-Oriented Challenges in Korean Society

발표  
Presentation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작은 생각:  
한국사회의 인구변천과 근대성에 대한 성찰  
A Few Thoughts on Low Birthrate, Aging Societies:  
Reflections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Modernity in Korea

박경숙 서울대학교 교수  
/ PARK Keong-su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Discussion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  
/ PARK Joon-Shik Professor, Hallym University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 LEE Myoung-Jin Professor, Korea University

최혜월 University of Iowa 교수  
/ CHOI Hyaeweol Professor, University of Iowa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작은 생각: 한국사회의 인구변천과 근대성에 대한 성찰

A Few Thoughts on Low Birthrate, Aging Societies:  
Reflections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Modernity in Korea

박경숙

서울대학교 교수

PARK Keong-su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요약문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작은 생각: 한국사회의 인구변천과 근대성에 대한 성찰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한국 사회의 변동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 ① 한국 사회의 인구 변천과 근대성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개념화하고, ② 정치 갈등 심화에 주목한다.

① 1960년대 근대화의 과정에서 심화된 발전주의적 행위와 제도 하에서 한국은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갔고,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누구나 꿈꿀 수 있던 사회 이동의 문이 빠르게 닫혔다. 비슷한 시기, 만혼화 추세가 강해지고, 노년의 고독, 가난, 소외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졌다.

② 근대적 표준 삶의 욕망과 그로부터의 이탈이 평행하게 질주하는 가운데 욕망, 가치관, 제도적 규정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괴리를 투사한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자기 이해중심적이고 계층화되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이 실패한 중요 요인은 사회 시스템의 내적 모순은 그대로 둔 채 무늬만 젠더 평등, 선심성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이었다는 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여성의 출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 등에 있다. 경제, 발전의 구호에 묻혀 아이들과 노년의 삶의 요구는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진단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불공정, 불신, 혐오를 촉발하는 불평등 기제를 개선해야 한다. 자율성과 다원성이 억압되지 않고, 개개인의 잠재력이 사장되지 않는 교육, 노동, 복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표준적 정상가족과 위기 집단을 차별화하지 않고 다양한 삶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설계가 요청된다.

## Abstract

### A Few Thoughts on Low Birthrate, Aging Societies: Reflections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Modernity in Korea<sup>1)</sup>

PARK Keong-suk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are symbolic of the current monumental transformations that the most basic conditions of life and living - survival, reproduction, care, and intimacy - are undergoing, both on micro and macro scales. However, perspectives on what constitutes the problem or crisis regarding the phenomena of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s are largely discrepant and these discrepant perspectives propose very contradictory social agendas. This essay is meant to put forth a few ideas regarding the societal changes as exacerbated by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s, as well as the problems and tasks that lie ahead for our society.

I first focus on conceptualizing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transitions and modernity in Korea. Korean socie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society which passionately strove for

---

1) Original version of this paper is prepared to publish on Journal of Asian Sociology December 2019.

demographic transi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notions of development and the modern family claimed their places as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 of Korean society and Koreans, and the desire of their live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hich was justified by the ideologies of development and the modern family, and its worsening contradictions, demographic transition occurred in a compressed manner. Demographic transition, which had been believed to be a better state of balance in life, suddenly presents to us with the worrying notion that it may in fact boil over into the end of reproduction all together.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development and the modern family system mean that life became overly selected and increasingly unequal on the basis of development, power, production, and success. Furthermore, in family-centered lives based on gender disparity and instrumental familism, risk of intimacy and care have increased.

Secondly it must be noted that while the races towards the desire for a standard modern life as well as breakaway from it proceed in parallel to one another, the political conflicts reflecting the gap between realistic conditions and desires, value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re growing worse. Social group in line with their tone of conjuring the past, constructed conservative policy which claimed it would solve the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problem by saving the economy and making families wholesome again. However, their conservative policies have roused considerable resistance from young women. The progressive bloc which had promised bold social reforms has not been able to truly empathize with the suffering of those unable to adapt to

the systems of the modern family and development, those who are excluded and struggling through life.

Dynamism and potential for innovation in Korean society has allowed when many of these people of crises, enduring anguish and brokenness, do not lose hope.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must look squarely in the face the fact that the social crisis of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s is a result of this logic of normalcy which differentiates life on the lines of development and success. We must not place a new start into the existing decrepit framework. We must actively be searching for a route to a society in which self-honest lives are supported, and among the diverse conditions of life, reproduction, survival, care, and intimacy are safeguarded.



# 토론/Discussion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

**PARK Joon-Shik** Professor, Hallym University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LEE Myoung-Jin** Professor, Korea University

**최혜월** University of Iowa 교수

**CHOI Hyaewool** Professor, University of Iowa





## 원문

###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과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장기적 혁신 정책의 필요성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지역에 따라 극심한 공간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의 공간적 유출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지역들의 경우 당장 지역소멸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간에는 거대한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장벽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지역 이동이 함께 심화되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혁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구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혁신의 기회를 보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기회 요인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화 시대에는 인적 자원의 양이 중요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 사회가 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존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인적자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전자의 정책이 사람 중심 성장과 혁신에 방점이 있다면, 후자의 정책은 한 사회의 인구가 더욱 다원적 구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략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적 혁신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경제 요구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 바 있다. 인구 감소가 경제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전환은 이를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고령화와 지역의 인구 위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 제도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사회 5.0’은 초국가적 성장을 위한 로드맵인 셈인데, 그 정책적 목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고령화는 노인의 건강, 문화, 여가 및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많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혁신은 노동력 감소로 가중되는 사회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노인들이 노동 시장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한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혁신에 미치는 인구 증가의 영향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인구의 공간적 집중과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거대 도시가 모든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단극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비전과 전략의 틀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각각 인구 5백만 명을 가진 두 도시가 1천만 인구의 도시 하나보다 더욱 혁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인구의 적절한 균형적 분포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핵심적인 국가적 정책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자생적 산업 및 생활 거점을 의미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는 지역 혁신 전략에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클러스터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역의 혁신 성장 동력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성공적인 산업 혁신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 기업친화적 법제도와 정책의 추진, 산학연 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혁신 전략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매력적인 노동력 풀의 공급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접근의 주체 역량은 궁극적으로 지역에 존재한다. 지역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 경제적 다양성은 인구 분산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은 모든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 인구 분산, 출산율 증가,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구 변화와 혁신 사이의 상호 선순환 과정의 성장으로 인구감소의 재앙을 극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다원적 사회로의 획기적인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공공 투자가 이러한 변화를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양질의 정주 여건은 인구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자산일 뿐만 아니라 혁신의 기반 시설이 되기도 한다. 학교와 평생 교육 시설들은 혁신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들을 장려하고 유인하는 공간이다. 병원과 의료 시설들은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들을 촉진할 수 있다. 도서관과 회의장은 정보, 지식, 사상의 교류와 결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18세기 런던과 파리에서 확산됐던 커피숍들이 근대의 과학, 기술, 사상적 혁신에 기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 편의 시설에 대한 과감한 공공 투자는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 Full Paper

### Population Aging and a Need for Innovative Policy Agendas of Next Decades

PARK Joon-Shik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Hallym University

It is a well-known that population aging is progressing rapidly in the Korean society.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population and age distribution differ across regions. While the population tends to increase and the relatively high level of young population ratio maintains in capital due to population influx, population tends to decrease and aging population is accelerating in large,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across non-capital region. Both of the population aging and regional imbalance of population distribution would be the risk factors for Korean society's future development.

Howeve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otential impact of low fertility and aging on innovation is not totally negative. First, if the quantity of human resources was important in the industrial age, their quality is important in the digital era. The reduction in school-aged populat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quality of education. Secondly, population pressure caused by a reduced labor force and increased support costs can promote a rang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Various social problems brought about by aging provides opportunities to boost innovative activities. For instance, Japan's Society 5.0 is a roadmap for trans-national growth, which aims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s due to population aging by applying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Internet of Things, across the society. Much progress can be made in technological, cultural, and social sectors related to the health, culture, leisure, and the livelihood of seniors. Such innovation can also contribute to reducing the social burden resulting from a reduced labor force as well as enhancing social vitality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eniors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nd the society.

Our question is how to detect and utilize such opportunities. While various factors may be involved in building innovative capabilities of a regions, there may be a fixed ceiling to the maximizing effect of population growth on innovation in regions. If a ceiling does exist, however, the unipolar system, in which a super-big city absorbs all human, financ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may not be an effective way of augmenting nationwide innovation outcomes. From a national standpoint, for instance, two cities each with a population of 5 million may be more conducive for innovation than one city with a population of 10 million.

Clusters are regarded as the core in the system of regional innov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ly successful clusters a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area. Various policy approaches should be

implemented, such as attracting businesses, establishing business-friendly legal and policy institutions, and creating a system of university-research-industry collaboration to build clusters.

From a demographic viewpoint, these must be coupled with the provision of an appealing labor pool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key to a comprehensive approach lies ultimately in the regions. Social and economic diversity of areas, each supporting regional innovation,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dispersion of the population, and various forms of innovation using social, economic, spatial, and cultural resources are necessary for all regions. Such innovation initiatives will in turn lead to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population dispersion, increased fertility rates, and effective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A mutual feedback process between population changes and innovation must be established for the vicious cycle to be transformed into a benign one.

Public investment in regional amenities may be a starting point for fostering this transformation. Regional amenities are both appealing assets to attract populations and infrastructures for innovation. Schools and lifetime education facilities are spaces that foster and attract creative talents necessary for innovation. Hospitals and health facilities can promote various types of physical and mental activities by expanding life opportunities. Libraries and meeting places provide opportunities to trade and merge information, knowledge, and ideas. It is well known that the coffee houses that spread in London and Paris in the 18<sup>th</sup> century contributed to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innovation of modern times. Bold public investments in

regional amenities may be the small flutter that will result in the massive typhoon in the form of balanced development across all regions.

## 원문

###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도전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의 효과성과 방향에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인구 실태 시정 위원회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서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 구조의 변화에 관한 몇 가지 특징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개인이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잘 알려져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에 특화된 결정적인 단일 정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일한 정책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면 원래의 국가에 적용할 때와는 다른 점이 발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셋째로, 저출산과 관련한 개인의 결정과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결론적으로 퇴화되고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별적인 기준이 상승하고 또 다양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빠르게 배웁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존의 길을 찾는 동안에도 한국 정부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까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행동해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관련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필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 노동 및 복지를 본래의 연결 고리에 맞추어 유연하게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현행 교육 부문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은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왔고, 학생들의 변화와 노력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희생이 발생하고, 사교육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교사와 같은 교육 제공 기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왔는지 되돌아 볼 때입니다. 아마 교사의 자질이 초등 교육이나 중등 교육에 있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교육의 진보는 대학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년 인구의 인적 자본을 개선하는 것도 절실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년 인구나 베이비 붐 세대가 대대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증가할 고령화 인구를 위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반드시 확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년 인구에 대한 많은 수의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서비스 또는 사회적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년 인구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재교육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탐색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형을 창조해 내야 합니다. 교육은 복지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학교 설비들과 인력들은 재교육 과정을 위해서도 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대한 시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만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적 대안들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교육, 노동 및 복지를 연결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입니다.

## Full Paper

###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and its Challenge in Korea

LEE Myoung-Ji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Few would dispute the fast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i.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re now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in Korean society. Thu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on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Of course, there is much controversy over the efficiency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set in place to solv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It is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tha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recently emphasized the quality of life in promoting fertility.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further pay attention to some of the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in order to explore its challenge. First,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s not an unprecedented case only evident in Korea. Rather, it is a phenomenon common in a country with a certain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what makes Korea outstrip others is the dramatic changing of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he society and individual to be flexible to such changes.

Second, it is well-known that there is no single decisive policy for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Making things more challenging, the same policies could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timing and circumstances. Naturally, the effect of applying the same policy to other countries is bound to change, too.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dividuals' decisions and actions regarding low fertility. To a certain extent, low fertility is the direct result of individuals' choices. It is not appropriate to conclusively presume Korean society have deteriorated in absolute sense. Rather, it would be more suiting to consider that the individual standard for evaluations of behavior has been raised and diversified. In many ways, modern Koreans are fast learners.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that Koreans have been quick to respond and act on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o the extent that government policy is hard to keep up with, while seeking a way to survive in their own wa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s one difficult factor to reverse in the old way. Then, what kind of social response would be needed?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make a good social environment for raising a child by supporting work-life balance in relation to low fertility in the basic direction. In addition, we need to think about creating policies for people who already exist in this society. To this end, education, labor and welfare need to be flexibly reconfigured, with organically linked links. Innovation is needed in the existing education sector. In the meantime, we have put all our efforts on one goal of college entrance exams and only demanded the

change and effort of the students. In the process, parents' sacrifice and private education growth were underway.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what kind of policy support you have given to providers, i.e., teachers. Perhaps we have presumed that the quality of teachers is constant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innovation is already under way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although it is not enough and controversial. It is also necessary to upgrade the human capital of the elderly population. At the very least, increasing the chances of social activities for the aging population is greatly needed, which will significantly increase with the retirement of the elderly and the baby boomer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forms of community service or social exchange opportunitie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jobs for the elderly population. According to WHO definition,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These effort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 healthy and active aged population.

In addition, the education system and welfare system must work together to maintain labor market flexibility. There is a need to create a kind of time and spac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through re-education of various generations. In other words,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to serve a role as a welfare system. Various existing school facilities and manpower will also be available in the process of re-education.

To sum up,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are important challenges for Korean society. It is not just Korean society that has

changed. Individuals are changing as well. Social alternatives to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s also need to be change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s can get various opportunities. It is time to link education, labor, and welfare to more organic relationship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 원문

### 젠더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 문제

최혜윌 University of Iowa 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의 헌법은 성별, 등급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평등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이를 사람들의 삶에 실천하게끔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평등권에 대한 법적인 언설과 그 평등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었다.

남녀평등은 현재까지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진보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여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되었다. 여성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참여도 확장되었다. 하지만, 사회나 기업 구조 내에서 여성의 발전을 막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가부장제 사상의 깊은 뿌리는 지금도 강력하다. 신디아 엔로(Cynthia Enloe)는 이런 현실을 “지속적인 가부장제”<sup>1)</sup> 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미투”운동, 여성혐오 증가 및 “여성비하라는 집단스포츠”<sup>2)</sup> 등의 일련의 현상들은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짧은 논평에서는 출산 및 저출산 문제를 역사적, 그리고 현대 젠더 정치(gender politics)의 맥락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격동의 19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근대 개혁을 이끈 지도자들은 유럽으로부터 전파된 남녀평등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여성의 동등한 신분과 대우가 선진 문명을 반영한다면, 여성 학대와 불평등은 그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1) Cynthia Enloe, *The Big Push: Exposing and Challenging the Persistence of Patriarc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17.

2) *Hankyoreh*, October 20, 2019.

받아들여졌다.<sup>3)</sup> 그들은 근대화된 민족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문명, 개화”라는 근대개혁 프로젝트에 몰입하였는데, 구체적인 개혁방안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여성 문제”(woman question)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교가 조선문명의 후진성을 대표한다고 믿는 지식인들은 유교사상에 내재된 성 규범과 관습을 철저히 비판하였다. 개혁가들과 독립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는 남녀평등사상을 기본 인권이라고 홍보하면서, 유교의 오류 중 하나인 부부유별, 그리고 내외법 등과 같은 관습을 문제삼았다. 근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은 여성이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자녀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여성을 위한 공교육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여성 문제” 담론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교육의 필요성이 여성 개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미래세대의 어머니로서의 기능 때문에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을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은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이어졌다. 예컨대 최저출산율이 국가위기라는 담론 중에는 여성의 생식능력과 국가 경제번영을 위한 튼튼한 노동자 공급의 필요성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저출산율이 장기간의 남녀 편견과 여성 학대, 여성을 위한 사회적, 법적 지원 부족 및 남녀평등 문제에 관한 정치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본다.

역사적으로 어머니가 주로 가정을 돌보는 일(집안 일)을 하는 반면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는 일(공적)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해왔고 (동시에 이는 지배적인 관습이었음)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렇게 지속되는 관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전통적 역할의 전환은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2016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했을 때다. 길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젊은 아버지들이 주중인데 대낮에 아이를

3) Hu Ying, *Tales of Translation: Composing the New Woman in China, 1899-1918*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2.



태운 유모차를 밀고 걸어가는 광경이었다.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 수가 어머니 수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 스웨덴은 가정 친화 순위가 높은 국가로 출산유급휴직(480일), 월별 육아수당(16세까지), 아픈 아이를 위해 낼 수 있는 육아 병가 및 기타 수당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여성들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남성들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허락한다(2019년 10월 1일 기준). 이런 불충분한 출산/육아 휴가마저도 사람들은 휴가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다. 남녀에 대한 지속적인 편견과 남성우월주의 문화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며 출산휴가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비평가인 로라 브릭스(Laura Briggs)는 최근 자신이 펴낸 책에서 모든 정치가 재생산 정치(reproductive politics)가 되었다고 한다.<sup>4)</sup> “재생산 노동”(reproductive labor)을 사적, 즉 공적 영역의 반대부분에 불과한 것이라 보는 전통적 접근법을 전환시켜, 브릭스는 재생산 노동이 모든 것, 즉 정치, 시장, 인종, 이민, 동성애자 결혼, 시민인권, 공중보건, 주택위기 및 여러 기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저출산율이 “위기”라면, 누구의 관점에서 위기인지를 물어야 하고, 이 위기의 원인을 정치나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 지향적, 젠더 중심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위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도록 요구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남녀평등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미래를 기획할 때,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여성에 대한 편견을 특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역사가 가르치듯이, 여성을 정치, 경제적 혁신을 위한 기계의 한 부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특유의 가치와 열망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Laura Briggs, *How All Politics Became Reproductive Politics: From Welfare Reform to Foreclosure to Trump*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 Full Paper

### Gender as a Critical Window on the Issue of Low Birth Rate

CHOI Hyaeweol

Profess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Iowa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1919) declared that all people are entitled to equality (*p'yŏngdŭng*) regardless of gender, status or class. However, it is one thing to declare the importance of equal rights, and it is quite another to put that declaration into practice in people's lives. There has always been a gap between the legal, discursive rhetoric of equal rights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make those rights real.

Gender equality has not been realized even today. To be sure, there has been progress. Education for women is uncontroversial, even expected.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as expanded. However, there are many barriers, both apparent and invisible, to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hierarchy of the corporate world and society in general. The deep currents of patriarchy remain strong. The sociologist Cynthia Enloe aptly captures that reality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patriarchy."<sup>1)</sup>

---

1) Cynthia Enloe, *The Big Push: Exposing and Challenging the Persistence of Patriarc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17.

The “Me Too” movement, growing misogyny and the “humiliation of women as a collective sport”<sup>2)</sup> only confirm how much progress still needs to be made for fully equitable gender relations.

In my short comment, I would like to take the longer historical view in order to get to the roots of contemporary gender politics, especially in terms of reproductive justice in South Korea.

In the turbulent nineteenth century, the leaders of modern reform in East Asia were deeply influenced by Euro-centric ideas of gender equality. The equal status and treatment of woman was thought to reflect a high level of civilization, while the maltreatment of women was taken as a sign of backwardness.<sup>3)</sup> They took up the so-called “woman question” seriously as part of their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project in pursuit of a modern nation-state. In particular, Confucian-prescribed gender norms and practices were put under scrutiny because some viewed Confucianism as a root cause of Korea’s backwardness. Reformers and the newly emerging print media, including *Tongnip sinmun* (*The Independent*), promoted the idea of gender equality as a basic human right and condemned the “doctrine of inferiority of women” embedded in Confucianism that normalized the separated (hierarchical) sphere with men in the public and women in the private (*pubu yubyŏl*). In the campaign to bring about a new moral order, the provision of formal education for women was justified mainly on the claim that better educated mothers would

---

2) Hankyoreh, October 20, 2019.

3) Hu Ying, *Tales of Translation: Composing the New Woman in China, 1899-1918*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2.

raise the next generation of citizens more effectively, rationally and scientifically. Here, the role women would play was reconfigured not necessarily for the sake of women's own individuality but rather for their function as mothers of the next generation of citizens of the nation.

This view of women as instrumental to the health of the family and the nation continues in twenty-first century South Korea. Some of the discourse on the national crisis of the record low-birth rate links women's reproductive capacity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eed for a supply of healthy, able-bodied workers for the nation's prosperity. In the view of many experts, the low birth rate has been caused by the long-standing gender bias and maltreatment of women, the absence of societal and legal support for women and the lack of a sufficient political commitment to gender issues.

Historically the prevailing view (as well as the prevailing practice) has been that mothers are the primary caregivers (domestic) and fathers are the breadwinners (public), and that view continues even today. Given this persistent view, the reversal of those traditional gender roles might seem difficult, maybe even unnatural. But let me relate an observation to you. I was in Stockholm for a conference in 2016, and the thing that was most striking to me was the sight of young fathers pushing baby strollers in the middle of the day during the week. In fact, my impression was that fathers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utnumbered mothers with children. Sweden ranks very high as a family-friendly country, providing very generous paid parental leave (480 days), a monthly allowance for children (until the child reaches

16 years of age), leave to stay home with sick children and other benefits. In comparison, in South Korea, women are granted 90-days for maternity leave while men are granted 10 days of paternity leave (as of October 1<sup>st</sup>, 2019). Even with this relatively meager provision of maternity/paternity leave, there is still the question of whether people actually take such leave. Due to continuing gender prejudice and male-centered corporate culture, many women say that they are unwilling to take maternity leave for fear of retribution.

In her recent book, the American feminist critic Laura Briggs argues that all politics have become reproductive politics.<sup>4)</sup> Rever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reproductive labor” as merely a matter of the private domain - the opposite side of the public (e.g. politics and economics)--Briggs argues reproductive labor is central to everything: politics, markets, race, immigration, gay marriage, civil rights, public health, housing crisis and many other issues. If the low birth rate is a “crisis,” we need to address from whose perspective it is a crisis, and what causes the crisis not just from a political and economic viewpoint but ethical, value-based,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a significant way, this crisis could be an opportunity. Opportunity demands facing uncomfortable truths. One such truth is that South Korea has done very poorly when it comes to the index of gender equity among OECD countries. The low birth rate in Korea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unfavorable societal conditions that women face. In thinking

---

4) Laura Briggs, *How All Politics Became Reproductive Politics: From Welfare Reform to Foreclosure to Trump*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about the futur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centuries-old bias against women. In addition, as history teaches us, it is crucial not to treat women as cogs in the big machine of political and economic renovations, but to think of them as human beings with her own individual virtues, desires, and commitments.





사회 - 조흥식 원장



발제 - 박경숙 교수



토론 - 박준식 교수





토론 - 이명진 교수



토론 - 최혜월 교수

## 대한민국 10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하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

퍼낸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퍼낸곳 한림원(주)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03171)

전화 02-2100-1435

팩스 02-2100-1446

비매품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끄는 **나라**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비매품